

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2025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전북지속협 로고

## 목 차

I.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3
소개 .....	5
주요 연혁 .....	7
II.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11
소개 .....	13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17
III. 시범지표 모니터링 결과 .....	23
IV. 함께한 사람들 .....	211
2025년도 활동 사진 .....	213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 Part

## I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개

주요 연혁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설치 배경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 국가 및 지방 정부에서 '의제21(Agenda 21)'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징적 운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실천하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2000년 6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창립했다.
-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00년 7월 28일에 '전북특별자치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창립했다.
- 그리고 2015년 유엔개발정상회의(UNGA)에서 '세계의 변혁: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 이에 2016년 정기총회에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4년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면,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4개 상임위원회(SDGs정책위원회, 사람위원회,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3개 실행위원회(전북시군협의회, 기후환경위원회, ESD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임실, 장수, 김제, 진안, 무주, 부안 10곳이며,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는 전주·군산·정읍·임실·장수·부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곳이다.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은 사업비를 받아 운영될 수 있게 준비 중임.

## 조직도



<그림 1>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도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연혁

- 1997년 : 전라북도 차원에서'전북환경21'작성 공포
- 2000년 :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전북환경21실천협의회 설치근거 명기'  
: '전라북도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정  
: 7월 28일,'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창립
- 2001년 : 전북의제21 총괄보고서'푸른약속 전북21'의제 보고서 발간  
: 제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 2002년 :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구성
- 2005년 :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
- 2007년 :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 전북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성  
: 전북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독립(2004~2006)
- 2009년 : 전북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 그린리더 양성 및 에코홈닥터를 통한 가정에너지 컨설팅
- 2011년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  
: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설립
- 2012년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VISION 2020' 선포식 및 보고서 발간  
: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독립(2009~2011)
- 2016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6 영·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 도민 참여형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원탁회의 주관
- 2017년 : 제13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 주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시범사업 컨설팅(2015~2017/10개소)
- 2018년 : 자원순환실천마을사업 컨설팅(2017~2018/12개소)
- 2019년 : 그린웨이환경축제 진행(2008~2019)  
: 아동청소년 차별사례 공모전 진행

-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컨설팅(2018~2019/20개소)
  - : 만경강 생물다양성 조사
- 2020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 :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20주년 포토북 발간
  - : 만경강 신천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주관
- 2021년 : 제23회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공동주관
- 2022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
- 2023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6개 지표)
  - :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진행(2019~2023 / 1회용 플라스틱 90만개 절감)
  - : 전라북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2012~현재/매년 4천여명 교육)
  - :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2009~현재 / 연 3천여 개소 에너지컨설팅)
  - :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진행(9개 공동체 참여)
  - : 전북RE100시민클럽 운영(2022~2023)
- 2024년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7개 지표)
  - :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진행(카페, 장례식장, 축제, 다중이용시설 등 1회용 플라스틱 약 242만개 절감)
  - :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진행(11개 공동체, 16개 출연·출자기관 탄소중립 실천 활동 참여)
  - : 와글와글 환경학교(2017~2024)
- 2025년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19개 지표)
  - : 전북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주관(2015~현재)
  - :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진행(카페, 장례식장, 축제, 다중이용시설 등 1회용 플라스틱 약 221만개 절감)
  -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사업 진행(5개 민간공동체, 15개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활동 참여) 공동체 지원(참여 18,294명, 실천활동 19,164건, 감축효과 25,150.58 kgCO<sub>2</sub>eq),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참여 3,083명, 실천활동 6,012건, 감축효과 15,328.21 kgCO<sub>2</sub>eq)
  - : 지역공동체 환경교육 거점 공간 '동그라미점빵' 운영(2022~현재)

## 주요 수상 내역

### 2011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 마을 단위 지속가능성 확보와 민관협력을 위한「전북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제21 내용으로 채택된 마을만들기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전북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과「전북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구축

### 2016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 에너지자립, 말이 씨가 되다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 '농촌·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의제 실천을 위해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주민 교육과 에너지자립으로 해결하여 농촌마을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선도적 모델 제시

### 2017년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 민·관·기업의 공동기획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린웨이환경축제」
  - 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 환경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환경이슈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시키고 환경보존을 위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한마당

###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국무총리상

- 제로플라스틱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 전 세계적 문제인 1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따른 거버넌스적 해결방안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해 공유컵(TURN블러)을 사용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모델을 구축하여 제로플라스틱 운동을 확산



#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중심으로 달성해야 하는 17가지 목표

# Part

## II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소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 Jeonbuk stat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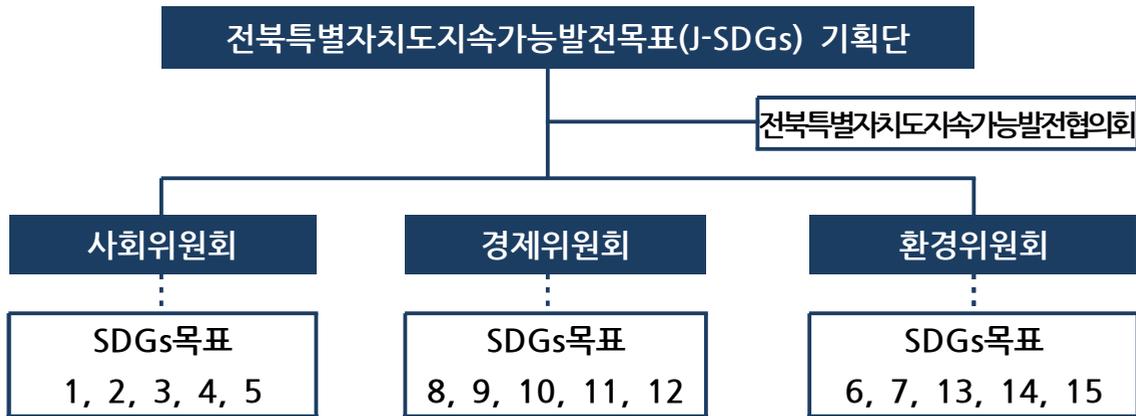
- 2018년 12월 24일, 환경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라 한다)를 수립했다. 이미 2015년 9월에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라 한다)를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별로 SDGs를 마련했다. 이같이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인 K-SDGs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2030년까지의 이정표로 설정한 것이다.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수립이 활성화되었다.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전북지속협'이라 한다)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이미 SDGs를 수립한 당진시와 경기도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 평가 등 수립 전 과정에 관해 공부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J-SDGs'라 한다)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 J-SDGs 수립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과의 사전 논의 후 2020년도 전북지속협 본 사업비로 예산을 마련하였다. 당초 계획으로는 20년도 초부터 J-SDGs 수립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시기를 20년도 6월로 늦췄고, 마침내 20년 6월 11일, J-SDGs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 통합워크숍을 시작으로 J-SDGs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 추진위원은 J-SDGs 수립의 큰 틀을 논의하는 기획단과 실질적 내용인 세부목표 및 지표를 논의하는 분야별(사람, 사회, 환경) 위원회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위원회가 다뤄야할 SDGs 목표는 사회위원회가 G1, 2, 3, 4, 5번을, 경제위원회는 G8, 9, 10, 11, 12번을, 환경위원회는 G6, 7, 13, 14, 15번을 논의했으며, G16, 17번은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여 모든 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뤘다.

-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SDGs 사례 분석과 국내·외적 SDGs 동향 분석, J-SDGs 수립 및 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J-SDGs 이행 평가 및 환류 프레임워크 개발 등 J-SDGs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J-SDGs 수립을 위한 논의가 뜨겁게 달궜다. 분야별 위원회 회의 뿐아니라 SDGs 목표별 논의를 위한 소모임도 만들어 J-SDGs 수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J-SDGs 수립을 위해 진행한 회의는 20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약 2년간 기획단 9회, 사람위원회 36회, 경제위원회 32회, 환경위원회 42회로 총 119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 그리고 대망의 2021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지속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간 환경부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과거의 위상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생기게 되었고, 지속법에 근거하여 SDGs 홍보 및 교육,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리매김할 명분이 생겼다.
- 지속법이 제정됨에 따라 J-SDGs 수립, 기본전략, 추진계획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되었고, 이에 맞춰 2022년 9월, 전북지속협에서 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로 정리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를 수립하였다.
- 또한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기존 환경복지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환경에 국한된 사업 및 목표설정이 아닌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 이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된 J-SDGs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매년 시범지표를 선정해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알아봤고, 이후 행정예 제안해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모니터링을 함께하고자 한다.

## 조직구성

- J-SDGs 기획단

- 구성 : 전북지속협 사무처, 도내 전문가, 3개 위원장 등
- 비전 설정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방법, 주체, 과정 방식 등 설정



〈표 1〉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기획단 조직구성

- 분야별 위원회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사회, 경제, 환경위원회를 전북지속협 위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 진행
- 3개 분야 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시범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진행



〈표 2〉 3개 위원회 논의 구조

- **사회위원회**
  - ① 빈곤층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②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 ③ 건강하고 행복한 삶                      ④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⑤ 성평등 보장
- **경제위원회**
  - ⑧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⑨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 ⑩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⑫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환경위원회**
  - ⑥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⑦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⑮ 육상생태계 보전

〈그림 2〉 위원회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 전북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
  - 타 지방자치단체 SDGs 사례 및 국내·외적 SDGs 동향 분석
  - J-SDGs 수립 및 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J-SDGs 이행 평가 및 환류 프레임워크 개발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수립
  - J-SDGs 기획단 및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초안 작성
- 의견수렴 및 협력기관 파트너십 구축
  - 사회, 경제, 환경 그룹별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을 J-SDGs 수립·이행을 위한 파트너 기관으로 등록, 협력체계 구축
  - 도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여(의견제출 및 검토)
  -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 행정 주무부서 검토 및 협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2025년 기준)

목표	번호	세부 목표	지표
SDGs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1	취약계층 빈곤 퇴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한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및 사람 수 ② 청년 빈곤층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수
	1.2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강화한다.	①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수 ② 연도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수
	1.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① 노인취업률 ② 6개월 이상 자활근로 유지 비율 (보조 : 자활참여자 탈수급자 수)
SDGs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1	농업생산 및 농업인구,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① 농생명산업지역(농업진흥지역) 면적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①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재배 면적 ②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조례 수
	2.3	농식품·생명산업, 디지털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① 농촌 6차산업 인증사업자 수
	2.4	농업의 후계인력과 주민공동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사회를 구축한다.	① 귀농 귀촌 인구수 ②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 수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	①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② 감염병 치료 전담 병상 확보율
			③ 중증 환자 전담 병상수
			④ 인구 대비 전문 의료인력 비율 (의사, 간호사 구분)
	3.2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정신건강 관리 공공의료기관 수 ② 심리 상담 기관 수
	3.3	여가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예산을 확충한다.	① 시·군별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시설 수
	3.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동권을 보장한다.	①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 비율 *고령자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3.5	도내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치매 지원체계를 제도화한다.	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	
3.6	기부와 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인구 대비 실제 자원봉사자 수 ② 자원봉사 1명당 연평균 활동 시간	
3.7	도민의 참여로 미래유산 발굴을 확대하고 생활예술 향유를 위한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① 시·군별 미래 유산보존위원회 설치 수	

목표	번호	세부 목표	지표
SDGs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1	취학전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 및 이용률
	4.2	전북도민에게 평생학습(자기 계발) 및 직업능력 계발 기회를 보장한다.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참여자 수 ② 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
	4.3	전북도민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① 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 사회적경제, 세계 시민교육 등)의 참여학교 및 교육 이수자 수
SDGs 5 성평등 보장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① 지역 성평등지수 ② 양성평등 교육 이수율
	5.2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②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건수
	5.3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조직 내 공평한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①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②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인 비율
	5.4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① 육아 휴직자의 남성 비율
SDGs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물 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하수도 보급률
	6.2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 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재고한다.	① 빗물 저장고 설치 용량 -보조 : 공단(유수지) 및 산단, 지붕 면적 대비 빗물 저장고 설치 비율 ② 비점오염 저류시설 확보 수(수량)
	6.3	물 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 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없는 수도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① 상수도 누수 신고 건수 ② 상수도 유수율
	6.4	수질오염 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 관리를 이행한다.	① 새만금호 수질 등급 (TOC기준) *(TOC=총 유기탄소량)/(비교군 : 만경강, 동진강)
	6.5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① 지자체 수질 보전 활동 예산 *(도 수질보전과 예산 기준)

목표	번호	세부 목표	지표
SDGs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 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①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
	7.2	국가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① 재생에너지 생산량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① 지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건수 ② 탄소포인트제 가구 수(가정)
	7.4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 수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중심
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1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경제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실현한다.	① 동부권 균형발전사업(농축산식품, 관광) 예산 규모 ② 비정규직 비율(%)
	8.2	지역 소득을 높이고,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① 1인당 GRI(지역총소득) ② 고용률
	8.3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① 청년 창업건수 및 폐업률(%) *폐업건수 등 ② 청년 고용률(시/도)
	8.4	공공적 가치의 지역 사업체를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① 공공구매의 지역업체구매 금액
	8.5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참여기업 수
SDGs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9.1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① 사회적 기업 수 ②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율 ③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 기업 수
	9.2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 보급을 확대한다.	① 청년 스마트팜 지원 금액 ② 스마트 농업 재배 면적
	9.3	친환경 첨단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공유 모빌리티 수
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0.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시설과 복지혜택을 확대한다.	① 저상버스 도입률(%) ②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률 ③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
	10.2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조성한다.	① 장애인 취업률(%)
	10.3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성별,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①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 ②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③ 사업체 여성 종사자 비율
	10.4	경력 단절 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① 경력 단절 여성 취업률 ② 생산연령인구(15~64세) 취업자 수

목표	번호	세부 목표	지표
SDGs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1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한다.	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11.2	인구절벽을 대비한 출생률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	① 가임기 여성 1명당 출산율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규모 ③ 신혼 보금자리 지원 예산
	11.3	생태도시 녹색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① 도시녹지율 ② 자전거 전용도로 증가율(거리(km) 기준)
	11.4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① 자연 재난 대비 훈련 건수 ② 자연 재난 취약지 점검 횟수 ③ 자연 재난 복구 장비 보유량 ④ 자연 및 사회 재난관리 전문인력 확보 수 ⑤ 자연 재난 경계경보 안내 시스템
	11.5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생활복지를 향상한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수(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수
SDGs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자원 재순환 및 친환경 제품 소비촉진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① 녹색제품 인증 전복기업 수 *환경표지·저탄소제품·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 ②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③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
	12.2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확대한다.	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건 수 및 부적합률(%) ② 지역농산물 출하 농업인 수 ③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실적
	12.3	소비자 및 생산자 권익을 위한 공정거래를 정착한다.	① 소비자 피해 발생 건수 ② CCM(소비자중심경영마크) 신규 인증 건수
SDGs 13 기후변화와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① 농·축·수산 자연재해(폭염, 폭우, 태풍, 폭설, 한 파 등) 보험 가입 지자체 지원액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정책 등에 반영 하도록 노력한다.	①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 (보조 : 일반 주유소 수)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① 기후변화 대응 교육 참여자 수 ② 전북에서 생산된 저탄소 인증마크 제품 수 (환경부 기준) ③ 전북에서 생산된 저탄소 농축산물 농가 수 (농식품부 기준)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 하도록 노력한다.	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목표	번호	세부 목표	지표
SDGs 14 해양생태계 보전	14.1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① 인공어초시설 금액 및 면적
	14.2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① (연간)불법 어업 지도일 수
	14.3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유지·확대한다.	① 해양보호구역 면적(km <sup>2</sup> ) ② 갯벌 면적
	14.4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① 전북 수산 종자 방류 금액 및 방류량 ② 수산물 생산량(매출액)
	14.5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행위를 지원한다.	① 수산공익직불금 수급률(%) ② 어구 지원 예산
SDGs 15 육상생태계 보전	15.1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① 자연보호구역 지정 비율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증가 면적(지정 건수) ② 임도 누적 개설 길이
	15.3	물, 홍수, 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사방(토사 등이 무너져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사업 시행 건수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	① 전북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15.5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① 밀렵 단속 수
	15.6	침입외래종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의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 생태계 교란 동·식물 제거 예산액(제거 회수, 면적)
	15.7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단절된 생태 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① 생태통로 누적 건수
SDGs. 16 평화 · 정의 · 포용	16.1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참여 인원수
	16.2	평등하고 기본적인 인권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① 인권 지수 개선도
	16.3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① 주민 참여 예산액 및 사업 수
	16.4	기부와 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인구 대비 실제 자원봉사자 수 ② 자원봉사 1명당 연평균 활동 시간
SDGs. 17 지구촌 협력 강화	17.1	지속가능발전 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①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현황
	17.2	지속가능한 목표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① 국내외 지방정부 등과 교류 수

〈표 3〉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J-SDGs)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약 2년에 걸쳐  
17개 목표, 81개 세부목표, 153개 지표를 만들었다

# Part

## III

시범지표 모니터링 결과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 시범지표 모니터링 현황

구분	지표명	'23년	'24년	'25년
사 회 위원회	1-3-1. 노인취업률			○
	2-2-2.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출하량(톤) *면적	○	○	○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
	4-1-1.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 및 이용률			○
	3-4-1.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		
	5-1-1. 지역 성평등지수	○	○	○
경 제 위원회	8-1-2. 비정규직 비율(%)		○	○
	8-3-1. 청년 창업건수 및 폐업률(%)	○	○	○
	9-1-1. 사회적기업 수			○
	9-1-2. 공공기업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율			○
	9-1-3.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기업 수			○
	12-1-1.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			○
	12-1-2.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
환 경 위원회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	○	○	○
	7-2-1. 재생에너지 생산량			○
	13-2-1.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			○
	13-4-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
	14-1-1. 인공어초시설 금액 및 면적			○
	14-4-1. 전북 수산 종자 방류 금액 및 방류량			○
	15-4-1. 전북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	○	○
합계		6	7	19

〈표 4〉 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현황(2023~2025)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SDGs 사회위원회

1-3-1. 노인취업률

2-2-1.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4-1-1.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 및 이용률

5-1-1. 지역 성평등지수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사회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1-3-1. 노인취업률(%)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지자체 차원의 '고령친화 정책' 확대 필요성이 큼),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취업·일자리)가 지역사회 포용성과 경제활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함.
-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지역화(J-SDGs)를 통해'아무도 소외되지 않는'지역경제·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흐름이 있어, 취약계층(노인 포함)의 안정적 경제활동 참여는 J-SDGs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적합함.
- 이 지표는 포용적 고용 목표의 정량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 정도와 사회참여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고, 정책효과 측정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함.
- 공공 일자리·재취업 교육·기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이 취업률 변화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내고, 지역사회·세대적 파급효과를 점검할 수 있음.
- 노인 고용은 가계소득·돌봄·지역 서비스 연계 등 다른 SDGs 분야에 영향을 주고,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의'사회적 약자 지원'목표를 정량·정책적으로 연결하는 합리적 핵심 성과 지표임.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3-1	노인취업률(%)

〈표 5〉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 성과
  - 전북은 2024년 50.7%로 두 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며, 전남과 함께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2022년 대비 2024년 변화 추이를 보면 충북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42.3% → 46.9%로 4.6%p 상승),
- 노인 일자리의 질의 한계
  - 노인 취업의 상당 부분이 단순노무, 농림어업 등 저숙련·저임금·비정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의 실질적인 소득 및 생활 안정성과 직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지속가능성 문제
  - 단기사업성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지속성이 떨어지며, 민간 시장과의 연계 부족, 성별·지역(농촌/도시) 간 격차, 단순 양적 확대만으로는 고령층의 소득·생활 안정성과 직결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해결 과제임.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지표체계 개선 필요
  - 단일 노인취업률(참여자 수)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지표(노인취업률)를 보완할 보조 지표(유지율·임금·직무적합성)의 다중 지표 체계를 도입해야 함.
- 일자리의 양보다 질의 전환
  - 공공·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협동조합) 연계를 통해 보건·돌봄, 지역관광 해설, 문화유산 관리, 마을 관리 등 고령자의 경험·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직무의 중간 숙련 일자리 창출
-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 단순 참여자 수뿐 아니라 '6개월 유지율·임금 수준·재교육 이수' 등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 기반 예산 인센티브 부여
  - 공공·민간 협력체(기업·사회적기업·NGO·복지시설 등) 간 지역 일자리 사회적 파트너십 연계 허브 설치 및 현장 모니터링 평가 강화

목 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 부 목 표	1-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표명	1-3-1 노인취업률(%)				
필요성 및 의 의	<p>-이 지표는 포용적 고용 목표의 정량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 정도와 사회참여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임.</p> <p>-정책효과 측정 가능성을 알수 있고, 공공 일자리·재취업교육·기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이 취업률 변화로 비교적 명확히 드러남.</p> <p>-고령층의 경제적 자립 정도와 사회참여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지역사회·세대적 파급효과 점검할 수 있음.</p>				
지 표	정의	<p>-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노인취업률은 분모를 65세 이상 인구로 한정하여 고령층의 고용 상태에 집중하여 분석)</p> <p>-65세 이상 인구 중 정부지자체 제공 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등) 참여자 비율</p>			
	산출 논리	<p>-통계청의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자료</p> <p>-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현황 기반 수치</p>			
	자료원 또는 출처	<p>-통계청의 행정구역(시도)/연령별경제활동인구</p> <p>-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현황</p>	산정 방법	연도별 확정 통계 및 행정자료 활용	
	작성 방법	-지정 연도의 만 65세 이상 인구수와 만 65세 이상 취업자 수 데이터를 공식 자료원에서 추출하여 취합 후 산식에 대입하여 백분율(%)로 산출함.			
	현황	-2024년 전북의 노인취업률은 50.7% 광역지자체 중 2번째로 높음			
	기준치	전북 50.7% 전국 평균 38.2	목표치	<p>-2030년까지 노인취업률을 매년 +0.5%p 향상 관리</p> <p>※보조지표 목표는 지속성을 고려하여 재설정이 필요함.</p>	
	자료 경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현황	지표 관리 부서	<p>-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p> <p>-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p>	

<표 6> '1-3-1 노인취업률(%)'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포용적 지역경제 수준의 척도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고령층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취업률이 '경제적 자립 정도'의 측정 지표이자 경제활동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
- 고령층의 취업은 개인의 소득 보장뿐 아니라 지역의 노동력 안정·사회적 생산성 유지와 연결되고, 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참여의 대표성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합함.

#### 나. 공공 일자리정책 및 지역 노동시장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 전북은 공공 일자리(노인 일자리 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수치에 직접 반영되고, J-SDGs 이행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함.

### (2) 지표의 정의

#### 가. 노인취업률

-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

#### 나.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율

- 65세 이상 인구 중 정부·지자체 제공 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등) 참여자 비율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통계청의 행정구역( 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현황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전국 및 17개 광역 시·도
- 제공시기 : 연간 통계 (2022년~2024년)
- 데이터 항목: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등 교차 분석 가능
- 핵심지표 설정 : 65세 이상 고용률(지역별), 연간 모니터링
- 보조지표 활용

(4) 지표산출 방법

가. 노인취업률

- '노인취업률'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노인취업률 비율 산식} = \text{65세 이상 취업자 수} \div \text{65세 이상 인구 수} \times 100$$

<표 7> 노인취업률 비율 산식

5. 지표분석 결과

(1) 노인취업률

- 전북은 2024년 50.7%로 두 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며, 전남과 함께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2022년 대비 2024년 변화 추이를 보면 충북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42.3% → 46.9%로 4.6%p 상승), 전북은 3년 동안 2.0%p 상승 (48.7% → 50.7%), 전남은 가장 높은 수준인 1.3%p 상승(53.5% → 54.8%), 강원은 2023년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에 소폭 하락하며 2년간 1.3%p 상승(44.5% → 45.8%)함.

(단위 : 천명, %)

지역	2022년			2023년			2024년		
	경제활동 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
전국	28,922	3,365	36.2	29,203	3,623	37.3	29,399	3,926	38.2
서울	5,295	449	26.6	5,319	477	27.5	5,393	523	28.7
부산	1,730	218	30.4	1,746	231	30.9	1,740	251	32.0
대구	1,265	129	29.2	1,286	145	30.7	1,258	161	32.2
인천	1,670	148	31.0	1,709	174	35.0	1,753	198	36.8
광주	772	75	32.2	789	87	35.6	799	100	38.3
대전	813	77	32.5	820	86	34.6	814	89	33.5
울산	584	52	31.1	592	59	32.8	594	65	34.0
세종	201	15	37.5	212	18	42.0	214	18	40.9
경기	7,809	671	33.3	7,860	717	33.6	7,938	791	34.5
강원	845	157	44.5	865	169	46.1	868	177	45.8
충북	949	133	42.3	961	148	44.8	972	163	46.9
충남	1,255	198	45.8	1,281	215	48.0	1,302	222	46.9
<b>전북</b>	<b>992</b>	<b>198</b>	<b>48.7</b>	<b>1,008</b>	<b>211</b>	<b>50.7</b>	<b>1,013</b>	<b>220</b>	<b>50.7</b>
전남	1,033	233	53.5	1,042	244	54.6	1,032	256	54.8
경북	1,499	291	47.5	1,051	313	50.0	1,500	332	51.3
경남	1,800	263	41.5	1,805	270	40.9	1,799	300	43.2
제주	410	58	51.0	409	57	48.0	410	61	49.1

<표 8>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2) 자치단체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 전북은 2023년 노인일자리 확정내시 사업량이 68,901명으로, 충남(42,497명)보다 약 2만 6천 명 이상 많고, 확정내시 대비 실적률이 105.3%로, 부여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보임.
- 2023년 자치단체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율(목표사업량 대비 추진실적 비율)은 평균 105.5%이며, 사업추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13.8%), 제주(111.0%), 인천(108.4%) 순으로 나타남.

(기준 : 2023.12.31, 단위 : 개, %, 명)

구분	2023년					2022년			전년대비 비율(%)		
	창출목표		창출실적			확정내시 사업량 (D)	추진 실적 (E)	누적 참여 인원 (F)	확정내시 사업량 (A/D) *100	추진 실적 (B/E) *100	누적 참여 인원 (C/F) *100
	확정내시 사업량 (A)	배정 사업량 <sup>1)</sup>	추진 실적 <sup>2)</sup> (B)	목표대비 추진율 (B/A) *100	누적 참여 인원 (C)						
총계	753,274 (100.0)	770,217	794,685	105.5	794,685	727,205	760,498	850,438	103.6	104.5	93.4
서울	75,830 (10.1)	76,893	77,970	102.8	77,970	76,135	77,701	88,043	99.6	100.3	88.6
부산	54,380 (7.2)	54,367	57,445	105.6	57,445	53,915	56,213	63,055	100.9	102.2	91.1
대구	29,929 (4.0)	30,016	30,769	102.8	30,769	29,760	30,522	34,155	100.6	100.8	90.1
인천	46,646 (6.2)	46,746	50,550	108.4	50,550	46,051	49,676	56,097	101.3	101.8	90.1
광주	27,910 (3.7)	28,265	29,512	105.7	29,512	28,240	31,525	34,625	98.8	93.6	85.2
대전	20,235 (2.7)	20,215	20,400	100.8	20,400	20,372	20,412	22,984	99.3	99.9	88.8
울산	13,843 (1.8)	13,843	14,437	104.3	14,437	13,529	13,853	15,432	102.3	104.2	93.6
세종	3,500 (0.5)	3,489	3,712	106.1	3,712	3,476	3,352	3,727	100.7	110.7	99.6
경기	96,567 (12.8)	105,422	109,911	113.8	109,911	93,751	99,301	112,316	103.0	110.7	97.9
강원	59,431 (7.9)	62,369	61,290	103.1	61,290	56,175	58,644	65,957	105.8	104.5	92.9
충북	33,750 (4.5)	33,853	34,654	102.7	34,654	31,798	33,408	37,594	106.1	103.7	92.2
충남	42,497 (5.6)	42,308	43,265	101.8	43,265	39,334	40,121	44,321	108.0	107.8	97.6
전북	68,901 (9.1)	69,477	72,543	105.3	72,543	65,442	69,380	75,882	105.3	104.6	95.6
전남	56,948 (7.6)	57,471	58,049	101.9	58,049	52,938	53,736	59,392	107.6	108.0	97.7
경북	55,634 (7.4)	57,597	59,564	107.1	59,564	51,813	55,956	62,481	107.4	106.4	95.3
경남	55,792 (7.4)	55,950	57,871	103.7	57,871	52,962	54,916	61,376	105.3	105.4	94.3
제주	11,481 (1.5)	11,936	12,743	111.0	12,743	11,514	11,782	13,001	99.7	108.2	98.0

<그림 3> 자치단체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창출목표 및 실적(시도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현황 참조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3년 동안 0.5%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2.9%)과 유사하고, 인구가 비슷한 지역(전남 0.9%, 충북 1.3%, 강원 2.0%)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노동력 투입의 경제 활력은 가장 더디게 증가하고 있음.
- 전북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유사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인접 지역(전남, 강원)에 비해서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전북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다른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규모를 가장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참여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시범지표 : 2024년 65세 이상 고용률 50%대 초반
- 목표치
  - 시범지표 : 2030년 65세 이상 고용률 매년 +0.5%p 향상 관리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중간 숙련 일자리 개발
  - 전북형 고령자 직무 특화 일자리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 해설사, 마을 관리 코디네이터, 치매 예방 전문 강사 등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직무(중간 숙련)를 개발하고, 최소 1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안정형 사업으로 전환
- 민간 고용 연계 강화
  -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민간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고령친화 기업 인증, 고용보조금(인건비 차등 지원), 세제 혜택, 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민간 취업의 문턱을 낮춤
- 교육과 일자리 연계
  -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통한 지역의 산업 수요(스마트 농업, 관광 서비스, 노인 돌봄)를 반영한 전문 직업 훈련을 의무화하고, 훈련 이수자를 해당 기업이나 공공 서비스에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프로그램 운영

○ ICT 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

- 고령자가 IoT 센서, 환경 모니터링 앱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마을 안전, 미세먼지 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 지자체와 통신사, ICT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신규 직무 수요를 창출

◆ 용어 정의

- 취업률(고용률) : 취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통계청 공식 용어인 고용률과 같은 의미
- 참여율 :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의미하며, 한 국가나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취업자) 일을 찾고 있는 사람(실업자)의 비율)
- 유지율 :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
- 확정내시 : 중앙정부(또는 상급 기관)가 특정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하급 기관에 최종적으로 정하여 할당한 사업 목표 물량 또는 예산 규모를 내부적으로 통보하는 행위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사회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2-2-1.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식량 및 농업 분야 목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반영함.
-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함.
- 본 지표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나 농가 수가 아닌 친환경 농축산물의 실제 유통 및 소비 활성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친환경 농업 정책이 단순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와 도민의 먹거리 안전 및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구성한다.	2-2-2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표 9〉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2020년 대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톤)은 약 24% 감소하며 생산 기반(농가 수, 면적)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 (2020년 35,485.90톤 → 2024년 26,991.72톤)
- 다만, 2024년 출하량은 26,991.72톤으로 전년(2023년 23,962.00톤) 대비

12.6% 증가하며 긍정적인 반등세를 보였음.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가 수와 재배 면적 감소에 대한 구조적 대응과 함께,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연계 등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를 위한 정책 강화가 시급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데이터 통합 및 정밀화
  - 농산물과 축산물 출하량을 통합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축산물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 지표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 보조지표 활용 강화
  - 인증 농가 수, 재배 면적 등 생산 기반 지표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여 출하량 변화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정책 연계성 제고
  - 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및 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함.

목 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 부 목 표	2-2. 친환경 농축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표명	2-2-2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필요성 및 의 의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을 파악함으로써 기후위기·먹거리 안전 등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농축산업 전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 유지보전 등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 표	정의	-‘친환경 농축산물’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의미함. (유통단계로 출하된 총량(톤))
	산출 논리	-전북 및 전국 단위로 집계된 유기·무농약 농산물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연간 출하량(톤)을 각각 합산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 지표값을 산출함. -필요시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을 보조지표로 분리 산출하여, 친환경농업과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해석할 수 있도록 함.

자료원 또는 출처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	산정 방법	환경 농축산물 출하량 (톤) =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톤)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출하량 (톤)
작성 방법	-자료원에서 확보한 전북 및 전국의 연도별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 을 엑셀 등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수치 활용		
현황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 26,991.72톤 (전년 대비 12.6%) 2024년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357,610.29톤 (전년 대비 6.5%)		
기준치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 26,991.72톤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357,610.29톤	목표치	-2030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 31,000톤 ※2020년 수준 회복보다는, 현 수 준에서 14.8%의 점진적 회복 및 안정화 목표 -2030년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400,000톤 ※기존의 급진적인 성장 대신, 현재 출하량을 관리하고 내실 강화에 집중함.
자료 경로	-통계청→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시 도/시/군/구)〈전년대비증감률〉 -통계청 → 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 증현황(시도/시/군/구)〈전년 대비 증감률〉	지표 관리 부서	-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인력개발원) - 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

〈표 10〉 '2-2-2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톤)'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친환경 농·축산업의 양적 성장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전북의 환경친화적 농업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및 소비 촉진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임.
  -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 유지보전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 지표의 정의

-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전환 수준 측정
- 화학비료·농약·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토양·수질·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친환경 농·축

산업이 지역 농업·축산업 구조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비중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 및 통계청 등을 통한 공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시도/시/군/구) <전년 대비 증감률>
- 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현황(시도/시/군/구) <전년 대비 증감률>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17개 광역지자체 시도(전북 포함)
- 조회기간 : 2020년~2024년
- 제공시기 : 매년 1회, 전년도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이 확정된 이후 공표되는 연간 통계 기준
- 제공기준 :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현황
-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친환경 농축산물 출하량} = \text{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출하량(톤)}$$

<표 11>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산식

#### 나.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text{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출하량(톤)}$$

<표 12>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 (1)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2024년 출하량은 26,991.72톤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며 긍정적인 반등을 기록함. 이는 비교 지자체 중 강원(+16.1%)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며, 충북(-17.0%)와 전남(-1.7%)가 부진했던 것과 대조적임.
- 이러한 장기적인 하락은 농가 수(-16.9%) 및 재배 면적(-12.6%)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함.

지역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률								
서울	건수(건)	76	0.0	62	-18.4	72	16.1	60	-16.7	68	13.3
	농가수(호)	76	0.0	62	-18.4	72	16.1	60	-16.7	68	13.3
	면적(ha)	21.94	-12.0	19.82	-9.7	18.77	-5.3	16.42	-12.5	14.91	-9.2
	출하량(톤)	445.79	-26.7	352.57	-20.9	380.38	7.9	352.94	-7.2	311.9	-11.6
부산	건수(건)	49	6.5	54	10.2	52	-3.7	53	1.9	62	17.0
	농가수(호)	86	8.9	84	-2.3	69	-17.9	68	-1.4	82	20.6
	면적(ha)	52.41	15.6	51.3	-2.1	40.26	-21.5	41.09	2.1	41.43	0.8
	출하량(톤)	707.37	-33.8	1,038.57	46.8	1,037.32	-0.1	808.24	-22.1	947	17.2
대구	건수(건)	120	6.2	116	-3.3	105	-9.5	142	35.2	136	-4.2
	농가수(호)	136	5.4	125	-8.1	114	-8.8	149	30.7	140	-6.0
	면적(ha)	53.32	-3.0	43.24	-18.9	37.04	-14.3	67.14	81.3	68	1.3
	출하량(톤)	1,428.32	3.9	1,750.27	22.5	1,861.29	6.3	2,723.67	46.3	2,103.26	-22.8
인천	건수(건)	239	-5.5	224	-6.3	237	5.8	233	-1.7	161	-30.9
	농가수(호)	246	-13.7	231	-6.1	244	5.6	240	-1.6	261	8.8
	면적(ha)	505.93	-9.3	493.31	-2.5	523.12	6.0	542.5	3.7	636.39	17.3
	출하량(톤)	3,584.78	-24.1	4,163.63	16.1	2,957.17	-29.0	3,409.23	15.3	3,658.44	7.3
광주	건수(건)	185	14.2	172	-7.0	173	0.6	209	20.8	208	-0.5
	농가수(호)	510	22.0	460	-9.8	436	-5.2	462	6.0	462	0.0
	면적(ha)	692.94	23.8	627.94	-9.4	493.02	-21.5	512.75	4.0	502.75	-2.0
	출하량(톤)	4,376.93	-7.2	4,584.22	4.7	3,586.82	-21.8	3,126.9	-12.8	2,517.92	-19.5
대전	건수(건)	55	34.1	67	21.8	68	1.5	55	-19.1	56	1.8
	농가수(호)	55	34.1	67	21.8	68	1.5	55	-19.1	56	1.8
	면적(ha)	13.86	15.4	18.95	36.7	17.29	-8.8	14.97	-13.4	16.99	13.5
	출하량(톤)	488.31	-16.3	958	96.2	902.96	-5.7	1,168.49	29.4	1,168.12	0.0
울산	건수(건)	73	69.8	100	37.0	98	-2.0	95	-3.1	99	4.2
	농가수(호)	130	83.1	146	12.3	144	-1.4	173	20.1	165	-4.6
	면적(ha)	78.92	49.8	85.97	8.9	92.01	7.0	102.88	11.8	95.49	-7.2
	출하량(톤)	590.86	-7.4	1,239.89	109.8	1,437.39	15.9	1,370.44	-4.7	1,117.03	-18.5

세종	건수(건)	69	0.0	73	5.8	66	-9.6	64	-3.0	64	0.0
	농가수(호)	102	-2.9	118	15.7	120	1.7	109	-9.2	115	5.5
	면적(ha)	125.33	-3.9	127.98	2.1	114.09	-10.9	110.99	-2.7	106.09	-4.4
	출하량(톤)	474.2	-45.3	782.54	65.0	636.06	-18.7	607.9	-4.4	688.28	13.2
경기	건수(건)	3,961	1.1	3,830	-3.3	3,648	-4.8	3,552	-2.6	3,565	0.4
	농가수(호)	5,331	-0.7	5,238	-1.7	4,835	-7.7	4,703	-2.7	4,737	0.7
	면적(ha)	5,480.87	0.8	5,365.97	-2.1	5,071.66	-5.5	5,239.47	3.3	5,334.48	1.8
	출하량(톤)	80,527.05	4.2	78,424.68	-2.6	74,981.49	-4.4	77,437.87	3.3	79,775.87	3.0
강원	건수(건)	2,207	5.5	2,162	-2.0	2,071	-4.2	1,965	-5.1	1,922	-2.2
	농가수(호)	2,466	3.2	2,378	-3.6	2,253	-5.3	2,146	-4.7	2,083	-2.9
	면적(ha)	3,675.18	0.2	3,651.7	-0.6	3,634.05	-0.5	3,579.4	-1.5	3,634.74	1.5
	출하량(톤)	18,007.9	-16.7	19,950.26	10.8	16,513.41	-17.2	16,642.68	0.8	18,930.72	13.7
충북	건수(건)	1,791	6.6	1,776	-0.8	1,785	0.5	1,718	-3.8	1,658	-3.5
	농가수(호)	3,148	2.4	3,167	0.6	3,143	-0.8	3,057	-2.7	2,957	-3.3
	면적(ha)	3,004.28	3.3	2,998.69	-0.2	2,942.45	-1.9	2,889.92	-1.8	2,894.85	0.2
	출하량(톤)	38,841.84	-11.3	48,769.1	25.6	35,622.36	-27.0	37,153.4	4.3	41,742.6	12.4
충남	건수(건)	2,129	14.5	2,159	1.4	2,102	-2.6	2,090	-0.6	2,082	-0.4
	농가수(호)	4,311	0.9	4,180	-3.0	3,986	-4.6	3,922	-1.6	3,755	-4.3
	면적(ha)	5,168.52	-0.7	4,858.68	-6.0	4,708.21	-3.1	4,864.62	3.3	4,553.91	-6.4
	출하량(톤)	39,855.04	-7.5	43,463.22	9.1	39,204.27	-9.8	39,600.96	1.0	32,877.98	-17.0
전북	건수(건)	<b>2,085</b>	<b>2.7</b>	<b>2,074</b>	<b>-0.5</b>	<b>2,031</b>	<b>-2.1</b>	<b>1,923</b>	<b>-5.3</b>	<b>1,901</b>	<b>-1.1</b>
	농가수(호)	<b>4,136</b>	<b>-1.3</b>	<b>3,980</b>	<b>-3.8</b>	<b>3,718</b>	<b>-6.6</b>	<b>3,571</b>	<b>-4.0</b>	<b>3,439</b>	<b>-3.7</b>
	면적(ha)	<b>5,632.74</b>	<b>-1.3</b>	<b>5,359.35</b>	<b>-4.9</b>	<b>5,209.74</b>	<b>-2.8</b>	<b>5,007.74</b>	<b>-3.9</b>	<b>4,921.66</b>	<b>-1.7</b>
	출하량(톤)	<b>35,485.9</b>	<b>3.8</b>	<b>34,036.44</b>	<b>-4.1</b>	<b>27,988.75</b>	<b>-17.8</b>	<b>23,962</b>	<b>-14.4</b>	<b>26,991.72</b>	<b>12.6</b>
전남	건수(건)	9,722	9.0	9,323	-4.1	9,038	-3.1	8,952	-1.0	8,981	0.3
	농가수(호)	27,950	2.2	24,927	-10.8	22,008	-11.7	21,633	-1.7	21,343	-1.3
	면적(ha)	45,928.03	-1.1	40,528.72	-11.8	36,281.93	-10.5	35,539.92	-2.0	34,293.93	-3.5
	출하량(톤)	117,194.35	-4.1	135,235.07	15.4	107,806.26	-20.3	109,527.03	1.6	99,423.23	-9.2
경북	건수(건)	2,539	5.4	2,425	-4.5	2,238	-7.7	2,227	-0.5	2,165	-2.8
	농가수(호)	4,125	0.6	3,935	-4.6	3,547	-9.9	3,511	-1.0	3,344	-4.8
	면적(ha)	3,816.9	2.5	3,681.08	-3.6	3,411.04	-7.3	3,464.27	1.6	3,571.09	3.1
	출하량(톤)	92,848.13	32.8	69,006.89	-25.7	63,771.32	-7.6	90,811.19	42.4	93,201.5	2.6
경남	건수(건)	2,006	7.8	2,050	2.2	2,098	2.3	2,074	-1.1	2,165	4.4
	농가수(호)	5,207	5.6	5,035	-3.3	4,784	-5.0	4,518	-5.6	4,565	1.0
	면적(ha)	5,364.35	8.0	5,296.18	-1.3	5,185.37	-2.1	5,073.9	-2.1	5,121.12	0.9
	출하량(톤)	41,523.01	6.4	46,323.05	11.6	43,900.21	-5.2	40,635.88	-7.4	43,965.05	8.2
제주	건수(건)	1,129	6.3	1,120	-0.8	1,113	-0.6	1,088	-2.2	1,044	-4.0
	농가수(호)	1,234	5.4	1,221	-1.1	1,181	-3.3	1,143	-3.2	1,096	-4.1
	면적(ha)	2,211.06	0.3	2,226.03	0.7	2,347.12	5.4	2,344.02	-0.1	2,357.69	0.6
	출하량(톤)	19,414.28	-32.1	27,304.33	40.6	24,193.22	-11.4	24,192.63	0.0	23,431.47	-3.1

〈표 13〉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시도/시/군/구) 〈전년 대비 증감률〉

(2)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 2024년 전북의 출하량은 2023년 대비 약 6.5% 증가에 그쳤고, 강원(+11.7%)과 충북(+4.1%)은 이 시기에 전북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함. 이는 전북의 친환경 축산 시장 확대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경쟁 지자체에 점차 시장 점유율을 내줄 위험이 있음.
- 전북은 2024년 기준 전국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의 32.51%를 차지하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들(전남 12.38%, 충북 9.28%, 강원 7.24%)을 크게 앞서는 국내 최대 친환경 축산물 생산 거점임을 확인함.

지역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률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률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률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률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률
서울	건수(건)	8	0.0	9	12.5	9	0.0	9	0.0	10	11.1
	농가수(호)	8	0.0	9	12.5	9	0.0	9	0.0	10	11.1
	출하량(톤)	3,105.07	7.2	4,245.83	36.7	4,543.73	7.0	4,476.95	-1.5	4,667.16	4.2
부산	건수(건)	-	-	-	-	1		1	0.0	1	0.0
	농가수(호)	-	-	-	-	1		1	0.0	1	0.0
	출하량(톤)	-	-	-	-	530		500	-5.7	530	6.0
대구	건수(건)	10	42.9	11	10.0	10	-9.1	18	80.0	24	33.3
	농가수(호)	10	42.9	11	10.0	10	-9.1	18	80.0	24	33.3
	출하량(톤)	1,593.8	656.3	1,325.9	-16.8	1,938.16	46.2	7,063.87	264.5	7,507.34	6.3
인천	건수(건)	15	7.1	11	-26.7	6	-45.5	8	33.3	9	12.5
	농가수(호)	15	7.1	11	-26.7	6	-45.5	8	33.3	9	12.5
	출하량(톤)	263.97	-69.4	204.25	-22.6	1,223.67	499.1	1,222.71	-0.1	652.06	-46.7
광주	건수(건)	5	0.0	5	0.0	6	20.0	6	0.0	6	0.0
	농가수(호)	5	0.0	5	0.0	6	20.0	6	0.0	6	0.0
	출하량(톤)	906.1	449.6	921.15	1.7	1,025.29	11.3	989.41	-3.5	1,160.77	17.3
대전	건수(건)	1	0.0	1	0.0	2	100.0	2	0.0	2	0.0
	농가수(호)	1	0.0	1	0.0	2	100.0	2	0.0	2	0.0
	출하량(톤)	3.8	-18.1	35	821.1	17.69	-49.5	42	137.4	69.4	65.2
울산	건수(건)	36	125.0	48	33.3	53	10.4	54	1.9	55	1.9
	농가수(호)	36	125.0	48	33.3	53	10.4	54	1.9	55	1.9
	출하량(톤)	3,956.4	352.4	907.2	-77.1	1,191.84	31.4	1,080.37	-9.4	3,340.04	209.2
세종	건수(건)	15	-11.8	18	20.0	17	-5.6	19	11.8	19	0.0
	농가수(호)	15	-11.8	18	20.0	17	-5.6	19	11.8	19	0.0
	출하량(톤)	11,317.3	80.5	8,680.52	-23.3	20,279.78	133.6	18,127.3	-10.6	18,688.65	3.1
경기	건수(건)	1,475	2.1	1,501	1.8	1,505	0.3	1,530	1.7	1,546	1.0
	농가수(호)	1,490	2.8	1,528	2.6	1,544	1.0	1,548	0.3	1,577	1.9

	출하량(톤)	197,123.53	7.8	192,606.65	-2.3	348,002.19	80.7	347,269.43	-0.2	368,999.1	6.3
강원	건수(건)	301	-3.5	362	20.3	425	17.4	478	12.5	500	4.6
	농가수(호)	301	-3.5	362	20.3	425	17.4	478	12.5	500	4.6
	출하량(톤)	35,959.37	-15.9	42,948.89	19.4	65,030.2	51.4	71,354.71	9.7	79,680.36	11.7
충북	건수(건)	339	-8.1	341	0.6	346	1.5	386	11.6	406	5.2
	농가수(호)	402	-7.6	403	0.2	406	0.7	442	8.9	454	2.7
	출하량(톤)	64,197.48	-9.0	70,300.07	9.5	97,533.69	38.7	98,085.13	0.6	102,108.81	4.1
충남	건수(건)	517	10.9	599	15.9	672	12.2	728	8.3	733	0.7
	농가수(호)	539	10.5	618	14.7	691	11.8	745	7.8	750	0.7
	출하량(톤)	115,462.08	13.6	125,203.39	8.4	210,942.68	68.5	264,558.26	25.4	265,148.3	0.2
전북	건수(건)	712	13.0	743	4.4	785	5.7	803	2.3	812	1.1
	농가수(호)	712	9.5	743	4.4	785	5.7	803	2.3	812	1.1
	출하량(톤)	245,826.87	48.1	239,771.23	-2.5	292,471.68	22.0	335,842.01	14.8	357,610.29	6.5
전남	건수(건)	1,559	4.1	1,613	3.5	1,685	4.5	1,841	9.3	1,945	5.6
	농가수(호)	1,601	2.1	1,688	5.4	1,761	4.3	1,917	8.9	2,030	5.9
	출하량(톤)	207,919.34	-2.8	234,964.4	13.0	294,237.8	25.2	332,920.25	13.1	368,641.85	10.7
경북	건수(건)	519	2.8	595	14.6	635	6.7	655	3.1	782	19.4
	농가수(호)	617	2.7	689	11.7	726	5.4	735	1.2	811	10.3
	출하량(톤)	136,980.74	13.2	144,541.58	5.5	201,769.33	39.6	215,973.3	7.0	223,982.32	3.7
경남	건수(건)	325	-3.6	358	10.2	381	6.4	382	0.3	406	6.3
	농가수(호)	506	-5.2	542	7.1	576	6.3	577	0.2	595	3.1
	출하량(톤)	64,813.17	1.8	74,351.4	14.7	105,311.59	41.6	107,061.34	1.7	124,099.15	15.9
제주	건수(건)	86	-2.3	84	-2.3	80	-4.8	90	12.5	89	-1.1
	농가수(호)	86	-2.3	84	-2.3	80	-4.8	90	12.5	89	-1.1
	출하량(톤)	27,580.42	-5.2	22,041.02	-20.1	28,192.54	27.9	29,523.5	4.7	27,834.61	-5.7

〈표 14〉 유기·무항생제축산물인증현황(시도/시/군/구) (전년 대비 증감률)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 전북은 농가 수 및 재배 면적 감소와 함께 출하량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하지만 2024년의 강력한 반등(+12.6%)은 고무적임.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수요를 창출하려는 정책적 개입이 성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장기 침체 폭이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생산 기반 회복 노력이 필요함.
- 전북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2020년 4,136호 → 2024년 3,439호 (약 16.9% 감소)

-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전북은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점유율 32.51%)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임. 다만, 강원, 충북 등 경쟁 지자체가 폭발적인 성장률로 추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가치의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 시급함.
  - 전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수는 2020년 712호 → 2024년 812호 (약 14.04% 증가)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 26,991.72톤
  - 2024년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357,610.29톤
- 목표치
  - 2030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 31,000톤  
※2020년 수준 회복보다는, 현 수준에서 14.8%의 점진적 회복 및 안정화 목표
  - 2030년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 : 400,000톤  
※기존의 급진적인 성장 대신, 현재 출하량을 관리하고 내실 강화에 집중함.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생산 기반 안정화 및 규모화 전략과 전문 농가 육성
  - 친환경 농가 인센티브 확대
  -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쌀 이외의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품목 집중 육성
  - 친환경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 촉진
- 친환경 축산 기반 강화 (유기·무항생제)
  - 무항생제 인증 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을 통한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
  - 친환경 축산물 전용 도축장, 가공 시설(HACCP 인증 필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상품화 과정을 개선하고 유통 경쟁력을 확보
- 유통망 다각화 및 소비 촉진 전략
  -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이 중요함.
- 공공 급식 의무화 및 선순환 체계구축

- 친환경 농축산물에 지역 공공 급식 의무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전용 식자재 공급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친환경 농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에서 소비처까지 일원화된 콜드체인(Cold Chain) 기반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
- 소비자 접근성 확대 및 마케팅 강화
  -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활성화
  -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강화
  - 도농 상생형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친환경 가치 소비 문화를 확산

◆ 용어 정의

- 친환경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공식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말함.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친환경 축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공식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함.
  - 유기 축산물 : 유기사료(유기농산물로 만든 사료)를 급여하고,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가축의 복지 및 자연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산한 축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며, 사육 기간 중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임. (단,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은 가능하며, 이 경우 출하 전 일정 기간 경과 등 기준을 지켜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사회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최근 전북 내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율이 감소 추세이고, 2023년 공공병상 비중이 9.4%에 그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함.
- 공공의료 인프라는 감염병 대응,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의료,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병상이 민간 중심으로 과도하게 치우친다면, 공공의료가 제공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전북은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세워 과잉 병상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계획은 단순히 병상의 절대 수만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병상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접근임.
- 지표로서 공공병상수 / 1,000명을 설정하면, 도민 의료 접근성, 공공의료 역량,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방향 설정, 정책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표 15〉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2024년 기준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9.4 병상 (목표치 대비 미달)
-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병상 수는 2022년 3,503개에서 2024년 3,260개로 243개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양적 축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기준, 전북의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은 9.7%로 전국 평균(9.4%) 보다는 소폭 높으나, 공공병상 수 자체가 2년간 감소 추세에 있어 공공의료 기반 약화 우려가 있음.
- 전북 내 전체 의료기관 201곳 중 공공기관은 12곳(약 6%)으로,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병상 확보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에 제약이 있음.
- 1,000명당 공공병상 수(1.86개)가 인구가 유사한 전남(2.58개) 및 강원(2.10개) 대비 현저히 낮아, 공공의료 접근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2027년 목표치(10.5 병상), 2030년 목표치(12.0 병상) 달성을 위해서는 병상수의 절대적인 확보와 더불어 인구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인 증설 정책이 시급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정확한 병상 데이터 정례 수집
  - 공공병원 병상수 변동을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지표의 신뢰도를 높임.
- 민간·공공 병상 구분 기준 명확화
  - 공공병상 정의(국공립·지방의료원·공공위탁 등)를 통일해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관리함.
- 인구 변화 반영한 산출 방식 개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별 인구감소 증가 추세를 적용해 실제 의료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계산함.
- 지역별 편차 분석 강화
  - 시군 간 공공병상 격차를 추가 지표로 관리하여 취약지역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함.
- 정책성과 연계 모니터링 체계구축
  - 병상 확보 계획, 공공병원 확충·개편 결과를 지표와 연계 분석해 정책 효과성을 점검함.

목 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 부 목 표	3-1. 선도적인 전북형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한다.			
지표명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필요성 및 의 의	<p>-공공의료 접근성의 핵심 지표로, 도민이 공공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함.</p> <p>-공공병상 부족 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p> <p>-전북특별자치도의 “병상 수급 관리 정책(공공병상 확충, 지역 균형 배치 등)”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됨.</p> <p>-도민 1,000명당 병상수는 타 시도와 비교 가능한 지표로서, 전북 공공의료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함.</p> <p>-감염병 유행, 재난 등 비상시기에 필요한 ‘공공의료 대응역량(수용능력)’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p>			
지 표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병상의 수를 의미함.		
	산출 논리	-전라북도 내 공공의료기관(국립립병원, 지방의료원, 시·군 공공병상 포함)이 보유한 공공병상의 총수를 도민 1,000명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원 또는 출처	-보건복지부(공공보건의료 통계, 의료기관 현황(병상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현황'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자료	산정 방법	$\text{전북 공공병상 총수} \div \text{전북 총인구} \times 1,000$ (측정 단위 : 병상/1,000명)
	작성 방법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능 수행), 보건소·보건의료원 병상 등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된 병상 포함		
	현황	-2024년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1.86(비중 9.7) ※2024년 의료기관 수 : 3,260개(3년간 -243 큰 폭으로 감소)		
	기준치	전북 1.86(비중 9.7) 전국 평균 1.17(비중 9.4)	목표치	2030년까지 2.00 달성 ※도민 1,000명당 2개의 공공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
	자료 경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지표 관리대장, 연차별 성과관리 보고서 -지자체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보고서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청 복지여성보건국(보건의료과) -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

<표 16> '3-1-1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도민이 공공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병상 자원의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지역 공공의료의 양적 역량을 직접적으로 보여줌.
- 나.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 보건 위기 대응력의 기반을 평가하는 지표로, 공공병상의 충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다. 취약계층·저소득층·의료취약지 주민 등 필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수준을 측정하여 공공의료 불균형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 (2) 지표의 정의

- 가. 민간 의료 중심 구조에서 공공의료의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의 유지·강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함.
- 나. 전북형 공공의료 정책(병상 확충, 공공병원 기능 강화, 지역 책임 의료 체계구축 등)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근거 지표임.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KOSIS(통계청)'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현황'(국립중앙의료원 자료 기반)
  - 통계청 인구 추계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기준연도 : 2022년, 2023년, 2024년 연도말 기준의 최신 3개년 자료 활용
  - 지역구분 : 전국 및 전북 유사 지역(전남, 충북, 강원) 비교 분석
  - 제공시기 : 연도말 기준
  - 제공기준 :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전체 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시도별 인구수
  - 지표유형 : 공공보건의료 접근성, 인프라 현황, 병상 규모 관련 통계
  - 모니터링 주기 : 정기적(연 1회), 정책 필요시 분기별 확인

##### (4) 지표산출 방법

- 가.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산식} = \text{전북 공공병상 총수} \div \text{전북 총인구} \times 1,000$$

<표 17>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비율 산식

나.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

-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전북 공공병상 비중 산식} = \text{전북 공공병상 총수} \div \text{전북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 \times 100\%$$

<표 18> 전북 공공병상 비중 비율 산식

5. 지표분석 결과

(1) 공공병상 비율 하락 추세

- 전북의 공공병상 수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때(-230개)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서 2024년은 -13개로 감소 폭이 현저히 둔화된 모습을 보였음.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 변화와 소외지역 도민들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노력이 타 시도 대비 더 절실함을 시사함.

(단위 : 개소)

지역	2022년 공공병상	2023년 공공병상	2024년 공공병상	2022년 대비 2024년 증감
전국	63,129	61,650	60,557	-2,572
서울	8,749	8,609	8,383	-366
부산	3,585	3,578	3,649	+64
대구	3,825	3,747	3,674	-151
인천	1,361	1,373	1,330	-31
광주	2,837	2,589	2,545	-292
대전	2,956	3,016	2,928	-28
울산	148	149	149	+1
세종	451	408	408	-43
경기	9,014	8,847	8,582	-432
강원	3,336	3,172	3,211	-125
충북	2,875	2,854	2,753	-122
충남	3,301	3,164	3,112	-189
<b>전북</b>	<b>3,503</b>	<b>3,273</b>	<b>3,260</b>	<b>-243</b>
전남	4,746	4,724	4,685	-61
경북	4,716	4,578	4,598	-118
경남	6,243	6,101	5,917	-326
제주	1,483	1,468	1,373	-110

<표 19> 2022년~2024년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2) 공공의료기관 수의 상대적 저조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의료기관은 2024년 기준 193개 중 공공의료기관은 12곳으로, 약 6%이고, 병상수는 3,260개로 9.7%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수가 적은 것은 병상수 확보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전북 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2022년 9.8%, 2023년 9.4%, 2024년에는 9.7%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 이는 민간 병상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단위 : 개소, %)

지역	2022년				2023년				2024년					
	의료기관 수		병상수		의료기관 수		병상수		의료기관 수		병상수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년 대비 증률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년 대비 증률
전국	4245	222 (5.2)	662462	63129 (9.5)	4227	220 (5.2)	651654	61650 (9.5)	4221	223 (5.3)	1.9	647,418	60,557 (9.4)	-1.1
서울	565	24 (4.2)	81,568	8,749 (10.7)	553	23 (4.2)	79,708	8,609 (10.8)	549	23 (4.2)	0.0	78,312	8,383 (10.7)	-0.9
부산	404	9 (2.2)	65,685	3,585 (5.5)	408	9 (2.2)	65,853	3,578 (5.4)	405	10 (2.5)	13.6	66,130	3,649 (5.5)	1.9
대구	230	9 (3.9)	37,836	3,825 (10.1)	228	9 (3.9)	37,494	3,747 (10.0)	231	9 (3.9)	0.0	38,021	3,674 (9.7)	-3.0
인천	222	8 (3.6)	32,613	1,361 (4.2)	217	8 (3.7)	31,870	1,373 (4.3)	220	8 (3.6)	-2.7	32,353	1,330 (4.1)	-4.7
광주	277	9 (3.2)	36,893	2,837 (7.7)	276	8 (2.9)	37,083	2,589 (7.0)	272	8 (2.9)	0.0	36,352	2,545 (7.0)	0.0
대전	131	7 (5.3)	21,073	2,956 (14.0)	134	8 (6.0)	20,332	3,016 (14.8)	133	8 (6.0)	0.0	19,975	2,928 (14.7)	-0.7
울산	97	1 (1.0)	14,161	148 (1.0)	98	1 (1.0)	14,675	149 (1.0)	93	1 (1.1)	10.0	14,168	149 (1.1)	10.0
세종	13	1 (7.7)	1,668	451 (27.0)	15	1 (6.7)	1,724	408 (23.7)	14	1 (7.1)	6.0	1,673	408 (24.4)	3.0
경기	891	30 (3.4)	129,077	9,014 (7.0)	891	30 (3.4)	129,949	8,847 (7.0)	901	30 (3.3)	-2.9	126,680	8,582 (6.8)	-2.9
강원	101	18 (17.8)	15,326	3,336 (21.8)	101	18 (17.8)	14,809	3,172 (21.4)	103	19 (18.4)	3.4	14,677	3,211 (21.9)	2.3
충북	116	11 (9.5)	18,963	2,875 (15.2)	113	11 (9.7)	18,569	2,854 (15.4)	115	11 (9.6)	-1.0	18,631	2,753 (14.8)	-3.9
충남	167	10 (6.0)	26,002	3,301 (12.7)	168	10 (6.0)	25,487	3,164 (12.4)	172	10 (5.8)	-3.3	25,231	3,112 (12.3)	-0.8
전북	204	12 (5.9)	35,676	3,503 (9.8)	201	12 (6.0)	34,815	3,273 (9.4)	193	12 (6.2)	3.3	33,697	3,260 (9.7)	3.2
전남	223	22 (9.9)	39,106	4,746 (12.1)	223	22 (9.9)	38,217	4,724 (12.4)	225	22 (9.8)	-1.0	38,735	4,685 (12.1)	-2.4
경북	226	25 (11.1)	41,115	4,716 (11.5)	225	24 (10.7)	40,138	4,578 (11.4)	220	24 (10.9)	1.9	39,500	4,598 (11.6)	1.8
경남	350	21 (6.0)	60,818	6,243 (10.3)	347	21 (6.1)	59,083	6,101 (10.3)	347	22 (6.3)	3.3	58,613	5,917 (10.1)	-1.9
제주	28	5 (17.9)	4,882	1,483 (30.4)	29	5 (17.2)	4,848	1,468 (30.3)	28	5 (17.9)	4.1	4,670	1,373 (29.4)	-3.0

<표 20> 2022년~2024년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중

(3) 도내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규모

- 전북은 1,000명당 1.86개로 전남(2.58개)과 강원(2.10개)보다는 낮아 인구 대비 공공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충북(1.69개)보다는 높은 수준임.
- 공공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이 지표에서 전북(1.86개)은 인구가 비슷한 지역 중 최하위권(충북 다음)이며, 전남(2.58개) 및 강원(2.10개) 대비 공공의료 인프라가 미흡함을 보여줌.
- 전북의 공공병상 비중은 9.7%로, 전국 평균(9.4%)과 유사한 수준임. 인구가 비슷한 전남(10.4%)이 가장 높고, 공공의료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가장 큼. 강원(9.7%)은 전북과 동일, 충북(8.8%)은 전국 평균 및 비교 지역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며, 민간 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음.

구분	인구 (천명)	공공병상수 (개)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중 (%)	1,000명당 공공병상수(개)	순위(1,000명당 병상수 기준)
전국	51,713	60,561	9.40%	1.17	-
서울	9,400	8,383	10.70%	0.89	15위
부산	3,300	3,649	5.50%	1.11	13위
대구	2,360	3,674	9.70%	1.56	12위
인천	3,010	1,330	4.10%	0.44	17위
광주	1,420	2,545	8.80%	1.79	10위
대전	1,440	2,928	9.60%	2.03	5위
울산	1,100	149	3.50%	0.14	18위
세종	380	408	13.90%	1.07	14위
경기	13,600	8,582	8.00%	0.63	16위
강원	1,530	3,211	9.70%	2.10	3위
충북	1,632	2,757	8.80%	1.69	11위
충남	2,130	3,112	7.90%	1.46	13위
<b>전북</b>	<b>1,756</b>	<b>3,260</b>	<b>9.70%</b>	<b>1.86</b>	<b>8위</b>
전남	1,817	4,685	10.40%	2.58	1위
경북	2,610	4,598	9.30%	1.76	9위
경상	3,280	5,917	9.10%	1.80	8위
제주	670	1,373	11.50%	2.05	4위

<표 21> 2024년 시도별 1,000명당 공공병상 수

#### (4) 공공병상 확보 정책 시도는 있으나 실효성 과제

- 전북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급격히 감소(-230개)한 후, 2023년에서 2024년에는 감소 폭이 현저히 둔화(-13개) 되었음. 이는 병상 구조조정 또는 정리 과정이 2023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일시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전북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등 공공병상 추가 확보 정책을 추진 중이나, 병상 비율 하락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단순 병상 추가만으로는 균형 잡힌 공공의료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은 1,000명당 병상수(1.86개) 면에서 양호하지만, 가장 우수한 전남(2.58개)에 비해서는 격차가 큼.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0명당 2개 이상의 병상 확보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전북은 공공병상 비중(9.7%)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전 분석에서 확인된 최근 3개년간의 급격한 병상수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9.7%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병원 및 시설 투자와 운영 안정화가 중요함.
- 공공병상의 절대 수보다는 '공공병상 비율(%)'을 안정화거나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민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확대, 병상 증설, 병상 가동을 최적화 등의 복합 정책이 요구됨. 지표로서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함.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 기준치

- 전북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2024년) : 1.86개

#### ○ 목표치

- 전북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2030년) : 2.00개
- 2024년 현재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강원특별자치도(2.10개)의 수준과 유사한 목표치 설정
- 2030년까지 최소한 도민 1,000명당 2개의 공공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임계점을 확보하는 보수적 목표치 설정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공공병상 확충 행정 정책
  - 신규 공공병원 건립 및 기존 공공병원 증축 추진
  -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예산 우선 배정
- 민관협력 기반 병상 운영 사업
  - 민간병원과 공공병상 공동 운영 협약 체결, 일정 병상 공공용으로 전환
  - 민간·공공 병상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긴급 의료 대응 강화
-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연계
  - 시군 단위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병상 수급 정보 실시간 공유
  - 취약계층·재난·감염병 대응용 병상 우선 배정 정책 마련
  -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의 연계 프로그램 강화
-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 정착 지원
  - 지역 의료 인력 풀 관리 및 유휴 병상 활용 효율화
-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 도민 1,000명당 공공병상 수 지표 정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병상수, 가동률, 이용률 등 지표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 주민 체감형 지표 공개 및 피드백 반영으로 투명성 확보

### ◆ 용어 정의

- 공공병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병상을 의미함.
-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보건지소 등 1차 보건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기관으로 정의되며, 이 기관들이 가진 병상이 곧 공공병상으로 집계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종류
  - 국가 및 지자체 설립 기관 :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기관
  - 공공단체 설립 기관(특수법인 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
  - 기타 공공단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병원 등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사회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4-1-1.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 및 이용률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UN-SDGs 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및 J-SDGs 세부목표 4-1 (취학 전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이행 여부를 점검함.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을 통해 보육 및 교육 환경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표준화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함.
- 공공 보육/교육 시설 확대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
-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연도별 국공립 시설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수요 대비 공급 및 이용률의 적절성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공공 보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궁극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을 통해 보육 및 교육 환경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표준화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1 취학 전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 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4-1-1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 및 이용률

〈표 22〉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이 전국 및 비교 지자체 대비 현저히 낮음.
  - 2024년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은 16.85%로, 전국 평균(23.81%) 대비 약 7%p 낮은 수준이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전남(23.27%)에 비해 크게 열악함.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저조하며 정체 상태
  -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정원 대비 재원율)은 75.7%로, 전국 평균(78.2%) 및 비교 지자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시설의 실제 활용도와 선호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공립유치원 수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비교 지자체 대비 격차 존재
  - 2025년 공립 유치원 비율은 75.2%로 전국 평균(62.3%)보다 높지만, 전남(82.9%)이나 충남(77.6%) 등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는 공립화 수준이 낮은 편임.
-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양호
  - 2024년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87.9%로 전국 평균(81.4%)보다 높으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역 학부모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시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원아 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목표 상향 및 집중 투자
  - 목표치를 2030년까지 최소 25%로 설정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사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 병행
  - 단순히 시설 수만 늘리는 것을 넘어, 노후시설 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도입, 우수 보육 교직원 확보 등을 통해 공공시설의 질을 높여 정원 대비 재원율을 높여야 함.
- 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립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 관리
  - 향후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 정책 방향에 맞춰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인 공공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함.

<b>목 표</b>	<b>4.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수 및 이용률</b>			
<b>세 부 목 표</b>	4-1. 취학 전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b>지표명</b>	4-1-1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수 및 이용률			
<b>필요성 및 의 의</b>	-국공립 어린이집 수, 공립 유치원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정원 대비 재원율), 공립 유치원 이용률(취원율)을 통해 보육 및 교육환경의 공공성 수준을 측정하고,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지표임.			
<b>지 표</b>	<b>정의</b>	-국공립 어린이집 수, 공립 유치원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정원 대비 재원율), 공립 유치원 이용률(취원율)을 조사하여 지자체가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		
	<b>산출 논리</b>	-공공 보육/교육 시설의 양적 공급 수준(시설 수 비율)과 실질적인 활용 효율성(이용률)을 모두 측정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b>자료원 또는 출처</b>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유치원 개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치원 취원률(시도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22년~2024년), 교육부 유치원 통계 연보/공시자료(2022년~2024년)	산정 방법	통계자료에 기반한 수치 반영 (산식은 아래 별도 표 참고)
	<b>작성 방법</b>	-연도별, 시도별(전국 및 비교 지자체 포함), 설립 유형별(국공립/공립, 사립 등) 시설 수, 정원, 현원(재원 아동 수)을 정리하고, 산식에 따라 비율 및 이용률을 산출하여 지표 추이를 분석함.		
	<b>현황</b>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16.85%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75.7% -2025년 공립 유치원 비율 75.1% -2024년 공립 유치원 취원율 87.9%		
	<b>기준치</b>	-전북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16.85%(전국 23.81%)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75.7%(전국 78.2%) -2025년 공립 유치원 비율 75.1%(전국 62.3%) -2024년 공립 유치원 취원율 87.9% (전국 81.4%)	목표치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25% 달성 (전국 평균 상회 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80% 달성 (전국 평균 이상 회복 목표) -공립 유치원 비율 80% 이상 유지 (비교 지자체 수준 목표) -공립 유치원 취원율 90% 이상 달성 (공립 선호도 지속 반영)
	<b>자료 경로</b>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부 자료 제공 및 공공 통계 포털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치부 -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

〈표 23〉 '4-1-1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수 및 이용률'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 및 비율

- 지자체 내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육 환경의 공공성 수준을 나타냄. 높을수록 보육의 공적 책임 이행 정도가 높다고 평가됨.

#### 나. 공립 유치원 수 및 비율

- 지자체 내 전체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취학 전 교육의 공공성 수준을 나타냄. 높을수록 유아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 및 교육의 질 확보에 유리함.

#### 다. 이용률(정원 대비 자원율/취원율)

-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실제 자원 아동 비율, 공립 유치원 정원 대비 실제 취원 아동 비율로, 공공시설의 실제 활용도 및 선호도를 나타냄. 100%에 가까울수록 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절하거나 수요가 높음을 의미함

### (2) 지표의 정의

- 이 지표는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교육환경의 공공성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됨.
- 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 보육/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통계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2022~2024)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20년~2024년) : 연도별, 시도별,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수, 정원, 현원 현황
- 교육부 유치원 통계 연보/공시 자료(2020년~2024년) : 연도별, 시도별, 설립 유형별 유치원 수, 원아 수 현황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별
- 제공시기 :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 (연도별)
- 제공기준 : 설립유형(국공립/공립, 사립, 법인 등), 정원(인가), 현원(자원 아동)
- 연령구분 : 어린이집(만 0~5세), 유치원(만 3~5세)

#### (4) 지표산출 방법

##### 가.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산식} = (\text{국공립 어린이집 수} \div \text{어린이집 전체 수}) \times 100$$

<표 24>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산식

##### 나. 국공립 유치원 비율

-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국공립 유치원 비율 산식} = (\text{국공립 유치원 수} \div \text{유치원 전체 수}) \times 100$$

<표 25> 공립 유치원 비율 산식

##### 다. 이용률(정원 대비 재원율)

- '이용률(정원 대비 재원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이용률(정원 대비 재원율)} = (\text{실제 재원 아동 수} \div \text{정원 수}) \times 100$$

<표 26> 이용률(정원 대비 재원율)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 (1) 전북특별자치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 및 비중

- 2024년 기준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은 16.85%로 전국 평균(23.81%) 대비 약 7%p 낮음. 비교 지자체인 충남(17.86%), 경남(19.62%), 전남(23.27%)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공공 보육 인프라가 취약함.

(단위 :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공립 어린이집	계	국·공립 어린이집	계	국·공립 어린이집
계	30,923	5,801	28,954	6,187	27,387	6,521

서울	4,712	1,829	4,431	1,836	4,212	1,855
부산	1,547	305	1,447	319	1,354	333
대구	1,139	246	1,079	284	1,035	321
인천	1,697	291	1,652	340	1,613	369
광주	940	140	878	159	828	167
대전	1,013	110	916	123	864	150
울산	656	96	612	102	569	105
세종	327	122	314	134	305	146
경기	9,438	1,326	8,903	1,463	8,407	1,558
강원	906	153	847	158	816	163
충북	972	133	921	142	877	151
충남	1,516	179	1,421	212	1,338	239
<b>전북</b>	<b>1,024</b>	<b>126</b>	<b>944</b>	<b>137</b>	<b>902</b>	<b>152</b>
전남	999	195	952	209	911	212
경북	1,463	199	1,310	199	1,234	217
경남	2,123	307	1,904	325	1,723	338
제주	451	44	423	45	399	45

<표 27> 2022년~2024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지역별)

(단위 : 개)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계	27,387	6,521	1,171	507	8,181	9,586	116	1,305
서울	4,212	1,855	17	68	809	1,138	22	303
부산	1,354	333	69	22	459	404	8	59
대구	1,035	321	104	12	321	229	3	45
인천	1,613	369	11	10	491	649	2	81
광주	828	167	79	17	255	281	1	28
대전	864	150	36	7	181	422	6	62
울산	569	105	13	5	241	164	3	38
세종	305	146	9	3	53	75	0	19
경기	8,407	1,558	53	75	2,646	3,710	61	304
강원	816	163	92	28	240	236	2	55
충북	877	151	103	24	302	253	2	42
충남	1,338	239	104	37	393	509	1	55
전북	902	152	117	64	279	257	0	33
전남	911	212	148	40	259	211	2	39
경북	1,234	217	69	31	489	370	1	57
경남	1,723	338	78	27	609	608	2	61
제주	399	45	69	37	154	70	0	24

<표 28> 2024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현황(설치유형별)

(2) 전북특별자치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 2024년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75.7%로, 전국 평균(78.2%) 및 충남(77.6%) 대비 낮음. 2023년(77.3%)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어, 공공시설의 질적 만족도 및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타 광역보다 확연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공립 어린이집	계	국공립 어린이집	계	국공립 어린이집
계	정원	1,476,686	343,104	1,401,440	359,817	1,340,087	374,641
	현원	1,095,450	276,670	1,011,813	286,487	941,303	293,049
	이용률	74.2	80.6	72.2	79.6	70.2	78.2
서울	정원	223,628	103,678	211,248	102,578	202,722	103,212
	현원	167,427	81,969	155,251	79,939	143,413	77,404
	이용률	<b>74.9</b>	<b>79.1</b>	73.5	77.9	70.7	75.0
부산	정원	76,146	18,951	71,570	19,303	66,235	19,705
	현원	55,850	14,632	50,891	15,019	46,589	15,370
	이용률	<b>73.3</b>	<b>77.2</b>	71.1	77.8	70.3	78.0
대구	정원	59,434	12,443	56,462	13,937	53,946	15,148
	현원	42,487	10,511	39,159	11,690	36,176	12,714
	이용률	<b>71.5</b>	<b>84.5</b>	69.4	83.9	67.1	83.9
인천	정원	80,896	16,470	78,883	18,562	76,831	19,778
	현원	62,200	13,124	60,032	15,012	57,610	16,101
	이용률	<b>76.9</b>	<b>79.7</b>	76.1	80.9	75.0	81.4
광주	정원	46,531	7,424	43,399	8,084	41,021	8,362
	현원	31,732	5,885	28,761	6,489	26,584	6,819
	이용률	<b>68.2</b>	<b>79.3</b>	66.3	80.3	64.8	81.5
대전	정원	39,145	5,869	36,356	6,441	34,983	7,372
	현원	28,144	4,863	25,996	5,265	24,602	6,016
	이용률	<b>71.9</b>	<b>82.9</b>	71.5	81.7	70.3	81.6
울산	정원	31,746	5,025	29,785	5,309	27,615	5,166

	현원	24,892	4,461	22,469	4,509	20,186	4,420
	이용률	<b>78.4</b>	<b>88.8</b>	75.4	84.9	73.1	85.6
세종	정원	18,789	6,059	18,642	6,524	18,357	7,008
	현원	14,927	5,378	14,131	5,613	13,192	5,736
	이용률	<b>79.4</b>	<b>88.8</b>	75.8	86.0	71.9	81.8
경기	정원	424,321	88,508	411,580	96,880	397,632	102,929
	현원	331,516	75,054	311,814	80,091	295,983	84,282
	이용률	<b>78.1</b>	<b>84.8</b>	75.8	82.7	74.4	81.9
강원	정원	45,475	9,500	42,858	9,658	41,213	9,972
	현원	32,680	7,421	30,217	7,619	28,058	7,488
	이용률	71.9	78.1	70.5	78.9	68.1	75.1
충북	정원	54,338	8,678	51,963	8,992	50,014	9,415
	현원	38,884	6,790	35,806	7,100	33,171	7,354
	이용률	71.6	78.2	68.9	79.0	66.3	78.1
충남	정원	72,870	9,495	69,849	11,253	67,154	12,450
	현원	52,196	7,343	48,797	8,714	45,204	9,667
	이용률	71.6	77.3	69.9	77.4	67.3	77.6
전북	정원	<b>51,748</b>	<b>7,866</b>	<b>47,774</b>	<b>8,088</b>	<b>45,507</b>	<b>8,816</b>
	현원	<b>34,789</b>	<b>5,900</b>	<b>31,554</b>	<b>6,256</b>	<b>28,902</b>	<b>6,672</b>
	이용률	<b>67.2</b>	<b>75.0</b>	<b>66.0</b>	<b>77.3</b>	63.5	75.7
전남	정원	56,047	10,964	52,578	11,670	50,620	11,646
	현원	38,927	8,497	35,344	8,816	32,470	8,521
	이용률	<b>69.5</b>	<b>77.5</b>	67.2	75.5	64.1	73.2
경북	정원	72,231	10,471	64,900	10,077	60,676	10,981
	현원	48,988	7,856	43,022	7,516	38,642	7,841
	이용률	<b>67.8</b>	<b>75.0</b>	66.3	74.6	63.7	71.4
경남	정원	96,773	18,999	88,305	19,734	81,177	19,954
	현원	68,841	14,747	59,419	14,508	53,139	14,382
	이용률	<b>71.1</b>	<b>77.6</b>	67.3	73.5	65.5	72.1
제주	정원	26,568	2,704	25,288	2,727	24,384	2,727
	현원	20,970	2,239	19,150	2,331	17,382	2,262
	이용률	<b>78.9</b>	<b>82.8</b>	75.7	85.5	71.3	82.9

〈표 29〉 2022년~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 국공립 유치원 수 및 비율

- 현재 전북의 국립유치원은 없음. 2025년 기준 전북의 공립 유치원 비율은 75.2%로 전국 평균(62.3%)보다 높음. 그러나 충남(77.6%) 및 특히 전남(82.9%)에 비해서는 공립화 수준이 낮아 유아교육 분야의 공공성 추가 확대가 필요함.

(단위 : 개, 명, %)

시도	설립 주체별	2023년			2024년			2025년			
		유치원수(개)		원아수 (명)	유치원수(개)		원아수 (명)	유치원수(개)		원아수(명)	
		원데이터	전년대비 증감률		원데이터	전년대비 증감률		원데이터	전년대비 증감률	원데이터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계	8,441	-1.4	521,794	8,294	-1.7	498,604	8,140	-1.9	481,563	-3.4
	국립	3	0.0	232	3	0.0	241	3	0.0	247	2.5
	공립	5,130	0.3	152,429	5,105	-0.5	145,402	5,071	-0.7	144,481	-0.6
	사립	3,308	-4.0	369,133	3,186	-3.7	352,961	3,066	-3.8	336,835	-4.6
서울	계	769	-2.4	62,880	754	-2.0	61,128	740	-1.9	59,392	-2.8
	국립	-	-	-	-	-	-	-	-	-	-
	공립	296	1.0	14,286	298	0.7	13,827	301	1.0	13,716	-0.8
	사립	473	-4.4	48,594	456	-3.6	47,301	439	-3.7	45,676	-3.4
부산	계	384	-2.5	34,244	375	-2.3	32,814	372	-0.8	31,046	-5.4
	국립	-	-	-	-	-	-	-	-	-	-
	공립	136	0.0	6,657	136	0.0	6,474	137	0.7	6,445	-0.4
	사립	248	-3.9	27,587	239	-3.6	26,340	235	-1.7	24,601	-6.6
대구	계	322	-2.1	30,496	320	-0.6	29,254	306	-4.4	28,156	-3.8
	국립	-	-	-	-	-	-	-	-	-	-
	공립	116	0.0	5,425	120	3.4	4,991	115	-4.2	4,889	-2.0
	사립	206	-3.3	25,071	200	-2.9	24,263	191	-4.5	23,267	-4.1
인천	계	393	-0.8	34,777	393	0.0	34,457	391	-0.5	33,628	-2.4
	국립	-	-	-	-	-	-	-	-	-	-
	공립	194	1.6	7,919	198	2.1	7,924	200	1.0	7,957	0.4
	사립	199	-2.9	26,858	195	-2.0	26,533	191	-2.1	25,671	-3.2
광주	계	286	-0.7	19,911	273	-4.5	18,924	266	-2.6	18,185	-3.9
	국립	-	-	-	-	-	-	-	-	-	-
	공립	137	0.7	3,634	132	-3.6	3,566	133	0.8	3,471	-2.7
	사립	149	-2.0	16,277	141	-5.4	15,358	133	-5.7	14,714	-4.2
대전	계	251	-1.6	18,937	248	-1.2	17,855	240	-3.2	17,404	-2.5
	국립	-	-	-	-	-	-	-	-	-	-
	공립	105	0.0	3,111	105	0.0	2,645	106	1.0	2,691	1.7
	사립	146	-2.7	15,826	143	-2.1	15,210	134	-6.3	14,713	-3.3
울산	계	188	-1.6	13,513	186	-1.1	12,829	182	-2.2	12,390	-3.4
	국립	-	-	-	-	-	-	-	-	-	-
	공립	92	-1.1	4,062	92	0.0	3,502	91	-1.1	3,282	-6.3

	사립	96	-2.0	9,451	94	-2.1	9,327	91	-3.2	9,108	-2.3
세종	계	65	1.6	6,254	66	1.5	5,902	66	0.0	5,846	-0.9
	국립	-	-	-	-	-	-	-	-	-	-
	공립	63	1.6	6,178	64	1.6	5,860	64	0.0	5,846	-0.2
	사립	2	0.0	76	2	0.0	42	2	0.0	-	-
경기	계	2,148	-1.2	144,693	2,119	-1.4	138,362	2,084	-1.7	136,101	-1.6
	국립	-	-	-	-	-	-	-	-	-	-
	공립	1,292	0.8	43,610	1,293	0.1	42,691	1,288	-0.4	44,795	4.9
	사립	856	-4.1	101,083	826	-3.5	95,671	796	-3.6	91,306	-4.6
강원	계	353	-1.7	12,681	353	0.0	12,440	348	-1.4	12,304	-1.1
	국립	1	0.0	41	1	0.0	47	1	0.0	53	12.8
	공립	274	-0.7	5,519	275	0.4	5,312	272	-1.1	5,082	-4.3
	사립	78	-4.9	7,121	77	-1.3	7,081	75	-2.6	7,169	1.2
충북	계	318	-1.9	14,216	316	-0.6	13,823	312	-1.3	13,334	-3.5
	국립	1	0.0	104	1	0.0	104	1	0.0	104	0.0
	공립	246	-0.4	7,482	247	0.4	7,438	248	0.4	7,281	-2.1
	사립	71	-6.6	6,630	68	-4.2	6,281	63	-7.4	5,949	-5.3
충남	계	494	-0.8	21,965	494	0.0	20,626	482	-2.4	19,774	-4.1
	국립	1	0.0	87	1	0.0	90	1	0.0	90	0.0
	공립	377	0.3	7,646	380	0.8	7,210	373	-1.8	7,180	-0.4
	사립	116	-4.1	14,232	113	-2.6	13,326	108	-4.4	12,504	-6.2
전북	계	494	-1.4	17,377	474	-4.0	16,014	459	-3.2	15,164	-5.3
	국립	-	-	-	-	-	-	-	-	-	-
	공립	369	-0.3	6,433	356	-3.5	5,626	345	-3.1	5,340	-5.1
	사립	125	-4.6	10,944	118	-5.6	10,388	114	-3.4	9,824	-5.4
전남	계	514	-0.4	15,458	500	-2.7	14,676	494	-1.2	13,990	-4.7
	국립	-	-	-	-	-	-	-	-	-	-
	공립	424	0.5	7,752	415	-2.1	7,511	410	-1.2	7,137	-5.0
	사립	90	-4.3	7,706	85	-5.6	7,165	84	-1.2	6,853	-4.4
경북	계	671	-1.6	29,079	645	-3.9	27,164	632	-2.0	24,816	-8.6
	국립	-	-	-	-	-	-	-	-	-	-
	공립	463	-0.2	8,084	451	-2.6	7,601	447	-0.9	7,002	-7.9
	사립	208	-4.6	20,995	194	-6.7	19,563	185	-4.6	17,814	-8.9
경남	계	671	-1.8	39,724	658	-1.9	36,931	646	-1.8	34,998	-5.2
	국립	-	-	-	-	-	-	-	-	-	-
	공립	443	0.2	11,311	440	-0.7	9,994	437	-0.7	9,408	-5.9
	사립	228	-5.4	28,413	218	-4.4	26,937	209	-4.1	25,590	-5.0
제주	계	120	0.8	5,589	120	0.0	5,405	120	0.0	5,035	-6.8
	국립	-	-	-	-	-	-	-	-	-	-
	공립	103	1.0	3,320	103	0.0	3,230	104	1.0	2,959	-8.4
	사립	17	0.0	2,269	17	0.0	2,175	16	-5.9	2,076	-4.6

<표 30> 2023년~2025년 국공립 유치원 수 현황

(4) 유치원 취원률

- 2024년 기준 전북의 유치원 취원율은 87.9%로, 전국 평균(81.4%)보다 높고,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지역 내 유아교육 참여 수준이 높고, 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나, 유아교육 원아 수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알 수 있음.

(단위 : 명, %)

시도	2022년			2023년			2024년		
	원아수 (명)	4~5세 인구(명)	취원율 (%)	원아수 (명)	4~5세 인구(명)	취원율 (%)	원아수 (명)	4~5세 인구(명)	취원율 (%)
전국	552,812	730,734	75.7	521,794	662,813	78.7	498,604	612,287	81.4
서울	66,524	110,176	60.4	62,880	98,992	63.5	61,128	92,112	66.4
부산	36,308	42,958	84.5	34,244	38,069	90.0	32,814	34,469	95.2
대구	32,272	33,085	97.5	30,496	29,335	104.0	29,254	27,576	106.1
인천	35,427	42,815	82.7	34,777	39,201	88.7	34,457	39,281	87.7
광주	20,998	22,174	94.7	19,911	19,931	99.9	18,924	18,202	104.0
대전	20,405	20,990	97.2	18,937	18,644	101.6	17,855	17,161	104.0
울산	14,779	17,900	82.6	13,513	15,719	86.0	12,829	14,313	89.6
세종	6,422	9,549	67.3	6,254	9,238	67.7	5,902	8,159	72.3
경기	153,149	216,466	70.7	144,693	199,508	72.5	138,362	184,924	74.8
강원	13,168	19,311	68.2	12,681	18,037	70.3	12,440	16,920	73.5
충북	14,993	23,139	64.8	14,216	21,130	67.3	13,823	19,093	72.4
충남	23,647	31,907	74.1	21,965	29,020	75.7	20,626	27,176	75.9
<b>전북</b>	<b>18,740</b>	<b>22,615</b>	<b>82.9</b>	<b>17,377</b>	<b>20,246</b>	<b>85.8</b>	<b>16,014</b>	<b>18,225</b>	<b>87.9</b>
전남	16,285	23,259	70.0	15,458	21,251	72.7	14,676	19,730	74.4
경북	31,365	34,360	91.3	29,079	30,964	93.9	27,164	27,535	98.7
경남	42,385	48,428	87.5	39,724	42,810	92.8	36,931	37,762	97.8
제주	5,945	11,602	51.2	5,589	10,718	52.1	5,405	9,649	56.0

<표 31> 2022년~2024년 유치원 취원률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가. 어린이집 공공성 취약

-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 지자체 대비 현저히 낮아 보육 환경의 공공성 확보 수준이 매우 취약함.
- 공공 보육 확충을 위한 국공립 전환 및 신규 설치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나. 유치원 공공성 비교적 양호

- 공립 유치원 수 비율 및 취원율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아 교육 부문에서는 비교적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음.
- 특히 취원율이 높다는 것은 공립 시설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다. 이용률 관리 필요

-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지자체와 함께 하위권이 며, 낮은 국공립 수 비율과 맞물려 지역 내 보육 격차 및 공공 보육 혜택 부족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국공립 시설 확충과 동시에 노후시설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2024년~2025년

-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16.85% (전국 23.81%)
-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75.7% (전국 78.2%)
- 2025년 공립 유치원 비율 75.1% (전국 62.3%)
- 2024년 공립 유치원 취원율 87.9% (전국 81.4%)

○ 목표치

- 국공립 어린이집 수 비율 25% 달성 (전국 평균 상회 목표)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80% 달성 (전국 평균 이상 회복 목표)
- 공립 유치원 비율 80% 이상 유지 (비교 지자체 수준 목표)
- 공립 유치원 취원율 90% 이상 달성 (공립 선호도 지속 반영)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정책 추진

- 지역 내 유휴 공간 및 국공립 전환 대상 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매년 목표 전환/설치 수량을 설정하여 집중 투자해야 함.
-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영자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전환율을 높여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시설 노후도를 개선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특화 보육 프로그램(예: 생태, 인성 교육 등)을 개발 및 운영하여 공공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부모의 이용률을 높여야 함.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함.
- 보육-교육 연계 및 유기적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만 3~5세 아동의 균등하고 질 높은 공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 용어 정의

- 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자료원):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국공립 유치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자료원) : 교육부 유치원 통계 연보/공시자료
- 이용률(취원율)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대비 재원 아동 비율이며,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인구수 대비 취원 아동 비율(취원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제공된 유치원 통계자료는 '4~5세 인구수 대비 취원율'로 작성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사회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5-1-1. 지역 성평등지수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 중 다섯 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은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정되었음.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5번째 목표인 '성평등 보장'도 모든 차별 및 인신매매, 성적착취 등을 철폐하고 돌봄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의 리더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함.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지수를 알아보고 지표를 향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함
- SDGs 5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 성평등지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5 성평등 보장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5-1-1	지역 성평등지수

〈표 32〉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2021년 기준으로 중상위권이었지만, 2022년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였음.
- 영역별로는 고용과 안전 영역에서 상위권 성과를 기록한 반면, 소득과 교육, 건강 영역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3년 소득 영역은 63.5점으로 2021년 65.7점, 2022년 64.6점에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순위 또한 17위에 머물고 있음. 교육과 건강 영역 역시 전국 순위 하위권에 머물렀음.
- 세부 지표별로는 5급 이상 공무원, 고용률, 국민연금 수급률 등에서 3점 이상 개선됐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경험률,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지표 등에서는 비교적 크게 하락함.

(단위 : 점수, 순위)

구분		종합순위	의사 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 평등 의식	안전
2021년	점수	중상위권	34.5	83.1	65.7	92.8	89.7	32.8	81.1	72.0
	순위		7	2	16	15	17	14	3	5
2022년	점수	중하위권	34.3	85.0	64.6	93.3	92.1	36.1	79.2	75.1
	순위		8	2	17	15	12	11	14	3
2023년	점수	중상위권	35.9	87.4	63.5	93.7	91.8	35.9	76.0	71.7
	순위		10	1	17	15	15	10	7	3
2022년 대비 증감	점수	1단계 상승	1.6	2.4	-1.1	0.4	-0.3	-0.2	-3.2	-3.4
	순위		-2	1	0	0	-3	1	7	0

<표 33> 전북특별자치도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지표별로는 2022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소득, 건강, 양성평등의식, 그리고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과 돌봄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소득 영역은 2021년 65.7점(16위)에서 2023년 63.5점(17위)로 점수와 순위 모

두 하락했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23년 49.4점(17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개선이 시급함. 국민연금 수급률은 2023년 76.9점(3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함.

- 건강 영역은 2021년 89.7점(17위)에서 2023년 91.8점(15위)로 점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함. 주관적 건강 상태는 2023년 78.1점(16위)로 하락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함. 기대수명은 3년 연속 100점을 기록하며 강점을 보임.
  - 양성평등의식은 2021년 81.1점(3위)에서 2023년 76.0점(7위)로 점수가 하락했으나 순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성 역할 고정관념은 2023년 54.2점(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성차별 경험률은 90.9점(1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안전 영역은 2021년 72.0점(5위)에서 2023년 71.7점(3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점수에서는 가장 큰 폭(-3.4점)으로 하락함.
-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평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임.

목 표		5. 성평등 보장
세 부 목 표	5-1.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한다.	
지표명	5-1-1. 지역 성평등지수	
필요성 및 의 의	<p>-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함.</p> <p>-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여, 지역 성평등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함.</p> <p>-양성평등 정책의 모니터링, 지역 정책의 실효성 점검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전북의 관심과 도민의 인식 제고</p>	
지 표	정의	-지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8개 영역(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p>양성평등의식, 안전) 2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 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 발표함.</p> <p>-지역 성평등지수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p>			
산출 논리	-성평등 보장을 위한 8개 영역, 22개의 세부 지표로 성평등 포용 사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적합			
자료원 또는 출처	성평등가족부 (지역성평등보고서)	산정 방법	지역성평등보고서 중 전북지역 성평등지수 점수 확인	
작성 방법	-매년 성평등가족부가 발간하는 '지역성평등보고서'에 작성된 전북특별 자치도 영역별 성평등 수준(점수) 확인			
현황	1. 지역 성평등지수 수준 (통계생산 연도 기준, 각 등급 안의 순서는 가나다순)			
	성평등 수준	2021년	2022년	2023년
	상위 지역	대전	광주	대전
		부산	대전	서울
		서울	서울	세종
		세종	세종	제주
		제주	제주	충남
	중상위 지역	경기	경기	강원
		광주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전북		충남	전북	
중하위 지역	강원	강원	경기	
	경남	울산	경남	
	대구	인천	인천	
	충남	전북	충북	
하위 지역	경북	경남	경북	
	인천	경북	부산	
	전남	전남	울산	
	충북	충북	전남	
<표 35> 지역 성평등 지수 수준				

2. 전북특별자치도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구분		종합 순위	의사 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 의식	안전
'21년	점수	중상 위권	34.5	83.1	65.7	92.8	89.7	32.8	81.1	72.0
	순위		7	2	16	15	17	14	3	5
'22년	점수	중하 위권	34.3	85.0	64.6	93.3	92.1	36.1	79.2	75.1
	순위		8	2	17	15	12	11	14	3
'23년	점수	중상 위권	35.9	87.4	63.5	93.7	91.8	35.9	76.0	71.7
	순위		10	1	17	15	15	10	7	3
'22년 대비 증감	점수	1단계 상승	1.6	2.4	-1.1	0.4	-0.3	-0.2	-3.2	-3.4
	순위		-2	1	0	0	-3	1	7	0

〈표 36〉 전북특별자치도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기준치	2023년 종합점수 69.83점	목표치	2030년까지 종합점수 74.50점
자료 경로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표-지역성평등보고서		지표 관리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

〈표 34〉 '5-1-1 지역 성평등지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지역 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③항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영역과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가 구성됨.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중략)...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보급하고, 지역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 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이하 생략)

## (2) 지표의 정의

- 지역 성평등지수는 영역 7개와 지표 20개로 구성되며, 지역 안전과 관련된 성평등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를 위해 안전 영역에 가점 영역으로 2개의 지표를 선정함.
- 영역은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의식과 안전 영역으로 구성됨.

목표	영역(가중치)	지표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0.1434)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0.1761)	-고용률, 상용근로자 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
	소득(0.1635)	-임금 격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교육(0.0809)	-평균 교육 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건강(0.0854)	-주관적 건강상태, 기대수명, 스트레스 인지
평등한 관계	돌봄(0.1683)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사용
	양성평등의식(0.1824)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
안전 (가점 영역)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비율, 야간통행의 안전도

〈표 37〉 지역 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표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서 발취함.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지역성평등보고서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17개 광역 시·도
- 제공시기 : 매해 년도 12월
- 제공기준 : 발간 년도 전년도 통계정보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지표의 표준화와 성비로 전화

- 지표는 성비와 수준으로 표준화
  - ① 성비는 남성 대비 여성의 비 측정
  - ② 남성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등)는 여성 대비 남성 성비 활용
  - ③ 여성 인권, 성 역할 고정관념,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수준으로 측정
- 성비(혹은 수준)는 완전 불평등 '0', 완전 평등 '100'으로 표준화
  - ① 여성 비율 50% 이상인 경우 완전 평등 상태로 간주

##### 나. 성비로 전환되는 지표는 대상 인구로 보정

- 각 지표에 대응되는 연령, 집단의 성비를 보정

##### 다. 영역별 지수값 산정

- 분야별 지표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라. 성평등지수 산정

- 각 분야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값 산정, 가점영역(안전) 점수는 최대 5점 부여

#### 5. 지표분석 결과

(1)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수준 분석 결과, 2022년 중하위권에서 2023년 중상위권으로 향상됐음.

- 영역별로는 고용과 안전이 상위권을 기록했으나 소득과 교육, 건강 영역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세부 지표별로는 광역 및 기초의원,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비율,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가사노동 시간, 육아휴직 사용자 등의 지표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성평등 개선 및 점검이 필요한 지표로 꼽혔음.

- 이에 비해 기대수명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지표는 최고점을 받아 관심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년에 비해 평가점수가 하락한 소득, 건강, 양성평등의식 영역, 그리고 여전히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과 돌봄 영역의 지표 개선을 위해 세부 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2023년도 기준 전북 성평등지수 점수 69.83점
- 목표치
  - 2030년까지 전북 성평등지수 74.5점까지 관리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2021년~2023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7위를 기록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우선 채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여성 특화 재취업 프로그램과 여성 친화 일자리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 연속 50점 미만의 낙제점을 기록하면서 전북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신규 채용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높이고, 연도별 여성 관리자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또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핵심 업무나 공약·현안 사업 등 과장·팀장 승진과 연결되는 주요 보직에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배치하는 등 전략적인 보직 배치 노력도 필요함.

### ◆ 용어 정의

- 지역 성평등지수((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RGEI) : 대한민국 시·도 단위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 이 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며, 지역별 성평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SDGs 경제위원회

- 8-1-2. 비정규직비율(%)
-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 9-1-1. 사회적기업 수
- 9-1-2. 공공기업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율
- 9-1-3.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기업 수
- 12-1-1.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
- 12-1-2.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8-1-2. 비정규직비율(%)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조지표 활용)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임.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비율은 지역 경제의 질적 향상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핵심 지표임.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도 비정규직 규모가 2위(2022년 기준), 3위(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4위(2025년 기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강원도, 전남 등과 하위권 다툼을 하고 있음.
- 결국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인구는 줄어들고(지역소멸),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과거 기업 유치 사례를 살펴봐도 일 자리의 양에만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의 질의 중요성을 놓친 경험들이 있음.
-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표 관리가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정규직 규모가 2022년 2위, 2023년·2024년 3위, 2025년 4위 수준을 지속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이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많아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핵심 원인임.
  -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임.
  - 광역지자체의 통계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보조지표로 정밀 분석하여, 공공부문이 지역 일자리 질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가 필요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8-1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경제사 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 리정책을 실현한다.	8-1-2	비정규직비율(%)

〈표 38〉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전북지역 고용 질 악화 지속
  - 2025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비율(38.2%)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화된 반면, 전북은 여전히 40%대 중반에 머물러 전국 평균과의 격차(4.4%p)가 매우 크며, 지역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전북지역의 순위(3위)가 고착화되고 있어, 일반적인 경제성장만으로는 고용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강력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
- 공공부문 구조적 문제 및 비정규직 보호 장치 미흡
  - 전북지역 공공부문 인력관리 시스템의 경직성과 일자리 부분 사회적 책임 이행의 부족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임을 시사함.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노사 협의 구조가 미흡한 실정임.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전국 단위 비정규직 비중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 모니터링을 위한 개선 방향은 없으나 고착화되는 전북의 비정규직비율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활용 구조 개혁 및 평가 강화
- 비정규직 활용의 근본 원인인 정원증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부문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비정규직 비율 및 처우 개선 노력을 핵심 지표로 대폭 강화(민간 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집중 및 인센티브 확대 등) 해야 함.

- (2) 민간 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활용이 두드러지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정규직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고용 질 개선을 유도함.
- (3) 공정 임금 및 처우 개선 체계 구축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한 처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함.
- (4) 노동조합 활성화 및 권익 보호 확대
  - 노동조합이 부재한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 처리 창구 및 노동 인권 교육을 확대하여 근로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함.

<b>목 표</b>	<b>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b>	
<b>세 부 목 표</b>	8-1.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경제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정책을 실현한다.	
<b>지표명</b>	8-1-2 비정규직 비율(%)	
<b>필요성 및 의 의</b>	<p>-전북특별자치도는 비정규직 규모가 2022년 2위, 2023년•2024년 3위, 20265년 4위 수준을 지속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이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많아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핵심 원인임.</p> <p>-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낮추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표관리가 요구됨.</p> <p>-광역지자체의 통계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보조지표로 정밀 분석하여, 공공부문이 지역 일자리 질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함.</p>	
<b>지 표</b>	<b>정의</b>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

	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합의 ※고용 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①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 시간), ③ 비전형 근로자(근로 제공 방식)를 대상으로 함.		
산출 논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결과를 활용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자체 조사 데이터 활용		
자료원 또는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매년 8월)	산정 방법	$\frac{\text{비정규직 근로자(천명)}}{\text{임금근로자(천명)}} \times 100(\%)$
작성 방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결과를 활용		
현황	2024년 기준 전국에서 3번째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		
기준치	전북 41.6%, 전국 평균 38.2%	목표치	-중장기 : 10년 내 전국 평균 (38.2%)까지 근접 관리, -단기 : 매년 0.4% 감소를 목표
자료 경로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부가조사 결과」 (매년 8월) -최근 갱신일 : 2025-08-14(입력예정일 : 2025-11-30) -공표 주기(1년)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노사협력팀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39> '8-1-2 비정규직비율(%)'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합의

## (2) 지표의 정의

-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 시간) : 근로 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 제공 방식) :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 근로자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통계청 데이터 및 자체 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결과를 활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자체 조사 데이터 활용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비정규직 비중은 전북특별자치도. 보조지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표는 전북특별자치도(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중
- 제공시기 : 연간
- 비정규직구분 :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재택/가내 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용역근로자, 5. 일일 근로자, 6. 단시간 근로자, 7. 기간제근로자, 8.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9. 무기계약직 등으로 구분 가능
- 성별구분 : 남성/여성
- 연령구분 : 연령 구분은 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
- 비정규직연수 : 보조지표의 경우,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_년"으로 조사 가능

(4) 지표산출 방법

가. 고용 형태 평가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 또는 매년 공개되는 통계청의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비율(%) 통계자료로 조사함.

- '비정규직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비정규직비율 산식} = \frac{\text{비정규직 근로자(천명)}}{\text{임금근로자(천명)}} \times 100(\%)$$

<표 40> 비정규직비율 산식

(단위 : 천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20,446	20,992	21,724	21,954	22,143	22,413
	정규직	13,020	12,927	13,568	13,832	13,685	13,845
	비정규직	7,426	8,066	8,156	8,122	8,459	8,568
	- 한시적근로자	4,608	5,171	5,348	5,259	5,628	5,848
	* 기간제	3,933	4,537	4,689	4,809	4,999	5,337
	- 시간제근로	3,252	3,512	3,687	3,873	4,256	4,229
	- 비전형근로	2,073	2,278	2,131	1,957	1,903	1,834
비율 (%)	임금근로자	100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64	62	63	63	62	62
	비정규직	36	38	38	37	38	38
	- 한시적근로자	23	25	25	24	25	26
	* 기간제	19	22	22	22	23	24
	- 시간제근로	16	17	17	18	19	19
	- 비전형근로	10	11	10	9	9	8

<표 41> 전국 비정규직 규모(2025년 8월 기준)

(단위 : 천명)

지역	2024년			2025년			증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22,143	13,685	8,459	22,413	13,845	8,568	270	160	110
서울	4,367	2,694	1,673	4,375	2,696	1,679	8	2	6
부산	1,351	779	572	1,383	830	553	32	51	-19
대구	932	579	353	913	561	353	-18	-19	0
인천	1,413	863	551	1,384	851	533	-29	-12	-18
광주	602	370	232	633	354	278	31	-16	46
대전	626	379	247	643	385	258	17	7	11
울산	474	303	170	478	305	173	4	2	3
세종	173	126	48	177	124	53	4	-2	5
경기	6,230	4,055	2,175	6,320	4,180	2,140	90	125	-35
강원	628	330	298	611	294	318	-17	-37	20
충북	684	410	274	705	428	277	21	18	3
충남	915	579	336	938	566	373	24	-13	37
<b>전북</b>	<b>670</b>	<b>385</b>	<b>285</b>	<b>693</b>	<b>405</b>	<b>288</b>	<b>23</b>	<b>20</b>	<b>3</b>
전남	624	336	288	631	316	315	8	-19	27
경북	932	557	376	978	592	386	46	36	10
경남	1,252	776	476	1,278	798	480	26	22	4
제주	272	166	106	274	162	112	2	-4	6

<표 42>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2025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누어짐.

\*\*시간제근로자 :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로 분류됨.

(5) 조사 기준월 : 2025년 8월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조지표 비정규직 형태(안)

※ 고용 형태 설명 안내서		
간접 고용 비정 규직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자와 자영업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운전기사 등)
	2. 재택/가내 근로자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로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 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재택근로자(114전화안내 등)와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가내근로자(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로 구분
	3.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4.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직접 고용 비정 규직	5. 일일근로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6.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단시간이면서 기간제인 경우는 단시간으로 분류, 1주일에 3~4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7. 기간제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8.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정규	10. 무기 계약직	근로계약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

<표 43>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조지표 비정규직 형태(안)

## 5. 지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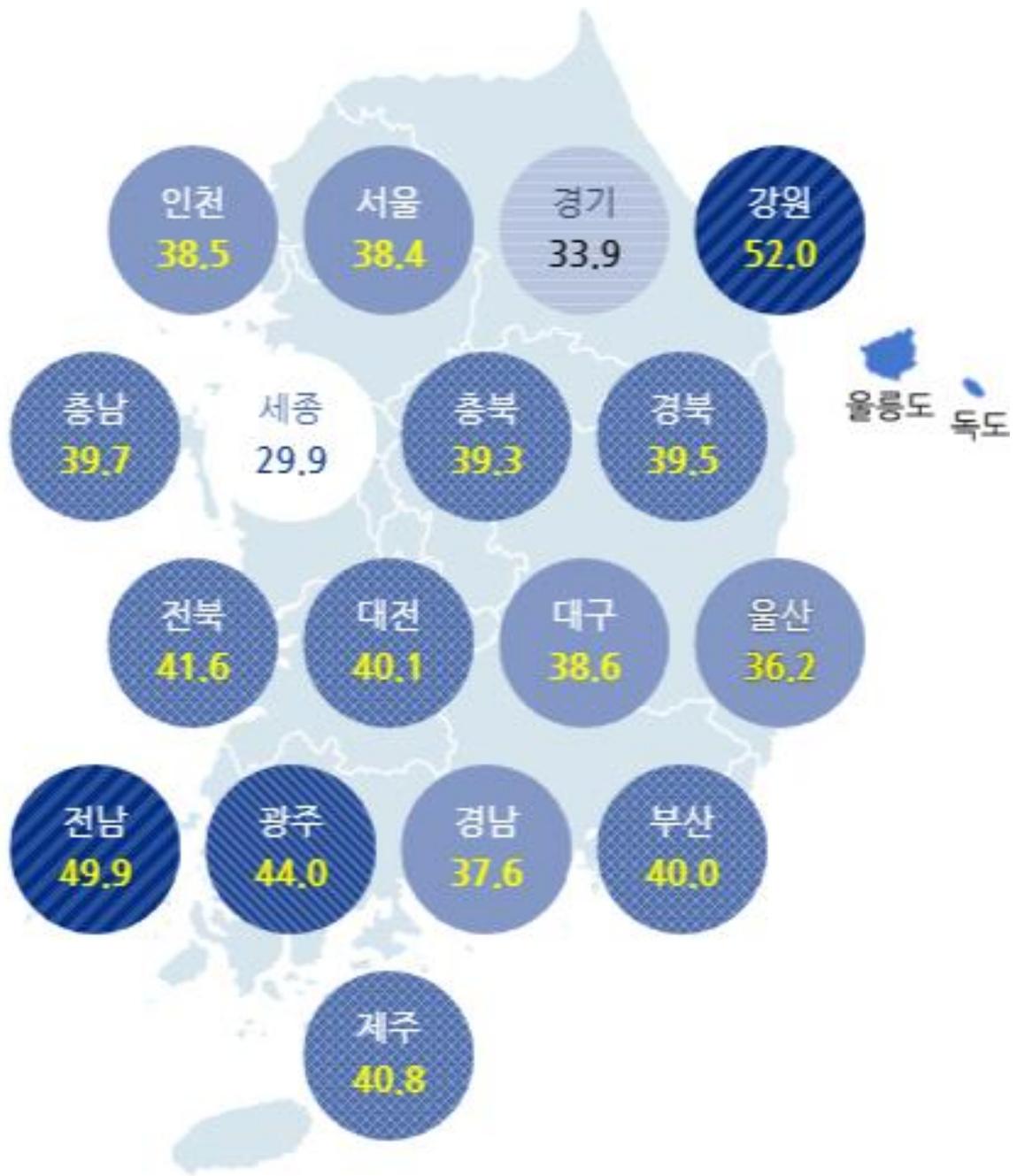
### (1) 고착화되는 하위권 순위와 전국 평균과의 격차 유지

- 2025년 8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 비율은 41.6%로,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38.2%)보다 3.4%p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3위(42.6%)에서 2025년 4위(41.6%)로 소폭 순위가 하락하고 비율 자체도 1.0%p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40%대 초반에 머물러 지역 노동시장의 질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강원(52.0%), 전남(49.9%), 광주(44.0%)와 함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경제성장만으로는 고용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전국 평균(38.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강력하고 구조적인 정책 개입이 시급함.

(단위 : %)

행정 구역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6.3	38.4	37.5	37.0	38.2	38.2
서울	35.0	38.5	37.0	34.9	38.3	38.4
부산	38.0	41.1	42.2	42.6	42.4	40.0
대구	36.1	38.3	38.1	39.5	37.8	38.6
인천	34.7	37.1	38.7	36.4	39.0	38.5
광주	40.8	40.0	37.7	38.3	38.6	44.0
대전	39.7	40.8	38.9	36.4	39.5	40.1
울산	34.3	34.9	34.9	34.6	35.9	36.2
세종	28.1	26.7	31.4	30.9	27.5	29.9
경기	35.0	37.1	35.0	33.5	34.9	33.9
강원	45.8	47.5	46.9	50.5	47.4	52.0
충북	34.5	38.6	40.1	37.9	40.1	39.3
충남	37.6	35.7	36.6	37.4	36.7	39.7
<b>전북</b>	<b>44.1</b>	<b>44.7</b>	<b>44.0</b>	<b>44.4</b>	<b>42.6</b>	<b>41.6</b>
전남	39.4	41.3	40.9	46.3	46.2	49.9
경북	34.4	35.2	37.6	37.9	40.3	39.5
경남	35.3	38.6	34.9	38.0	38.0	37.6
제주	43.8	41.0	43.0	40.8	39.1	40.8

〈표 44〉 지역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2025년 8월 기준)



<그림 6> 지역별 비정규직근로자 비율(2025년 8월 기준)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지역 순위 개선의 한계
  - 2025년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41.6%로 2024년(42.6%) 대비 1.0%p 개선되었으나, 전국 4위라는 하위권 고착화 추세는 여전하며, 전국 평균(38.2%)과의 격차도 3.4%p로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음.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의미함.
- 취약계층 고용 질 개선 필요
  -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 비율(26%) 및 기간제근로자 비율(24%)이 전국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2025년 기준)에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중장기 목표
  - 2030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38.2%)에 근접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단기 목표
  - 2026년 8월 통계 발표 시점에서 전년 실적(41.6%) 대비 최소 0.4%p 추가 감소를 달성하여 41.2% 이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공공부문 '정규직 우선 채용' 의무화 및 고용 형태 차별 해소 심의 제도 도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안을 고민하고 행정적 의지를 통한 구조적 개혁이 최우선 과제임.
  - 공공기관(도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심의 제도를 의무화함. 공공기관이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형태의 비정규직 채용을 추진할 경우, '고용형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수로 거치도록 행정 절차를 강화하여, 해당 업무가 '업무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원증원 회피 목적'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을 권고하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

- 광역 사례 현황

구분	정책 제안	광역 사례 및 주요 내용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도입	정규직 우선 채용 원칙 의무화	(경기)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사전에 심사하고, 비정규직 채용의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처음부터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정착 시켜야 함.
정규직 전환 공정성 강화 및 모델 개발	전북형 정규직 전환 공정 평가표 개발	(전남) 과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평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처럼 인적 속성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평가표를 개발하여, 전환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장 노동자의 이의 신청 및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공공부문 공정 수당 도입 검토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 시스템 도입	(경기) 경기도가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유사하게, 전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근로자(한시적/기간제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에 비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활용 비용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표 45〉 공공부문 ‘정규직 우선 채용’ 의무화 및 고용 형태 차별 해소 심의제도 도입  
광역 사례 현황

○ 민간부문 고용 질 개선 및 노동권 보호

- 노동조합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신규 민관협력 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 밀착 지원 서비스'를 설계하여,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돌봄·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노동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 통로를 마련해야 함.

- 광역 사례 현황

구분	정책 제안	광역 사례 및 주요 내용
지역 밀착형 노동 상담망 확대	마을 노무사 제도 확대 및 비대면 시스템 구축	(경기) '마을 노무사'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마트 노동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군 지역 주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동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전형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고용질 개선 민관협력 인센티브 강화	돌봄 및 사회서비스 분야 집중 지원	(광주)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활용이 많은 돌봄, 사회서비스 부문을 '고용 질 개선 집중 관리 분야'로 지정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세제 감면, 경영 환경 개선 지원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

<표 46> 민간부문 고용 질 개선 및 노동권 보호 광역 사례 현황

- 전북형 고용 질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핵심 산업 연계 지원
  - 전북지역 전체의 비정규직 비율을 전국 평균으로 낮추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질적 개선이 필수적임. 전북의 핵심 경제사업(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전북형 고용 질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야 함.
  -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생활 임금 준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지역 혁신 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도내 정책 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계해야 함.
  -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돌봄 및 사회서비스, 첨단 산업 연계 중소기업을 우선 인증 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용의 질 개선 효과를 집중적으로 유도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8-3-1. 청년 창업건수 및 폐업률(%)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유출을 막고 전북 정주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성공적 창업이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성장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전라북도 청년 창업 환경이 청년 친화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확보가 내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8-3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 한다.	8-3-1	청년 창업 건수 및 폐업률

〈표 47〉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청년 창업 건수 : 분석 시점 기준 신규 창업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총량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으며, 인접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청년 창업 건수가 높지만, 증가율은 낮아 신규
-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청년 창업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신규 창업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다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산발적인 창업 지원보다 계획적인 창업 지구 개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청년 폐업률 : 전체 창업 건수 대비 해당 년도에 폐업한 비율로 2023년은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압박 등 자금난을 겪는 창업 청년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폐업률 증가로 이어짐.
- 존속 연수별 폐업률(보조지표) : 존속 연수별 폐업률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창업 5년 이내에 50%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비중을 줄이고 경영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시범지표 및 보조지표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아니고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외부로 반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통계 관리하는 전담 조직으로 전북연구원 산하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를 활용하여 지표를 시범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23년에 작성했던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의 통계 수치와 올해 작성한 보고서의 통계 수치가 상이한데, 이는 작년에 해당 통계자료를 처음 가공하다 보니 일부 업종이 빠진 청년 창업 건수만이 반영되어 실제보다 적은 통계 결과를 제시함.
- 이에 2024년부터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창업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표. 관리를 할 예정임.
- 또한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과 관련해서 2023년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라남도과 충청북도만을 비교 대상 지역으로 분석하였으나, 2024년부터 인접 지역인 충청남도와 특별자치도로서 성격이 비슷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교 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비교분석하기로 함.

목 표		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8-3.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지표명	8-3-1 청년 창업건수 및 폐업률																																																							
필요성 및 의의	<p>-전북의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유출을 막고 전북 정주화가 필요함</p> <p>-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성공적 창업이 하나의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p>																																																							
지 표	정의	<p>-창업 또는 폐업 대표자 기준으로 만 19세~39세의 창업과 폐업 현황을 분석함</p> <p>-전국과 전북지역의 인구 대비 창업 참여율을 비교 평가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여부를 평가</p> <p>-전국과 전북지역의 존속 연수별 폐업률을 비교 평가하여 창업 활동의 지속성을 평가</p>																																																						
	산출 논리	<p>-통계청에서 청년 창업 관련 통계 지표를 시도 단위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추출이 가능한 자료임.</p> <p>-통계청 데이터센터에서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전문 조직을 두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p>																																																						
	자료원 또는 출처	기업통계등록부(SBR)	산정 방법	$\frac{\text{〈청년 창업률〉}}{\text{청년 창업 건수}} \times 100(\%)$ $\frac{\text{〈청년 폐업률〉}}{\text{폐업건수}} \times 1$																																																				
	작성 방법	통계청의 창업 데이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통계 및 기타 통계를 결합																																																						
	현황	<p>〈청년 창업 건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북</th> <th>충남</th> <th>충북</th> <th>전남</th> <th>강원</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53,672</td> <td>70,523</td> <td>50,275</td> <td>51,687</td> <td>45,872</td> </tr> <tr> <td>2023년</td> <td>55,231</td> <td>72,695</td> <td>52,245</td> <td>52,627</td> <td>47,324</td> </tr> <tr> <td>증가율</td> <td>2.9%</td> <td>3.1%</td> <td>3.9%</td> <td>1.8%</td> <td>3.2%</td> </tr> </tbody> </table> <p>〈표 49〉 청년 창업 건수</p> <p>-2023년 전북자치도 청년창업건수는 55,231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p> <p>-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은 연평균 3.2%, 충북은 3.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p> <p>〈청년 창업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북</th> <th>충남</th> <th>충북</th> <th>전남</th> <th>강원</th> <th>전국</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14.1%</td> <td>14.4%</td> <td>13.3%</td> <td>14.2%</td> <td>13.8%</td> <td>14.5%</td> </tr> <tr> <td>2023년</td> <td>15.0%</td> <td>15.2%</td> <td>14.1%</td> <td>14.9%</td> <td>14.5%</td> <td>15.3%</td> </tr> <tr> <td>변화</td> <td>0.9%p</td> <td>0.8%p</td> <td>0.8%p</td> <td>0.7%p</td> <td>0.7%p</td> <td>0.8%p</td> </tr> </tbody> </table> <p>〈표 50〉 청년 창업률</p>				구분	전북	충남	충북	전남	강원	2022년	53,672	70,523	50,275	51,687	45,872	2023년	55,231	72,695	52,245	52,627	47,324	증가율	2.9%	3.1%	3.9%	1.8%	3.2%	구분	전북	충남	충북	전남	강원	전국	2022년	14.1%	14.4%	13.3%	14.2%	13.8%	14.5%	2023년	15.0%	15.2%	14.1%	14.9%	14.5%	15.3%	변화	0.9%p	0.8%p	0.8%p	0.7%p	0.7%p
구분	전북	충남	충북	전남	강원																																																			
2022년	53,672	70,523	50,275	51,687	45,872																																																			
2023년	55,231	72,695	52,245	52,627	47,324																																																			
증가율	2.9%	3.1%	3.9%	1.8%	3.2%																																																			
구분	전북	충남	충북	전남	강원	전국																																																		
2022년	14.1%	14.4%	13.3%	14.2%	13.8%	14.5%																																																		
2023년	15.0%	15.2%	14.1%	14.9%	14.5%	15.3%																																																		
변화	0.9%p	0.8%p	0.8%p	0.7%p	0.7%p	0.8%p																																																		

	<p>-가장 최근 산출치는 15.0%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낮은 수치</p> <p>&lt;청년 폐업률&gt;</p> <table border="1" data-bbox="517 416 1396 582"> <thead> <tr> <th>구분</th> <th>전북</th> <th>충남</th> <th>충북</th> <th>전남</th> <th>강원</th> <th>전국</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11.8%</td> <td>12.1%</td> <td>12.6%</td> <td>11.1%</td> <td>11.7%</td> <td>12.3%</td> </tr> <tr> <td>2023년</td> <td>13.6%</td> <td>13.8%</td> <td>14.4%</td> <td>13.1%</td> <td>13.4%</td> <td>14.1%</td> </tr> <tr> <td>변화</td> <td>1.8%p</td> <td>1.7%p</td> <td>1.8%p</td> <td>2.0%p</td> <td>1.7%p</td> <td>1.8%p</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51&gt; 청년 폐업률</p> <p>-전북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폐업률은 전국 평균 청년 폐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자금 압박이 높아지면서 폐업률이 전년보다 높아짐</p> <p>&lt;존속 연수별 폐업률&gt;</p> <table border="1" data-bbox="517 824 1396 990"> <thead> <tr> <th>구분</th> <th>6개월 미만</th> <th>6개월 ~1년</th> <th>1년 ~2년</th> <th>2년 ~5년</th> <th>5년 ~10년</th> <th>10년 ~15년</th> <th>15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전북 평균</td> <td>15.0%</td> <td>12.6%</td> <td>12.4%</td> <td>9.1%</td> <td>5.6%</td> <td>3.9%</td> <td>2.9%</td> </tr> <tr> <td>전북 청년</td> <td>18.7%</td> <td>17.1%</td> <td>16.5%</td> <td>12.8%</td> <td>7.6%</td> <td>5.0%</td> <td>1.5%</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lt;표 52&gt; 존속 연수별 폐업률</p> <p>-전북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존속 연수별 폐업률은 전반적으로 전북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p>	구분	전북	충남	충북	전남	강원	전국	2022년	11.8%	12.1%	12.6%	11.1%	11.7%	12.3%	2023년	13.6%	13.8%	14.4%	13.1%	13.4%	14.1%	변화	1.8%p	1.7%p	1.8%p	2.0%p	1.7%p	1.8%p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 ~2년	2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이상	전북 평균	15.0%	12.6%	12.4%	9.1%	5.6%	3.9%	2.9%	전북 청년	18.7%	17.1%	16.5%	12.8%	7.6%	5.0%	1.5%		
구분	전북	충남	충북	전남	강원	전국																																																	
2022년	11.8%	12.1%	12.6%	11.1%	11.7%	12.3%																																																	
2023년	13.6%	13.8%	14.4%	13.1%	13.4%	14.1%																																																	
변화	1.8%p	1.7%p	1.8%p	2.0%p	1.7%p	1.8%p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 ~2년	2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이상																																																
전북 평균	15.0%	12.6%	12.4%	9.1%	5.6%	3.9%	2.9%																																																
전북 청년	18.7%	17.1%	16.5%	12.8%	7.6%	5.0%	1.5%																																																
기준치	<p>&lt;청년 창업 건수&gt; : 55,231건(2023년 기준)</p> <p>&lt;청년 창업률&gt; 15.0%(2023년 기준)</p> <p>&lt;청년 폐업률&gt; 13.6%(2023년 기준)</p> <p>&lt;존속 연수별 폐업률&gt; : 2년 이내 폐업률 44%</p>	목표치	<p>&lt;청년 창업 건수&gt; : 2030년까지 68,000건 달성</p> <p>&lt;청년 창업률&gt; : 전국 평균 상회</p> <p>&lt;청년 폐업률&gt; : 전국 평균 하회</p> <p>&lt;존속 연수별 폐업률&gt; : 2년 이내 폐업률 40% 이내</p>																																																				
자료 경로	<p>통계데이터센터(통계청) 이용 신청 → 센터 승인→ 방문 후 자료 추출→ 추출 자료 사전 검토→ 반출 데이터 심의(화, 목)→ 심의 이후 데이터 반출 허가(센터 홈페이지)</p>	지표 관리 부서	<p>- 전북특별자치도(청년정책과, 창업지원과)</p> <p>-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p>																																																				

<표 48> '8-1-2 비정규직비율(%)'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지만, 청년만의 진취성이나 아이디어 활용성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성장 및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청년들이 다른 세대 및 다른 지역 청년들에 비해 얼마나 창업에 적극적 인지, 창업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내재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단순히 창업 건수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폐업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창업 건수뿐만 아니라 폐업 관련 지표도 같이 모니터링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지표의 정의

가. 청년 창업 건수

- 창업 건수는 해당 연도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도 포함하는 지표로 신규 창업 건수만을 고려할 경우, 시계열적인 변화가 불규칙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비슷한 통계 지표로 경제활동인구나 고용자 수와 같이 총량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서 창업 관련 지표도 신규 창업을 포함한 총량적인 지표로 사용함.

나.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인구 규모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대비 청년 창업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비슷한 통계 지표로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이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 시 해당 지표를 사용함.

- 전라북도의 창업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청년 창업 건수를 사용하되, 타 지역과의 비교 시에는 보조지표인 청년창업률을 사용함.

#### 다. 청년 폐업률

- 폐업률은 전체 창업 건수 대비 해당연도에 폐업한 비율을 의미하며, 폐업률이 낮을수록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건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라. 존속 연수별 폐업률(보조지표)

- 일반적으로 창업 후 1~3년차가 창업 Death Valley 라고 불리는데, 이 시기를 잘 지나야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이에 이 시기에 창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존속 연수별 폐업률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특정 시점의 폐업률이 높을 경우 정책에 대한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기업통계등록부(SBR) 제공 데이터 취득 방법

- 데이터 이용 방법 : 통계데이터센터(통계청) 이용 신청→ 센터 승인→ 방문 후 자료 추출→ 추출 자료 사전 검토→ 반출 데이터 심의(화, 목)→ 심의 이후 데이터 반출 허가(센터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사업체 수 기준 데이터 작성이 필요/사업체 3개 미만 항목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나. 기업통계등록부(SBR)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개별 사업체 주소(POI) → 읍면동/시군구/시도 추출
- 제공시기 : 연간/분기/월간
- 제공기준 : 대표자 기준/사업자등록 기준
- 사업자 구분 : 개인, 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
- 성별구분 : 남성, 여성, 미상
- 연령구분 : 사업체 대표자 나이(20대, 30대, 청년 구분 가능)
- 존속연수 : 개업 일자, 폐업 일자
- 폐업사유 :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양도·양수, 해산·합병 등 개별 폐업사유 기재
- 산업분류 : 산업분류코드 - 세세분류

- 기업규모 : 상출기업,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
- 기업정보 : 매출액, 종사자,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 성별, 연령별, 업태별, 존속 연수 등 데이터 항목 간 교차 분석 가능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청년 창업률(보조지표)

- '청년 창업률'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청년 창업률 산식} = \text{청년 창업 건수} / \text{청년 인구}$$

<표 53> 청년 창업률 산식

##### 나. 청년 폐업률(보조지표)

- '청년 폐업률'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청년 폐업률 산식} = \text{청년 폐업 건수} / (\text{가동사업체수} + \text{폐업 건수})$$

<표 54> 청년 폐업률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 (1) 청년 창업 건수 및 청년 창업률

- 전북의 2023년 청년 창업 건수는 55,231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함.
- 인접 유사한 규모의 지역인 4개 지역(충남, 충북, 전남, 강원)과 비교하였을 때, 충북, 전남, 강원보다는 많은 수치이며, 충남에 비해서는 작음.

지역	2022년			2023년			증가율(%)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전북	14,442	39,230	53,672	14,988	40,243	55,231	3.8%	2.6%	2.9%
충남	17,887	52,636	70,523	18,577	54,118	72,695	3.9%	2.8%	3.1%
충북	13,331	36,944	50,275	13,764	38,481	52,245	3.2%	4.2%	3.9%
전남	13,607	38,080	51,687	14,022	38,605	52,627	3.0%	1.4%	1.8%
강원	11,614	34,258	45,872	11,900	35,424	47,324	2.5%	3.4%	3.2%

<표 55> 청년 창업 건수

-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충남, 충북, 강원에 비해 낮은 수치로 증가율 측면에서 30대 청년 대상으로 창업 진흥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신규 창업을 유도해야 함.
- 보조지표인 청년 창업률 측면에서 전북의 2023년 청년 창업률은 15.0%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인근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전북보다 청년 창업률이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이는 20대의 창업률이 높기 때문임.
- 전국 평균인 15.3%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창업이 용이한 대도시 지역들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광역도 단위에서 청년들의 창업 시도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지역	2022년			2023년			변화(%p)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20대	30대	청년
전북	7.2%	22.0%	14.1%	7.7%	22.7%	15.0%	0.5%p	0.7%p	0.9%p
충남	7.6%	20.6%	14.4%	8.2%	21.5%	15.2%	0.6%p	0.9%p	0.8%p
충북	7.0%	19.6%	13.3%	7.5%	20.6%	14.1%	0.5%p	1.0%p	0.8%p
전남	7.2%	21.8%	14.2%	7.7%	22.7%	14.9%	0.5%p	0.9%p	0.7%p
강원	6.7%	21.3%	13.8%	7.1%	22.3%	14.5%	0.4%p	1.0%p	0.7%p
전국	7.1%	21.8%	14.5%	7.5%	22.8%	15.3%	0.4%p	1.0%p	0.8%p

〈표 56〉 청년 창업률

## (2) 청년 폐업률 및 존속 연수별 폐업률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3년 청년 폐업률은 13.6%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상환 압박,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폐업률이 더 높아짐.
- 전국 청년 폐업률 14.1%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전체 폐업률인 7.4%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들의 창업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 창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경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자금 지원이 요구됨.

지역	2022년				2023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북	6.7%	15.8%	10.1%	11.8%	7.4%	17.7%	11.9%	13.6%
충남	7.0%	16.0%	10.6%	12.1%	7.7%	17.3%	12.4%	13.8%
충북	7.1%	16.8%	10.9%	12.6%	7.9%	19.5%	12.4%	14.4%
전남	6.2%	14.6%	9.6%	11.1%	7.0%	17.6%	11.3%	13.1%
강원	6.8%	15.9%	10.1%	11.7%	7.4%	18.5%	11.7%	13.4%
전국	7.4%	16.8%	10.8%	12.3%	8.1%	18.8%	12.6%	14.1%

〈표 57〉 청년 폐업률

- 존속연수별로 청년폐업률을 보면, 1년 이내 폐업 확률 32%, 2년 이내 폐업 확률 44%, 5년 이내 폐업 확률 51%로 2022년에 비해 폐업 리스크가 높아짐.
- 창업 5년을 넘어가면 폐업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창업 아이템의 상업화 단계를 넘어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대출 이차 보전 등 자금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	2022년				2023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체	20대	30대	청년
전체	6.7%	15.8%	10.1%	11.8%	7.4%	17.7%	11.9%	13.6%
6개월 미만	13.5%	19.9%	13.1%	15.7%	15.0%	22.7%	16.0%	18.7%
6개월~1년	11.8%	18.6%	13.4%	13.1%	12.6%	20.5%	15.1%	17.1%
1~2년	10.9%	17.4%	12.7%	14.3%	12.4%	18.7%	15.3%	16.5%
2~5년	7.9%	12.4%	10.1%	10.7%	9.1%	15.0%	12.0%	12.8%
5~10년	5.1%	8.3%	6.5%	6.7%	5.6%	8.1%	7.5%	7.6%
10~15년	3.5%	-	-	4.2%	3.9%	-	-	5.0%
15년 이상	2.7%	-	-	2.3%	2.9%	-	-	1.5%

〈표 58〉 존속 연수별 폐업률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시기별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타 시도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창업 관련 통계에서 청년 만을 분리하여 지표를 분석하지 못해서 청년 창업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지표 개발을 통해 청년 일자리

- 확보 차원에서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북 청년 창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에서 창업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정책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함.
    -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이었던 국내 경제 구조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으나, 점점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유치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이 지역 경제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됨.
  - 사회초년생인 청년 입장에서 여러 조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 폐업률이 높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 청년 폐업률보다는 낮은 점은 고무적임.
    - 다만, 2023년은 전국적으로 거시경제 악화 등으로 자영업 등 창업 환경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폐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초기 단계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임.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청년 창업 건수) 55,231건 (2023년 기준)
  - (청년 창업률) 15.0% (2023년 기준)
  - (청년 폐업률) 13.6% (2023년 기준)
  - (존속 연수별 폐업률) 2년 이내 폐업률 44%
- 목표치
  - (청년 창업 건수) 2030년까지 68,000건 (연평균 3% 증가)
  - (청년 창업률) 2030년까지 23.0% (연평균 1.0%p 증가)
  - (청년 폐업률) 전국 평균 하회
  - (존속 연수별 폐업률) 2년 이내 폐업률 40%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9-1-1. 사회적기업 수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전북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지역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지역사회 서비스 보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
- 사회적기업 인증 실적이 2021년 27개에서 2025년 10개로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생태계 재정비와 지속가능성 점검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전북 사회적경제의 성장 단계, 유형별 확산, 정책 효과성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과 지원체계 재설계를 위한 핵심 근거를 제공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9-1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9-1-1	사회적기업 수

〈표 59〉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인증 수가 27개(2021년)에서 10개(2025년)로 감소하며 전반적인 축소 추세가 나타남.
- 예비사회적기업의 3년 전환 규정에 따른 자연 소멸과 전환 실패 사례가 증가해 신규 진입 기반이 약화함.
- 일자리 제공형이 152개로 유형 편중이 지속되며 사회적기업 구조의 다양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함.

- 서비스 제공형·창의 혁신형의 증가 흐름은 있으나 전체 감소세를 상쇄할 만큼의 확장 효과는 제한적임.
- 사회적기업 수 감소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기반의 안정성 점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시·군별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적기업 수 변화를 연계 분석 필요.

목 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세 부 목 표	9-1.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지표명	9-1-1. 사회적기업 수			
필요성 및 의 의	<p>-최근 5개년 동안 사회적기업 인증 수가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며 전북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축소와 전환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p> <p>-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로, 지역경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초지표로서 의의가 큼.</p> <p>-예비→인증 구조, 유형 편중, 지역별 편차 등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며, 정책 설계와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모니터링 지표로 기능함.</p>			
지 표	정의	<p>-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당 연도에 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총수를 산정한 지표</p> <p>-예비사회적기업은 포함하지 않으며, 인증 취소·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기업은 제외함.</p>		
	산출 논리	<p>-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명부에서해당 연도 기준으로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만을 추출</p> <p>-인증 취소, 유효기간 만료, 자격 상실 기업은 제외하여 실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수를 확정</p>		
	자료원 또는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산정 방법	인증 유지 사회적기업의 총수 단순 합산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 사이트 활용 (www.seis.or.kr)		
	현황	-전북의 사회적기업은 최근 5년 동안 2021년 27개에서 2025년 10개로 감소하며 지속적인 축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3년 일시적으로 20개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24년 12개, 2025년 10개로 다시 줄어들어 전반적인 신규 인증 기반 약화가 나타나고 있음.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152개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준치	2025년 현재 226개 소 (전국 약 6%)	목표치	현행 전국 대비 6.0% 비중 6.5~7.0% 수준으로 상향하여 전북이 전국 평균을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중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
자료 경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60〉 ‘9-1-1. 사회적기업 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사회적기업 수는 전북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규모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임.

##### (2) 지표의 정의

- 본 지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해당 연도에 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총수를 의미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포함하지 않으며, 인증 취소·만료, 휴·폐업 등 자격을 상실한 기업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SEIS)에서 해당 연도의 인증 유지 사회적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시기 : 2025년 조사 시점(연간)
- 제공기준 : 유형별 구분 제공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사회적기업 수

- '사회적기업 수'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ast \text{ 사회적기업 수} = \text{단순 합산}$$

<표 61> 사회적기업 수 산식

### 5. 지표 분석 결과

#### (1) 사회적기업 수

- 전북의 사회적기업 수는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며 신규 진입 기반 약화와 생태계 축소 추세가 확인됨.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 실패와 자연 소멸 증가가 신규 인증 기업 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사회적기업	27	16	20	12	10	226

<표 6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현황(2025년 11월 30일)

(단위 : 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4	26	27	10	15	8	14	4	3	5	4	7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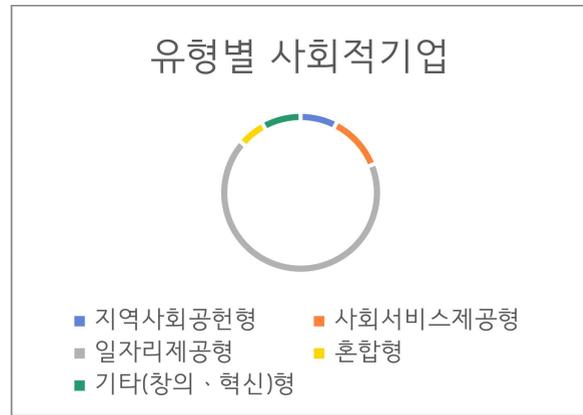
<표 63>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별 사회적기업(2025년 11월 30일 기준)

#### (2) 유형별 사회적기업

-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152개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구조가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형·창의 혁신형의 성장은 제한적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개)

지역사회공헌형	17
사회서비스제공형	26
일자리제공형	152
혼합형	13
기타(창의·혁신)형	18



<표 64> 사회적기업 유형별(2025년 11월 30일 기준)

### (3) 2025년 사회적기업 증가 속도 둔화

- 전국 비교에서는 전북의 사회적기업이 226개(6.0%)로 전국 평균(221개)과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 속도는 둔화하여 전국 평균 대비 우위 유지가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됨.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의 사회적기업 수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성장기에서 전환기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 신규 인증기업의 지속적 감소는 전북 사회적경제 기반이 양적 확장에서 질적 안정과 구조 재편의 단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 실패와 유형 편중 현상은 지원체계의 효과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 전북이 전국 평균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226개, 6.0%) 증가세 둔화는 향후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됨
- 단순한 기업 수의 변화가 아니라, 전북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와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주는 핵심 진단 지표로 판단됨.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2025년 전국 평균 : 221개
- 목표치
  - 전북의 사회적기업 수 목표치는 현행 전국 대비 비중 6.0%를 6.5% 이상으로 상향하여 전북의 사회적경제 기반이 전국 평균을 안정적으로 초과하도록 설정함.
  - 기점으로 약 245개(전체 대비 6.5%)를 목표치로 제시하며, 장기적으로는 7.0% 수준인 263개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향함.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예비 → 인증 전환 지원체계 강화
  - 초기 3년 동안 사업모델 안정화, 재무구조 개선, 인증 준비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전환 집중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 인증 심사 항목(지배구조·사회적 목적·수익구조 등)을 사전 점검하는 '예비 점검제'(Pre-Check System) 도입 제안
- 유형 편중 완화를 위한 성장지원 패키지
  - 일자리 제공형 편중(152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제공형·창의 혁신형별 성장 패키지(R&D, 시범사업, 사업모델 테스트베드) 신설
  - 지역문제 기반 모델(돌봄, 농산어촌 서비스,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테마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 지역문제 해결형 공공수요 연계 사업
  - 지자체·공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명확히 제시하고 사회적기업이 이를 해결하는 문제기반 수요연계 사업(PPP 모델) 추진 (예: 농촌 고령자 서비스, 마을 환경관리, 문화복지 프로그램)
- 지역사회 기반 실험(Experimental Lab) 운영
  - 도민이 직접 문제를 제안하면 사회적기업이 해결을 시도하는 지역문제 실험실(Living Lab) 운영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가능

## ◆ 용어 정의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로, 일반 기업처럼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의거,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사회적기업 5가지 유형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9-1-2. 공공기업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율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전북 공공기관 간 구매율 편차가 크며 광역본청은 1.42%지만 익산시(23.43%), 전주시(11.42%) 등 높은 기관도 있어 기관별 실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지역 사회적기업 조직의 시장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수단임.
- 전북 전체 공공기관의 실제 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 전체의 공공구매 역량을 상향 표준화.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9-1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9-1-2	공공기업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율

〈표 65〉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전북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기관별 편차가 크며, 일부 시·군(익산 23.43%, 전주 11.42%)은 높은 실적을 보였지만 광역본청(1.42%)은 목표 달성도가 낮아 전반적 균형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 확대 목표에 따라 일부 기관은 계획치를 적극 상향했으나, 기관 간 정책 이행 수준의 차이로 전체 평균 향상 속도는 제한적임.
- 전북 전체 공공기관 실적을 종합하면 사회적기업 구매 비율 확대를 위한 기반은 마련

되고 있으나, 실적이 낮은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현재 자료가 사회적기업 전체가 아닌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향후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전체 사회적기업 조직을 포함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로 확장
- 익산·전주 등 우수기관의 구매 전략과 사례를 전 도(全道) 기관에 공유하는 모범사례 확산형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 구매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를 지속 추적하고, 실적 향상 여부를 기관 평가와 연계하는 성과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
- 공공기관 간 구매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전반의 구매 실적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율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목 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세 부 목 표	9-1.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지표명	9-1-2 공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			
필요성 및 의 의	-전북 공공기관 간 구매율 편차가 커, 전체 공공구매 체계를 균형 있게 개선하기 위한 핵심 관리 지표가 필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시장 확보 수단으로, 지역사회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확충에 직접 기여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을 체계적으로 높이면 전북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규모와 안정성 강화에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만들.			
지 표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도청, 교육청, 시·군, 공사·공단 등)이 연간 전체 구매액 중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지출한 비율을 의미		
	산출 논리	-전북 내 공공기관(도청·교육청·시·군·공사·공단 등)의 연간 총 구매액을 합산 -같은 해 사회적기업으로부터의 구매액을 집계		
	자료원 또는 출처	-고용노동부, 「24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25년 구매 계획」	산정 방법	우선 구매율(%) = 사회적기업 구매액 ÷ 공공기관 총구매액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24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25년 구매계획」 수치 확인 및 재가공		
현황	-전북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광역 본청의 구매율은 1.42%로 낮은 수준이지만, 익산시(23.43%)와 전주시 (11.42%) 등 일부 시군은 높은 실적을 보임.		
기준치	전북 평균 구매율 약 5.0%	목표치	목표치 7%(전북 14개 시군 중 6% 이상 실적을 낸 시군이 여러 곳 존재)
자료 경로	-고용노동부_공지사항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 경제과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66〉 '9-1-2 공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참여 수준의 핵심 지표임.
- 사회적기업의 매출 기반과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공공 역할의 정도를 나타냄.
- 기관별 구매율 격차를 파악함으로써 전북 전체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균형성과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2) 지표의 정의

- 전북 내 공공기관(도청·교육청·시·군·공사·공단 등)이 연간 총구매액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서비스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참여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임.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고용노동부 「24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및 25년 구매계획」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도청, 교육청, 14개 시·군, 공사·공단, 의료원 등)
- 제공시기 : 2024년 기준 공공기관 구매실적 자료(매년 고용노동부 집계 후 제공)
- 제공기준 : 전북 소재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집행한 전체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서비스 금액의 비율(%)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가 아닌 사회적기업 구매액만 포함.

#### (4) 지표산출 방법

##### 가. 공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

- '공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 = (\text{사회적기업 구매액} \div \text{공공 기관 구매액}) \times 100$$

<표 67> '공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 (1) 공공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 전북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평균 약 5% 수준으로, 전국 평균(3.08%)을 상회하지만 기관 간 편차가 매우 큰 구조가 확인됨.
- 익산시(23.43%), 전주시(11.42%) 등 일부 시·군은 전국 상위권 구매율을 기록했으나, 도청(1.42%), 남원(1.73%), 순창(1.85%) 등 저조기관은 2% 미만으로 실적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남.
- 평균값을 견인하는 우수기관과, 평균 이하로 머무르는 다수 기관 간 구매역량 격차가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으며, 이는 구매목표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를 기관별 수준에 맞게 차등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전체가 아닌 사회적기업 구매실적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북 사회적경제 전반의 공공조달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구매실적	2025년 구매계획
전주시	4,206(11.42)	14,640(28.37)
군산시	4,758(6.08)	4,152 (5.31)
익산시	11,639(23.43)	2,589(5.67)
정읍시	756(2.82)	1,964(7.18)
남원시	2,351(1.73)	2,700 (2.29)
김제시	2,001(6.22)	2,008 (6.24)
완주군	1,997(2.4)	2,000 (2.41)
진안군	1,288(8.6)	1,193(7.97)
무주군	918(6.42)	947 (6.61)
장수군	404(2.06)	409(0.53)
임실군	560(5.83)	430(4.62)
순창군	1,190(1.85)	1,971 (3.06)
고창군	882(3.97)	46 (5.69)
부안군	1,947(7.4)	2,076 (8.39)
전북특별자치도	858(1.42)	1,692(3.0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5,617(4.02)	16,775(3.69)
전북개발공사	279(2.25)	294(2)
전주시시설관리공단	71(2.19)	60(2.42)
익산시도시관리공단	35(5.03)	39(3.59)
장수한우지방공사	0(0)	168(3.0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81(1.17)	329(2.27)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62(3.09)	116(2)
전라북도 진안군의료원	103(5.87)	91(4)
전체	5.0%	

〈표 68〉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2024년도)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의 평균 구매율은 약 5% 수준으로 전국 평균(3.08%)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익산·전주 등 일부 우수기관의 높은 실적에 크게 의존한 결과로, 전북 전체 공공구매 역량이 고르게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음.

- 도청·일부 시군의 구매율이 2% 미만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공공구매 체계는 기관 간 역량 차이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기관별 맞춤형 관리 및 지원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 익산시는 2024년 전국 최고 수준의 구매율(23.43%)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구매계획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우수기관조차 정책의 연속성과 목표설정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드러냄.
- 전체적으로 보면 전북의 공공구매 기반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우수기관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전 기관의 균형적 참여와 제도적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지표는 사회적경제 전체가 아닌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북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체(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의 공공조달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까지 포함하는 통합 지표로의 확장이 필요.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전북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율을 5%.
- 목표치
  - 전북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율을 7% 상향.
  - 시군 간 편차 축소를 위해 저조기관(2% 미만)을 최소 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2023년까지의 중요한 개선 목표 설정 (도청(1.42%), 남원(1.73%), 순창(1.85%) 등이 대표적 대상).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기관별 목표 설정과 실적관리 체계를 표준화하여 편차를 줄임.
  - 익산·전주 등 우수기관의 구매율은 높지만 도청·일부 시군은 2% 미만으로 머무르고 있으며, 익산시는 2025년 구매계획에서 조정 폭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문제가 확인됨.
- 사회적기업 구매 전담 창구 또는 담당자 교육체계를 강화
  - 정기적인 조달교육·공공구매 매뉴얼·실적 점검 회의를 통해 사회적기업 구매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야 함.

- 지표 범위를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 전체'로 단계적 확장
  - 향후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의 구매 실적까지 포함하는 통합지표를 구축하여 지표의 대표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용어 정의

- 공공기관 : 전라북도 내 도청, 교육청, 14개 시군, 공사공단, 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전체를 포함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용역·서비스로, 공공기관이 구매 가능한 조달·입찰·계약 대상 품목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 : 공공기관의 연간 총구매액 중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구매실적 : 해당 연도 공공기관이 실제로 집행한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금액을 의미하며, 계획액과 구분됨.
- 구매 참여기관
  - 해당연도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단 1건이라도 구매한 공공기관을 의미함.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9-1-3.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기업 수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전북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정체기에서 전환기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신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
- 예비 → 인증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에서 소멸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육성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증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
- 전주·익산·군산 중심의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균형 있게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9-1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9-1-3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기업 수

〈표 69〉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인증 수가 27개(2021년)에서 10개(2025년)로 감소하며 전반적인 축소 추세가 나타남.
- 예비사회적기업의 3년 전환 규정에 따른 자연 소멸과 전환 실패 사례가 증가해 신규 진입 기반이 약화함.

- 전주·익산·군산 중심의 육성 편중이 지속되며, 일부 시군은 예비·인증 신규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을 보이는 등 지역 간 균형적 육성 목표는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이 정부 공모 방식·시기 변화에 민감하므로, 정책 발표 전후의 수요·공모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연도별 편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신규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게 필요함.

목 표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세 부 목 표	9-1.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한다.			
지표명	9-1-3.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기업 수			
필요성 및 의 의	<p>-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신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규모는 전북의 사회적경제 기반이 성장·확대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줌.</p> <p>-사회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성장 경로를 예비 → 인증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육성·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p> <p>-전주·익산·군산 중심의 편중된 육성 구조를 개선하고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설계와 재정 투입의 방향성을 제시함.</p>			
지 표	정의	-전북 도내에서 해당 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신규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수를 합산한 지표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창업·육성 규모와 성장 흐름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함.		
	산출 논리	-고용노동부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명부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만을 추출 -인증 취소, 유효기간 만료, 자격 상실 기업은 제외함.		
	자료원 또는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산정 방법	인증 유지 예비사회적기업의 총수 단순 합산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 사이트 활용(www.seis.or.kr)		
	현황	<p>-전북의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은 2021년 27개, 2022년 16개, 2023년 20개, 2024년 12개, 2025년 10개</p> <p>-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은 2021년 0개, 2022년 1개, 2023년 18개, 2024년 8개, 2025년 13개</p>		

기준치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13 + 인증기업 10 = 총 23개 소	목표치	2030년도 단순 합산 28개 소	
자료 경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 (www.seis.or.kr)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 경제과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70〉 '9-1-3.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기업 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사회적기업 수는 전북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규모와 역량을 갖 추고 있는지를 가장 기초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지정과 사회적기업의 신규 인증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
- 예비 → 인증으로 이어지는 전환 구조의 건전성, 그리고 각 시군의 육성 역량 및 정책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임.

##### (2) 지표의 정의

- 2025년도에 전북 지역에서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신규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수를 합산한 지표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창업·육성 규모와 성장 흐름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함.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포털(SEIS)에서 해당 연도의 예비·인증 유지 사회적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함.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시기 : 2025년 조사 시점(연간)
- 제공기준 : 유형별 구분 제공

(4) 지표산출 방법

가. 사회적기업 수

- '사회적기업 수'는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사회적기업 수 = 단순 합산

〈표 71〉 '사회적기업 수' 산식

나. 예비사회적기업 수

-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예비사회적기업 수 = 단순 합산

〈표 72〉 '예비사회적기업 수' 산식

5. 지표분석 결과

(1) 지역 간 사회적기업 육성 역량 격차 존재

- 육성 실적은 전주·익산·군산 등 몇 개 도시 중심의 편중 구조가 강화되는 반면, 일부 시군은 2025년 신규 예비·인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함. 이는 지역 간 육성 역량 격차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시사함.

(단위 : 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94	26	27	10	15	8	14	4	3	5	4	7	6	3	226
8	7	6	2	3	3	6	1	1	0	0	1	0	2	40

〈표 73〉 전북 14개 시·군별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수(2025년 11월 30일 기준)

(2) 전북의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수

- 2025년 전북의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수는 10개로 지속 감소하였음. 특히 2024년·2025년에 발굴된 예비사회적기업은 당해 연도의 성과가 아닌 다음 연도(2025~2027년)의 인증 전환 성과로 이어지는 시차 효과가 존재하며, 이는 예비 발굴 증가에도 인증 실적이 즉시 상승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

(단위 :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사회적기업	27	16	20	12	10	226
예비사회적기업	0	1	18	8	13	40

〈표 74〉 전북특별자치도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2025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 개)

사회적기업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	
지역사회공헌형	17	지역사회공헌형	10
사회서비스제공형	26	사회서비스제공형	6
일자리제공형	152	일자리제공형	18
혼합형	13	혼합형	2
기타(창의·혁신)형	18	기타(창의·혁신)형	4
합계	226	합계	40

〈표 75〉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2025년 11월 30일 기준)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의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수는 최근 5년 동안 27개 → 16개 → 20개 → 12개 → 10개로 지속 감소하여, 예비 → 인증 단계의 전환 이행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한 흐름이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전주·익산·군산 중심의 육성 편중 현상이 지속되며, 일부 시군은 최근 5년간 예비·인증 신규 기업이 거의 없는 구조적 공백 지역으로 나타남.
-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 실패와 유형 편중 현상은 지원체계의 효과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인증 전환율 저하와 지역별 편차, 예비사회적기업기업 소멸 구조 등이 중첩되면서 전북의 사회적기업 육성 체계는 안정적 성장 기반이 보완되어야 하는 단계로 판단됨.

## 7. 2030년까지 신규 육성 기업 개선 목표

- 기준치
  -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13개, 사회적기업 인증 10개로 총 23개임.
- 목표치
  - 2030년 전북의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 목표치는 직전 연도 기준치 23개 대비 약 20% 상향한 28개로 설정
  - 2030년에 발굴된 예비사회적기업(18개)이 2024~2026년 인증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전주·익산·군산 등 주요 시군의 육성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하면서도 도내 육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정 목표로 판단됨.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예비 → 인증 전환 지원체계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 지정 직후부터 인증 요건 충족 교육, 재정지원 연계, 1:1 컨설팅을 통합한 전환 전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발굴·육성사업 추진
  - 전주·익산·군산 중심의 편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육성이 적은 시군에 '찾아가는 발굴 컨설팅', '지역 특화형 모델 개발 지원', '소규모 시군 전담 기획단' 등을 배치하여 지역 간 육성 역량을 균형화 필요
- 인증 전환 실패 요인 진단 및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최근 인증 감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증 탈락 사례 분석, 예비사회적기업의 준비도 평가, 재정·경영 문제 파악을 수행하고 탈락 사유별 맞춤형 개선 패키지(서류, 사업성, 인건비 구조 등)를 신설하여 전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용어 정의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형태로, 일반 기업처럼 돈을 벌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일부를 아직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나 조직을 말함.
  - 지정 목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사회적기업과의 차이점 :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엄격한 요건(예: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등)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지정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음.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12-1-1.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 17개 목표 중 열두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에 시범지표로 설정함.
- 지속가능한 생산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제품에는 녹색인증상품이 있음. 이에 전북지역 기업의 녹색인증상품과 기업 인증을 파악하여 지역의 녹색경제 탄소중립 이행지표로 관리하고자 함.
-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과제 86번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의 발맞추어 전북기업의 친환경 확대와 소비는 지역의 탄소를 줄이고, 기업을 살리고, 소비를 통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음.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자원 재순환 및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9-1-1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

〈표 76〉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SDGs 12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12-1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지표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시범지표 및 보조지표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인증 위탁받은 '한국환경기술산업원'에

기업인증 현황을 안내하는 '에코스퀘어'에서 지역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광역별 인증업체수와 전북기업 수를 파악함.

- 녹색제품인증은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농산물에 친환경인증은 제외되었음. 녹색제품의 분류는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으로 구분되고 녹색제품은 인증기업체별로 한 기업에서 품목별 다수의 제품을 받을 수 있어 품목과 업체 수는 중복이 될 수 있음.
- 환경표지인증(2025.10.31)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시 전국 4,881개 업체, 전북은 167개 업체이며, 저탄소인증은(2025.06.30) 전국 318개 업체, 전북은 7개 업체에 불과하며 우수재활용인증은(2025.08.06) 전국 351개 업체, 전북은 11개 업체에 불과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에 의거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가 2025년 7월 1일 개소하여 전북기업의 녹색제품인증 활성화와 유통·소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년 전국 및 전북인증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지표 이행이 가능함.

목 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 부 목 표		12-1 자원 재순환 및 친환경 제품 소비촉진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지표명		12-1-1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
필요성 및 의 의		-녹색경제 전환의 전북기업 친환경 확대는 지속가능한 생산에도 기여함. -녹색제품 소비는 지역의 탄소를 줄이고, 기업을 살리고, 소비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음.
지표	정의	-녹색제품의 분류는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음. -녹색제품 인증기업은 환경부에서 인증하며, 인증 심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
	산출 논리	-한국환경기술산업원에 기업인증 현황을 안내하는 '에코스퀘어'에서 지역별 분류 작업을 통하여 광역별 인증 업체수와 전북 기업수를 파악함.

자료원 또는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정 방법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을 구분하여 전국 대비 전북 비교	
작성 방법	-3개(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인증별, 전국 대비 전북인증기 업을 비교하여 작성함.			
현황	(단위 : 개)			
	분류	지역	품목	업체
	환경표지인증 (2025.10.31. 기준)	전국	18,659	4,881
		전북	3,160	167
	저탄소인증 (2025.06.30. 기준)	전국	1,189	318
전북		7	7	
우수재활용인증 (2025.08.06. 기준)	전국	425	351	
	전북	15	11	
〈표 78〉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인증제품(품목, 업체) 현황(2025년)				
기준치	2025년 기준 -환경표지인증 : 167개 업체 -저탄소인증 : 7개 업체 -우수재활용인증 : 11개 업체	목표치	2030년 까지(행정자료 기준) -환경표지인증 : 309개 업체 -저탄소인증 : 38개 업체 -우수재활용인증 : 42개 업체	
자료 경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인 증통계 요청함. -저탄소인증 → 환경산업기술원(에코 스퀘어) 전북인증기업을 분류함.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 책과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77〉 '12-1-1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전북은 농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함. 최근 신산업중심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완제품보다는 중간 부품이나 산업용 제조업체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품목은 부족한 상황임.
- SDGs 2030 17개 목표 중 열두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자원순환법에 의한 목표설정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인증 녹색제품 전북기업을

파악하고 인증기업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거 민간 부문의 민관협력 기관인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2025.07.01.)에서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수 현황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탄소중립 이행 지표로 관리하고자 함.

## (2) 지표의 정의

- 전북에 소재한 기업 중, 정부가 인증하는 주요 녹색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성 및 자원순환 우수성을 공인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총수를 측정하는 지표임.
- 전북 지역의 녹색산업 경쟁력과 친환경 생산 및 소비 문화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활용함.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한국산업환경기술원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자체 조사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행정자료 분석을 통한 자체 조사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전국,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시기 : 2025년 조사 시점(연간)
- 제공기준 : 인증 품목 및 기업체 수(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구분 제공

## (4) 지표산출 방법

### 가. 녹색인증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 '녹색인증제품'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 녹색인증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 인증별 전국 조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인증수 산출

<표 79> 녹색인증제품 산식

## 5. 지표 분석 결과

### (1) 환경표지인증

- 인증 방법은 업체와 품목으로 구분함. 업체와 품목 수가 다른 이유는 1개 업체가 품목별로 다수를 인증받기 때문임. 전국 인증 품목은 18,659개이며 4,881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나 전북은 167개 업체가 3,160개 품목을 인증받았음.
- 전북인증 주 품목을 보면 인쇄용지, 가구, 좌변기, 벽지, 단열재, 창호, 주방용세제, 합성수지 제품 등임.

### (2) 저탄소인증

- 전국은 318개 업체가 1,189품목을 인증받았으나 전북은 7개 업체가 인증받았음. 품목으로는 콘크리트 1종, 단열재 6종으로 7개 인증에 불과함.

### (3) 우수재활용인증

- 전국은 351개 업체가 425개 품목을 인증받았으나 전북은 11개 업체가 15개 품목을 받았음. 부산물 비료, 신문 용지, 하수슬러지연료탄 정도임.

(단위 : 개)

분류	지역	품목	업체
환경표지인증 (2025.10.31. 기준)	전국	18,659	4,881
	전북	3,160	167
저탄소인증 (2025.06.30. 기준)	전국	1,189	318
	전북	7	7
우수재활용인증 (2025.08.06. 기준)	전국	425	351
	전북	15	11

<표 80>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인증제품(품목, 업체) 현황(2025년)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녹색제품인증에 대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파악됨. 이는 적극적으로 인증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낮으며 특히 정책적으로 인증에 대한 기업에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처가 있어야 소비자도 이용이 가능하고 녹색구매 소비가 결국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함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임에도 현재 전북에 녹색매장은 9개에 불과하여 차후에는 녹색 매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2025년 기준 : 환경표지인증(167개 업체), 저탄소인증(7개 업체), 우수재활용인증(11개 업체)
- 목표치
  - 2023년까지 행정 자료(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를 참고하여 목표치를 설정함.

(단위 : 개 업체)

구분	'25년 11월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환경표지인증	전국 4,881 전북 166 (3.4%)	전북 195 (증 29) (4%)	전북 244 (증 49) (5%)	전북 292 (증 48) (6%)	전북 341 (증 49) (7%)	전북 390 (증 49) / (8%) '25년 대비 2배 이상
저탄소인증	전국 318 전북 7 (2.2%)	전북 13 (증 6) (4%)	전북 19 (증 6) (6%)	전북 25 (증 6) (8%)	전북 32 (증 7) (10%)	전북 38 (증 6) / (72%) '25년 대비 5배 이상
우수재활용인증	전국 351 전북 11 (3.1%)	전북 14 (증 3) (4%)	전북 21 (증 7) (6%)	전북 28 (증 7) (8%)	전북 35 (증 7) (10%)	전북 42 (증 7) / (12%) '25년 대비 3배 이상

<표 81>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인증제품(업체수) 확대 계획(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전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필요
  - 현재,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현재 60여개 기업이 모여 친환경인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요청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임. 더 많은 기업들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함.
- 공공기관 소통·협력
  -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는 2025년 3분기부터 환경표지인증 기업에 대한 심사비 지원이 되고 있음. 기업 관련 공기관부터 인증기업 확대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심사비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함.
- 녹색매장 및 교육 확대
  - 친환경인증기업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장 확대가 필요함. 녹색매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형매장 등은 의무적 인증과 제로웨이스트샵들이 포장지 사용을 덜 하고 소분업 판매를 하는 녹색가게 인증도 지역에

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 고등학생부터 성인 대상 녹색소비자 교육도 확대하여 소비자로서 녹색 제품구매도 탄소중립의 실천활동임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 용어 정의

- 녹색인증제품 : 제품의 전 과정(생산, 소비, 폐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성이 우수하여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은 제품을 통칭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함.
  - 녹색인증제품 구성 주요 인증 현황

구분(인증제품)	주관 부처 및 법령	인증 내용
환경표지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에너지, 자원 소비 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개선한 제품
저탄소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 탄소감축률을 달성한 제품
우수재활용(GR)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품질, 성능, 친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정부가 공인한 제품

<표 82> 녹색인증제품 구성 주요 인증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경제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12-1-2.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 17개 목표 중 열두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에 설정되었음.
- 녹색제품은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4조 4항'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녹색제품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정부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공식 인증한 제품으로 지역 공공기관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한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연간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의무 구매율 지표를 관리하여 지역의 녹색경제 탄소중립 이행 지표로 관리하고자 함.
- 이에 전북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파악하여 전북기업에는 녹색제품 인증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구매 비율을 늘리며 소비자 역시 녹색제품 구매가 함께 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음.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자원 재순환 및 친환경 제품 소비촉진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12-1-2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표 83〉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2025.09.26.)에 의하면 전북 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3년도에 비하여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표4) 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 포함 녹색제품 3개년(2021년~2023년) 목표치 비율은 21.40%로 2025년 10월 현재 22.2%로 목표치는 달성하였음.<표5>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비율에 대한 통계는 현재 전북도 전체 구매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별 구매 실적 산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구매 실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타당함. 현재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에코스퀘어)에서 도, 14개 시군, 출자출연기관(16개) 실적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표 모니터링 가능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녹색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이 존재하는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기업의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며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함. 현재는 의무 구매금액은 가능하지만 의무구매 비율은 권고사항에 불과함.

목 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 부 목 표		12-1 자원 재순환 및 친환경 제품 소비촉진 생활문화를 정착한다.
지표명		12-1-2 공공기관 녹색구매 의무 구매율
필요성 및 의 의		공공기관의 녹색제품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함. -전북지역 녹색제품 인증기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매출은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전북 공공기관을 통한 구매 지표는 의미가 있음.
지표	정의	-녹색제품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정부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공식 인증한 제품을 말함. 공공기관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매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연간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논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한 전국 공공기관 녹색제품 매출액을 파악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에서 산출된 전북 녹색제품 구매 실적 현황을 참고함.				
자료원 또는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산정 방법	광역 분청 및 소속기관 구매 실적 현황		
작성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구매 실적				
현황	(단위 : 원, %)				
	구분	총구매액 (A)	녹색구매액 (B)	구매이행계획	구매율(B/A)
	전북 특별자치도 *소속기관 포함	26,668,029,932	5,917,519,748	21.4	22.2
〈표 85〉 녹색제품 구매 실적(구매이행 계획 포함 / 2025년 11월 말)					
기준치	매년 총구매이행계획	목표치	구매율 21.4%이상		
자료 경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공공기관 녹색제품정보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자료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 책과 -전북지속협 경제위원회	

〈표 84〉 '12-1-2 공공기관 녹색구매 의무 구매율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지표는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친환경적인 제품(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준을 나타냄. 이는 국가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법에 명시된 획일적인 구매 비율은 없으나, 녹색제품 구매율은 공공기관이 의무 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평가를 받는 핵심 지표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 이 지표가 곧 기관이 달성해야 할 '사실상의 의무 구매 비율' 역할을 하고 있음.

## (2) 지표의 정의

- 이 지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한 금액이 전체 구매 대상 품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성과 지표임.
- 녹색제품이란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한 제품을 말하며, 주로 다음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미함. 환경표지제품(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 저탄소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코스퀘어) 전국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자행정자료 분석을 통한 자체 조사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 제공시기 : 2025년 조사 시점(연간)
- 제공기준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녹색제품 구매액(2021년~2024년), 전북 광역 및 14개 시·군 녹색제품 구매액 구분 제공

## (4) 지표산출 방법

### 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 \frac{\text{당해 연도 녹색제품 구매액}}{\text{당해 연도 총 구매액(녹색제품 구매액 + 비 녹색제품 구매액)}}$$

<표 86>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산식

## 5. 지표 분석 결과

### (1) 구매 규모 측면

- 4년간 인구수가 비슷한 4개 광역지자체(전남, 충북, 강원) 중 전북의 구매액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남(147,011백만원)의 절반 수준(49%)을 보임.
- 충북은 2021년도에 전북보다 구매액이 높았으나,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전북보다 높았음. 2024년 다시 충북(88,360백만)이 전북(72,066백만원)보다 높은 구매액을 기록함.

### (2) 성장 추이 및 변동성 측면

- 전북은 2021년 71,655백만원에서 2023년 77,781백만원까지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도에 -7.3%를 기록하며 다시 2021년 수준으로 하락했음. 이는 비교 대상 지자체 중 충북(-14.9%)과 강원(-13.0%)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임.
- 전남은 4년 동안 가장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음. 2021년 114,729백만원에서 2024년 147,011백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증감률도 +1.8%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충북과 강원은 모두 2023년도에 높은 구매액을 기록했으나, 2024년도에 각각 -14.9%와 -13.0%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이는 대규모 공사나 특정 사업 종료로 인한 일시적인 구매 감소로 추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구매금액	전년 대비 증감율
서울	184,791	186,979	207,266	216,396	4.4%
부산	57,477	78,624	85,230	69,782	- 18.1%
대구	40,308	45,413	54,260	51,888	- 4.4%
인천	81,070	139,096	103,370	112,979	9.3%
광주	34,157	44,491	47,746	47,782	0.1%
대전	32,201	33,459	43,940	34,533	- 21.4%
울산	24,873	29,791	30,296	43,468	43.5%
세종	8,308	9,850	9,856	11,483	16.5%
경기	349,125	389,808	393,558	449,553	14.2%

강원	93,750	91,214	113,665	98,889	- 13.0%
충북	78,312	99,191	103,885	88,360	- 14.9%
충남	92,451	117,272	129,445	139,490	7.8%
<b>전북</b>	<b>71,655</b>	<b>75,035</b>	<b>77,781</b>	<b>72,066</b>	<b>- 7.3%</b>
전남	114,729	129,999	144,368	147,011	1.8%
경북	119,723	128,829	163,065	186,709	14.5%
경남	107,753	125,444	163,642	153,280	- 6.3%
제주	31,505	32,520	31,617	30,456	- 3.7%

〈표 87〉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녹색제품 구매액(2021년~2024년)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북의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도에 72,06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하며 4개년 중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하였으나, 정부에서 정한 녹색제품 3개년(2021년~2023년) 목표치 비율은 21.40%로 2025년 10월 현재 22.2%로 목표치는 달성하였음.
- 전남(전북의 2배)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이고, 전북은 충북(88,360백만원)이나 강원(98,889백만원)보다도 구매액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심지어 전년 대비 감소세(비교 지자체 간 녹색제품 구매 실천 격차 더욱 심화)까지 보였다는 점은 지속 가능발전 및 녹색구매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 기준치 및 목표치

- 현재 정부에서는 광역별(출자,출현기관별) 분야별(자활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중증장애인, 녹색제품)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실적 관리 중으로 2025년도는 전북은 21.4%임. 따라서 기준치와 목표치는 광역에서 설정할 수 없음.
- 또한 현재 녹색구매비율 기준치는 있으나 녹색구매금액 기준치는 없는 상황임. 향후 구매금액 향상에도 목표를 두고 지표 관리가 필요함.

## 붙임

## 2026년('25년 실적) 분야별 목표치 및 최저치

○ 분야별 목표치(최근 3개년 평균 - 2021년, 2022년, 2023년)

지자체명	자활 용사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장애 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녹색 제품
서울특별시	0.0074%	0.255%	0.11%	1.21%	4.18%	0.8%	1.10%	46.33%
부산광역시	0.0006%	0.201%	0.26%	0.86%	1.64%	0.8%	1.10%	58.39%
대구광역시	0.0001%	0.120%	0.49%	1.47%	2.82%	0.8%	1.10%	43.84%
인천광역시	0.0033%	0.108%	0.44%	0.60%	3.56%	0.8%	1.10%	44.39%
광주광역시	0.0011%	0.103%	0.64%	0.58%	4.00%	0.8%	1.10%	48.35%
대전광역시	0.0200%	0.268%	0.32%	0.75%	3.00%	0.8%	1.10%	41.91%
울산광역시	0.0001%	0.498%	0.40%	0.32%	2.99%	0.8%	1.10%	34.48%
세종특별자치시	0.0003%	0.285%	0.49%	0.95%	4.02%	0.8%	1.10%	31.13%
경기도	0.0146%	0.092%	0.21%	2.08%	7.05%	0.8%	1.10%	36.91%
강원특별자치도	0.0050%	0.040%	0.18%	0.37%	1.45%	0.8%	1.10%	24.68%
충청북도	0.0510%	0.034%	0.25%	0.60%	3.96%	0.8%	1.10%	29.13%
충청남도	0.0001%	0.150%	0.22%	0.38%	2.26%	0.8%	1.10%	24.64%
전북특별자치도	0.0003%	0.122%	0.52%	0.40%	3.06%	0.8%	1.10%	21.40%
전라남도	0.0165%	0.138%	0.18%	0.56%	1.89%	0.8%	1.10%	23.98%
경상북도	0.0032%	0.049%	0.15%	0.32%	1.56%	0.8%	1.10%	22.04%
경상남도	0.0030%	0.015%	0.10%	0.66%	1.82%	0.8%	1.10%	26.87%
제주특별자치도	0.0005%	0.078%	0.21%	1.88%	3.13%	0.8%	1.10%	24.25%

〈그림 8〉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자료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전북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구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구매금액 향상에 대한 노력과 행정공무원 대상으로 녹색제품구매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발굴 등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녹색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군에 속하지만 의무 구매 비율은 없다, 따라서 법안 개정과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함.
- 녹색제품은 환경적 편익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지역 환경오염 예방 측면에서 도민과 기업에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민관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 기업과 행정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 장

기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경제적 편익이 있는 제도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용어 정의

- 녹색인증제품 : 제품의 전 과정(생산, 소비, 폐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성이 우수하여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은 제품을 통칭함.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함.
  - 녹색인증제품 구성 주요 인증 현황

구분(인증제품)	주관 부처 및 법령	인증 내용
환경표지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전과정 환경성(에너지, 자원 소비 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개선한 제품
저탄소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 탄소 감축률을 달성한 제품
우수재활용(GR)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품질, 성능, 친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정부가 공인한 제품

<표 88> 녹색인증제품 구성 주요 인증 현황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SDGs 환경위원회

-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
- 7-2-1. 재생에너지 생산량
- 13-2-1.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
- 13-4-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 14-1-1. 인공어초시설 금액 및 면적
- 14-4-1. 전북 수산 종자 방류 금액 및 방류량
- 15-4-1. 전북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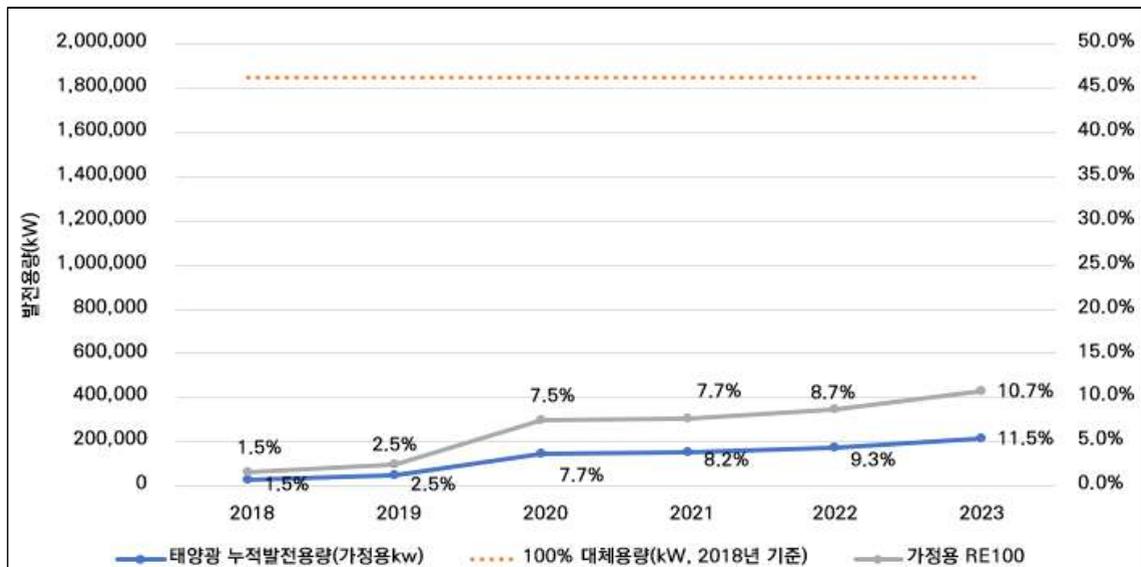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일곱 번째 목표인 '에너지'는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에 관점을 두고 있음.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7번째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도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운송 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정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 역할이 가능한 K-SDGs 7번째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4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지표를 작성하였음.
- SDGs 7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의 지표인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현재 성과를 공유하려고 함.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

〈표 89〉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을 알아보았음.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은 212,708kW(약 213MW)이며, 가정용 전력 사용량(2,609GWh) 대비 100% 에너지를 위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 대체 보급 용량 비율(가정용 RE100)은 10.7%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18년 기준 연도 목표량 대비 2023년 누적발전용량 비율은 11.5%로 산정되었음.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20년에 집중적인 보급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9〉 대체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2018년 대비)/가정용 RE100(2023년)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매년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전력사용량의 지속적 증가이며, 이러한 경향은 가정에서 쓰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기후 위기 상황으로 진입하면서 에너지원이 전력으로 집중되는 전력화 현상, 가전 제품수의 사용 증가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감축을 위한 효율화 프로그램 등 가정 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필요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확대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단독주택 건축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자체 조례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지자체

체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의 확대를 포함하여 건물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사업 등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권장함.

목 표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세 부 목 표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명	7-1-1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필요성 및 의 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도내 가정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하여,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시민 역할을 확대		
지 표	정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용량 대상은 주로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발전한 전기를 자기소비 후 상계거래(잉여량 이월사용)하거나 잉여전력을 판매가 가능한 건물에 설치가능한 주택용+자가용 PPA 태양광을 말함. -주로 지자체에서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주택용 태양광 지원과 건물에 직접 설치하여 판매하는 사업참여를 통해 알 수 있는 에너지 자립 척도로 활용 가능	
	산출 논리	-지역에너지 통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활용하여, 전력소비량 대비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및 발전량 환산(발전시간 3.6시간/일로 규정)을 통해 소비량 대비 대체 발전 용량을 산정하여 평가함. -자료상 보급용량은 신설, 증설 및 감설, 해지 등이 반영된 용량이므로 신규 설치 용량과 다를 수 있음.	
	자료원 또는 출처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통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산정 방법 -누적발전용량(kW)-통계자료 확보 -대체비율(%)=발전용량/2018년 기준 대체발전용량(소비량 100% 대체 전환 용량)
	작성 방법	-연도별 에너지공단 자료를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발전용량, 지역별로 분석, 전라북도 내 가정용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량 및 발전 용량 현황을 검토하여 전년 대비 증감 여부를 평가함.	
현황	-2023년 기준 전북의 태양광 발전량은 5,765GWh, 2018년 대비 3.7배 증가. 전력사용량은 21,443GWh로, 전년보다 1.81%(395GWh) 감소함. -전북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609GWh로, 2018년 대비 6.8%(177GWh) 증가. 태양광 발전용량은 4,607MW로, 2018년 대비 약 3.35배 증가함. -이중 가정용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은 171,170kW이며 2018년 대비 7.54배 증가. 2017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20년 급격한 증가 후 안정적인 증가 경향을 보임.		

기준치	212,708kw(2022년 태양광 누적용량) 11.5% 달성	목표치	1,850MW(2050년까지 2018년 가정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	
자료 경로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세부 에너지원별 현황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지역에너지통계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 -전북지속협 환경위원회	

〈표 90〉 '7-1-1 태양광 보급률'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다양한 재생에너지 중에서 주민(도민)들이 직접 설치하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별 가구의 에너지 자립 정도를 파악
-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형 주택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과 함께 에너지 복지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
- 가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시민에 의한 화석연료 대체 및 기후변화 완화의 실천 척도로서 가능

##### (2) 지표의 정의

- 일반적으로 발전전력은 크게 전력 시장을 통한 직접거래 방식(자가용 10kW 초과, 사업용 1kW 이상),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통한 거래(일명 PPA) 방식(자가용 10kW초과~1,000kW이하, 사업용 1,000kW이하), 한전과 상계거래 계약 체결(상계거래, 일반용 태양광)한 거래방식으로 구분됨.
- 지표에서 명시한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주로 일반용 태양광 설비이며, 가정(지붕, 마당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가소비 후 판매하거나 상계거래(잉여발전량을 이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목표 : 2018년 기준(탄소중립 기준 연도) 가정용 전력사용량을 대체할 만한 태양광 발전용량 1,850MW를 2050년까지 100% 대체할 발전용량 및 대체율

※여기서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산업체 중심의 RE100 개념(전력 소비량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이 가정 부문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_세부 에너지원별 현황」에서 자료확인

#### 나. 자료 수집경로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https://www.knrec.or.kr/>), 연도별로 지역별, 세부에너지원별, 기초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에너지경제연구원(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s://kesis.keei.re.kr/>)에서 발간하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참고할 수 있음.

### (4) 지표산출 방법

#### 가. 가정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신재생에너지원(27가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용량별 누적 보급용량 (kW) 발전시설자료를 사용함.
- 대체율(%): 2018년 가정용 전력사용량 대체 발전용량 대비 연도별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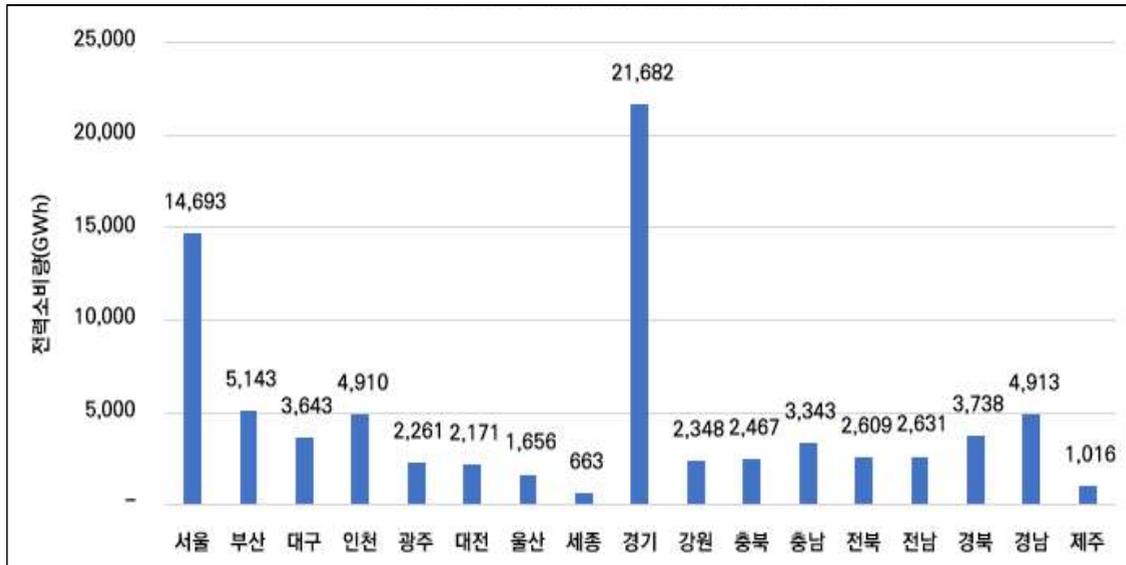
※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이전년도 누적보급용량 + 당해연도 신규 보급용량  
※ 대체율(%) = 연도별 가정용 태양광 누적용량(kW)/1,850MW('18년 가정용 전력 소비 대체 발전용량값) × 100

〈표 91〉 태양광 보급 용량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 (1) 지역별 가정용 전력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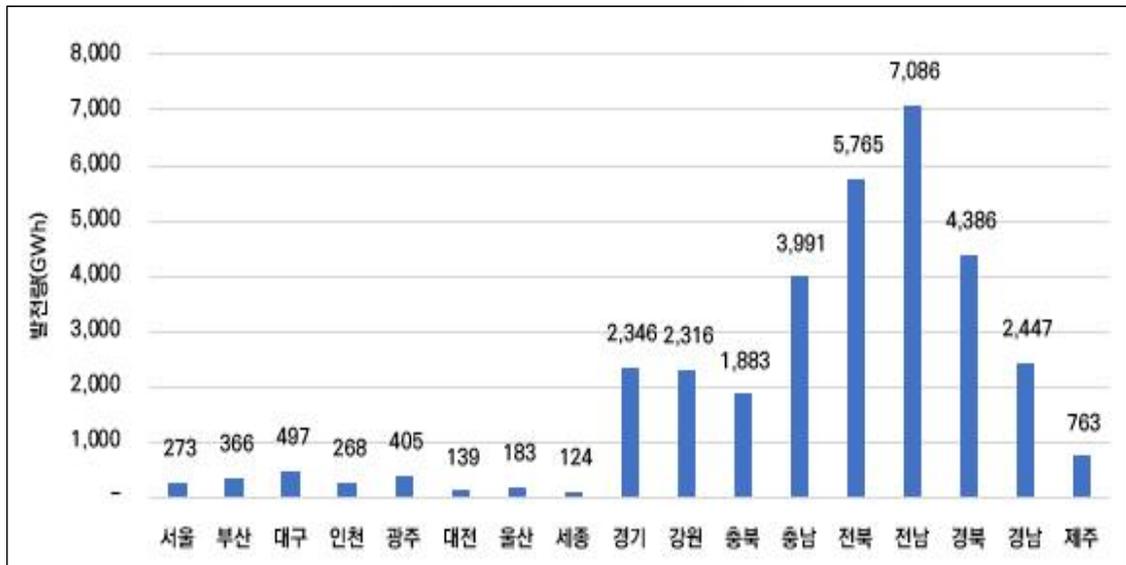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국내 전력소비량은 총 545,966GWh이며, 경기 > 충남 > 서울 > 경북 > 경남 순으로 많이 사용함. 전북 소비량은 21,443GWh로, 전국 소비의 4%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2022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음.



〈그림 10〉 지역별 가정용 전력소비량(2023년)

## (2) 지역별 태양광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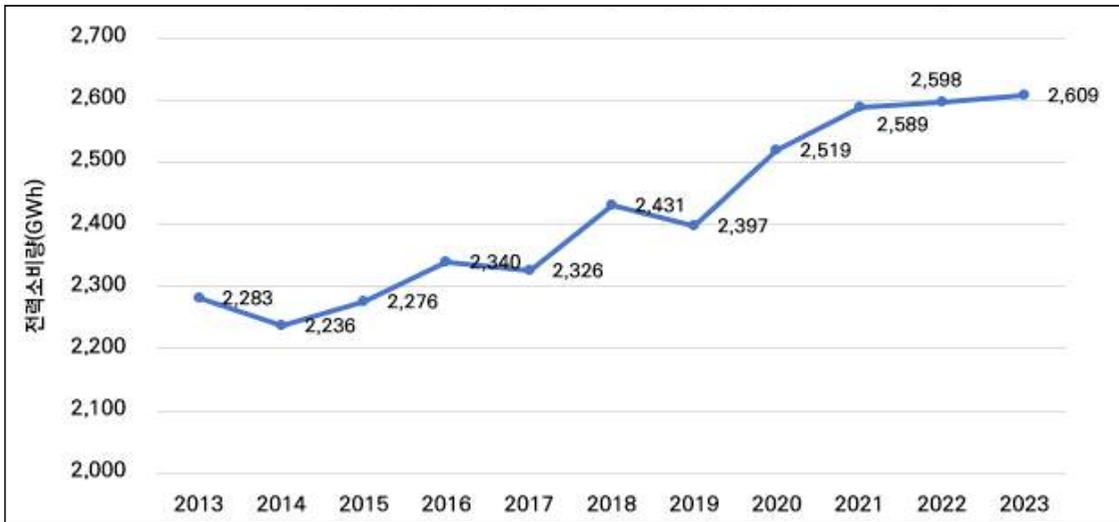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33,236GWh이며, 전남 > 전북 > 경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북 발전량은 5,765GWh이며, 전국 2위 수준의 태양광 발전량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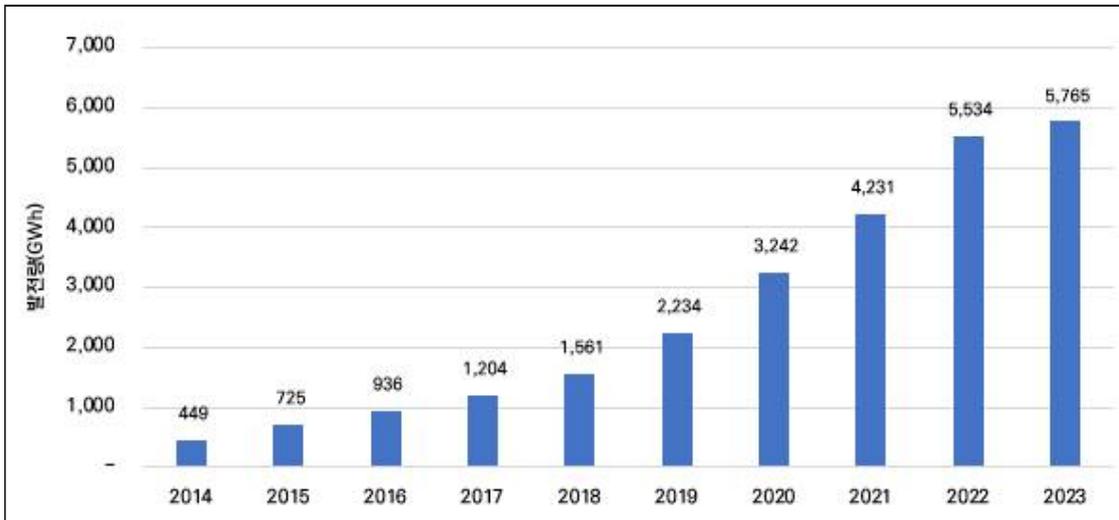
〈그림 11〉 지역별 태양광 발전량(2023년)

(3) 전라북도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용량 및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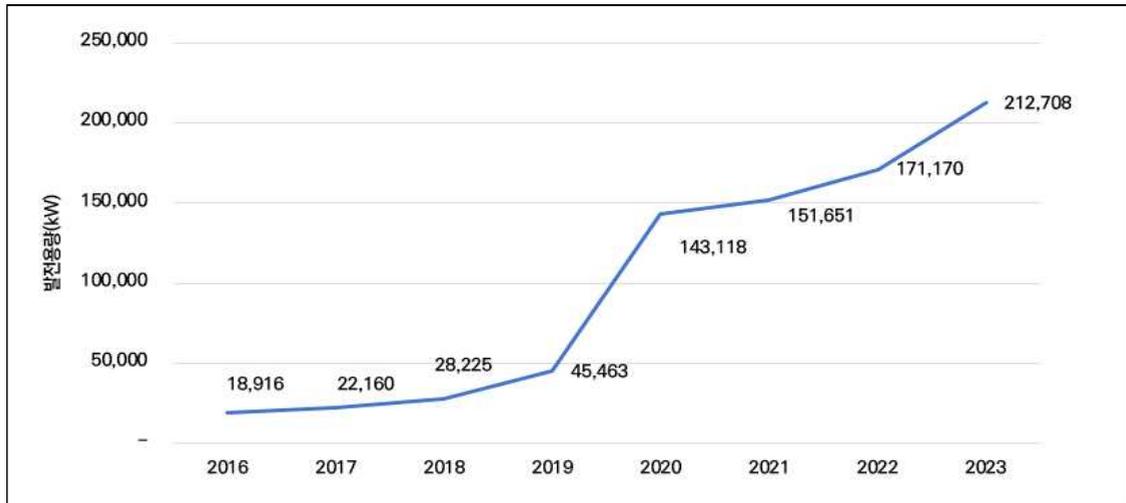
- 전라북도 가정용 전력 소비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태양광 발전량도 전력 소비와 함께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대비 대략 13배 정도 늘어난 상황임.
- 태양광 발전 용량의 경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급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 형태를 보임.



<그림 12>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전력소비량 추이(2013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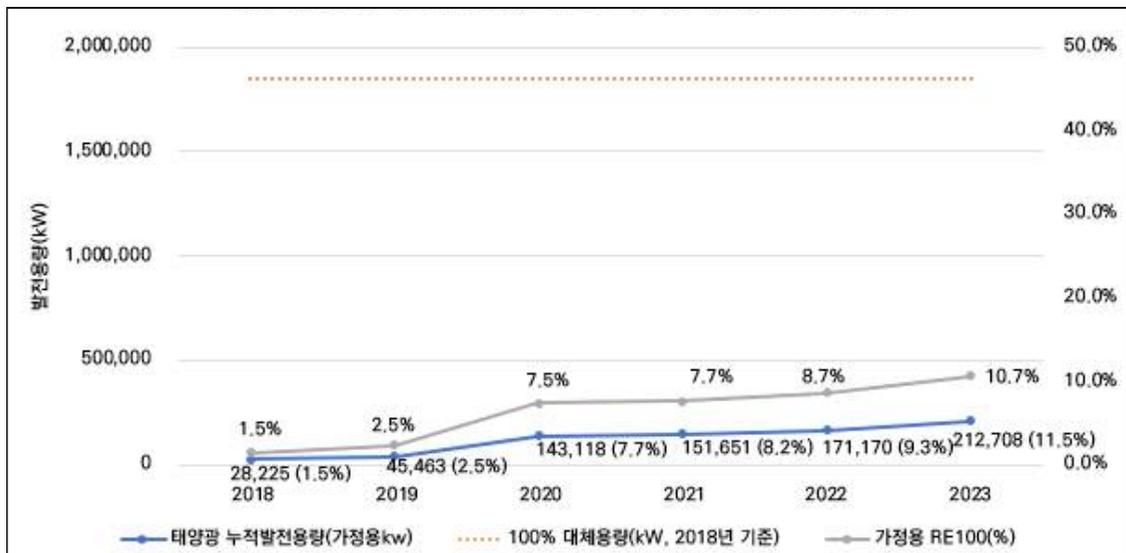
<그림 13>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량 추이(2014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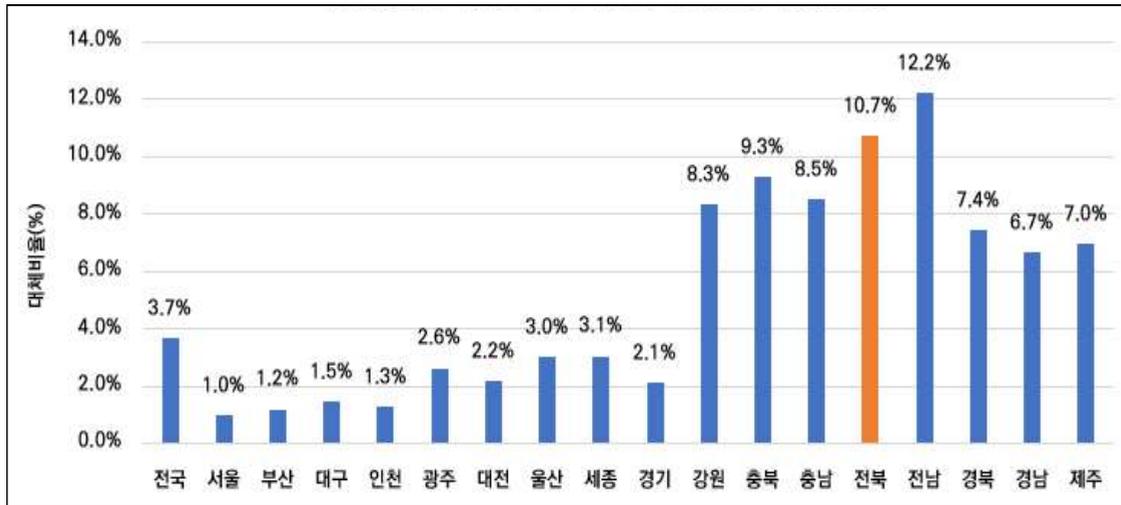
〈그림 14〉 전북특별자치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 누적용량 추이(2016년~2023년)

(4) 2023년도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발전 대체 비율

- 2023년도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은 212,708kW이며, 이는 2018년 목표치 대비 약 11.5%에 달하며, 전년보다 약 24.3% 증가하였음.
- 또한 해당연도 전력소비량 대비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을 통한 대체율은 10.7%이며, 전년보다 2.1% 정도 향상되었음.



〈그림 15〉 대체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2018년 대비)/가정용 RE100(2023년)



〈그림 16〉 가정용 전력 사용량 대비 태양광 대체발전비율(2023년)

## 6. 2050년까지 개선 목표

### ○ 기준치

- 전라북도 가정용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2018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018년 전라북도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 28,225kW

### ○ 목표치

- 2050년까지 2018년 가정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
- (목표) 약 1,850MW

## 7.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 주택 및 건물 내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 주택이나 건물 자체 사용 전력량의 대체를 위하여 주택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현재 전북도 내 발전수용 용량 포화에 따라 계통관리변전소를 지정 운영하여 2032년 이후에나 계통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전환과 탄소 감축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주택용 태양광 설치 용량에 제한을 풀어주는 정책 개정이 요구됨.

## ◆ 용어 정의

-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특정 시점까지 설치되어 가동 중인 모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정격 용량(표준시험 조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출력용량) 출력을 합산한 총량
- 전력소비량(전력량, 전력소모량) : 전기 제품이나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전기 요금을 산정 기준)
  - 전력소비량(Wh) = 소비전력(W) × 사용시간(h)
- 소비전력 : 어떤 기기가 단위 시간(주로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즉 전기의 힘(일률)
- 발전전력 : 발전소나 발전 설비가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 직접거래 방식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의 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 전기 사용자(기업)에게 직접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방식
- 자가소비형 : 생산된 에너지나 서비스를 외부로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생산 주체가 직접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 전력수급계약(PPA) : 전력 생산자(발전사업자)와 전력 구매자(소비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사이에 일정 기간 전력을 특정 조건과 가격으로 구매하고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장기적인 계약
- 한전 상계거래 : 발전설비(주택·건물에 설치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먼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쓰고 남은 잉여 전력을 한전 계통으로 송전(역송)했을 때, 나중에 한전으로부터 부족한 전기를 다시 가져와 사용할 때 보냈던 양만큼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잉여발전량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총 전력량 중에서 해당 장소(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은 (초과된) 전력의 총량
- 대체율(에너지 분야) : 특정 에너지원(화석연료 등)이 다른 에너지원(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된 정도
- RE100(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7-2-1. 재생에너지 생산량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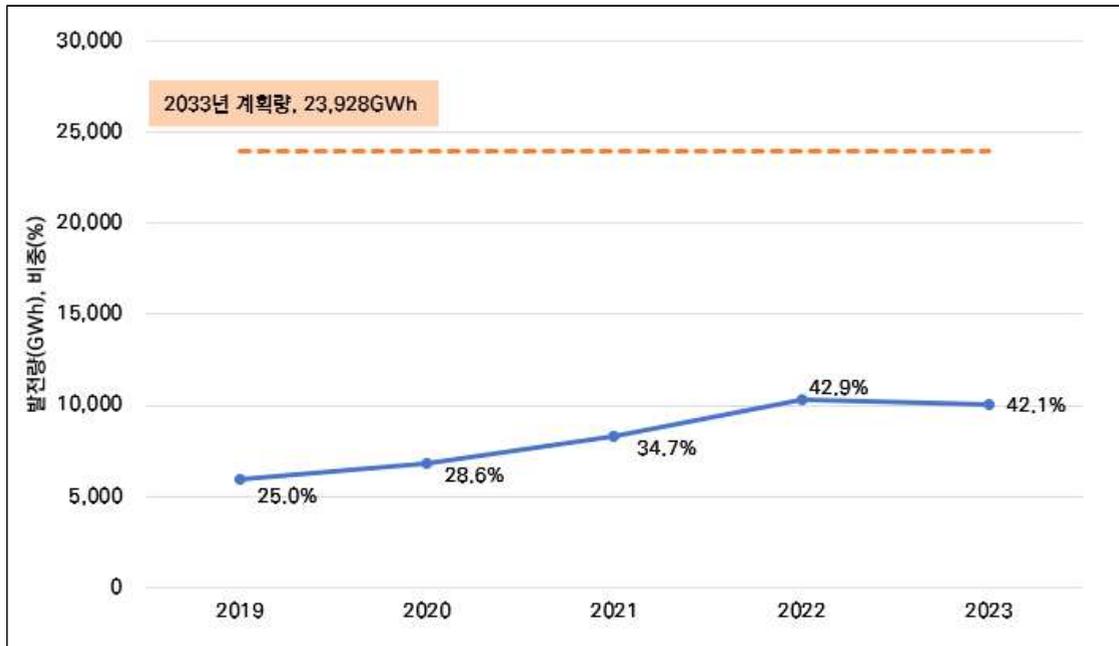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일곱 번째 목표인 '에너지'는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에 관점을 두고 있음.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7번째 목표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운송 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국가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면서 지역 지역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 지산지소를 실현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도를 파악하고, 전북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설정을 해야 함.
- SDGs 7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부목표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의 지표인 '7-1-2 재생에너지 생산량' 데이터를 취합하고, 현재 성과를 공유하려고 함. 이를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0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7-1-1	재생에너지 생산량

〈표 92〉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7-2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7-1-2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알아보았음.
-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0,071GWh이며, 2033년 목표치(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대비 42.1%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림 17〉 전북특별자치도 총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비중(%)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설정된 목표량은 전라북도 계획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적인 전력망 확대를 위한 대규모 송배전선로 건설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관리로 인한 신규 재생에너지 수용제한 문제가 계획 목표 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구성원들의 노력과 의지, 분산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유연한 국가 송전계획의 마련 등이 요구됨.

<b>목표</b>	<b>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b>			
<b>세부목표</b>	7-2 국가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b>지표명</b>	7-2-1 재생에너지 생산량			
<b>필요성 및 의의</b>	-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시대에 맞춰 다양한 재생에너지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의 확대와 자체 수급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b>지표</b>	<b>정의</b>	-자연적으로 고갈되지 않고 보충가능한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을 말하며, 이들 에너지원의 생산량을 파악하여 관리함.		
	<b>산출논리</b>	-지역에너지 통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을 산정하여 평가함. -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재생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산정에서 제외 규정('19.10.01)에 따라 연도별 자료에 반영됨.		
	<b>자료원 또는 출처</b>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통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b>산정방법</b>	-재생에너지 생산량(toe, MWh)- 통계자료 확보 -달성비율(%)=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203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계획 발전목표량
	<b>작성방법</b>	-연도별 에너지공단 자료를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원발전량, 발전 용량, 지역별로 분석, 전라북도 내 가정용 전력소비량, 태양광 발전량 및 발전 용량 현황을 검토하여 전년 대비 증감 여부를 평가함.		
	<b>현황</b>	<2023년 기준 전북 기준> -재생에너지 생산량 2,953 천toe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71GWh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5,406MW -총 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92.1% -총 발전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65.5%		
	<b>기준치</b>	23,928GWh (2033년 재생에너지전력 계획 목표량)	<b>실적</b>	10,071GWh (2023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달성 정도 : 42.1%
	<b>자료 경로</b>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세부 에너지원별 현황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지역에너지통계	<b>지표관리부서</b>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

<표 93> '7-1-2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됨.
- 도내 에너지 생산은 주로 재생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의 압박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력화 현상에 따라 전력사용량 증가가 예상됨.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생산 규모 확보를 위하여 변함없이 추진토록 노력해야만 함.
-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규모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시대의 이행 정도를 평가할 만한 수단이 필요함.

### (2) 지표의 정의

-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태양에너지의 다양한 변환물로서 자연적으로 보충되어 고갈되지 않은 자원(햇빛, 바람, 물, 지열, 바이오매스 등)에서 얻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말함.
- 목표 : 2033년 기준(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북 재생에너지 예상발전량 = 23,928GWh $\approx$ 24TWh(여기서는 풍력과 태양광발전 사업량만 대상임)

※여기서 평균 일발전시간은 태양광 3.92시간/일(영농형태양광 기준), 풍력 6.28시간/일을 기준으로 함. (환경부,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 2024.05 참고)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_세부 에너지원별 현황」에서 자료확인

#### 나. 자료 수집경로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 <https://www.knrec.or.kr/>)로, 연도별로 지역별, 세부에너지원별, 기초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에너지경제연구원(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https://kesis.keei.re.kr/>)에서 발간하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참고할 수 있음.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원(27가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해당연도 생산량(toe)이나 발전량(MWh)을 말함.
- 달성률(%): 2033년 전북특자도 탄소중립 기본계획내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에 대해 연도별 재생E 전력 생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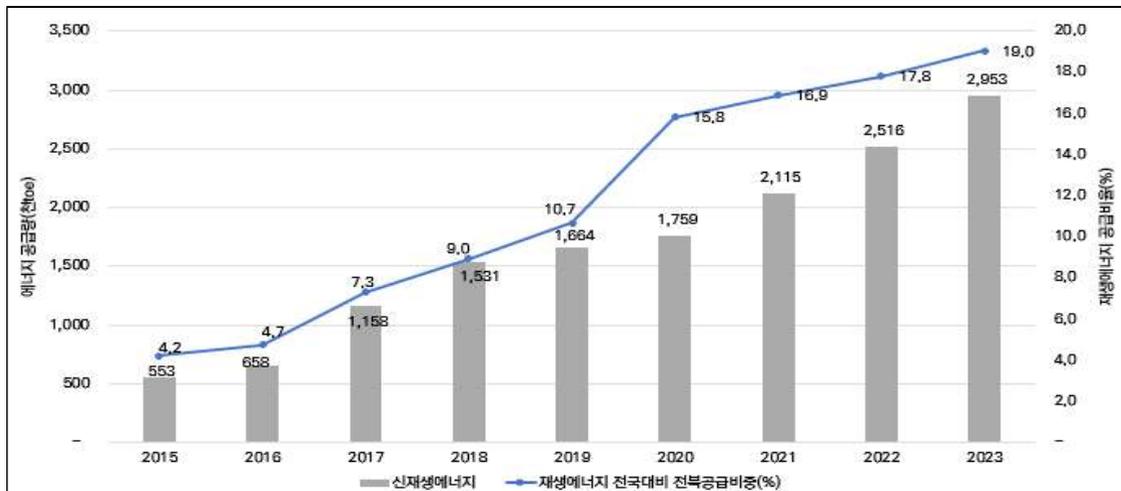
※ 재생에너지 생산량=연도별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toe, MWh)  
 ※ 달성률(%)=당해연도 재생에너지 전력(MWh) 생산실적량/2033년 탄소중립계획 재생에너지 전력목표량(MWh) × 100

〈표 94〉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달성률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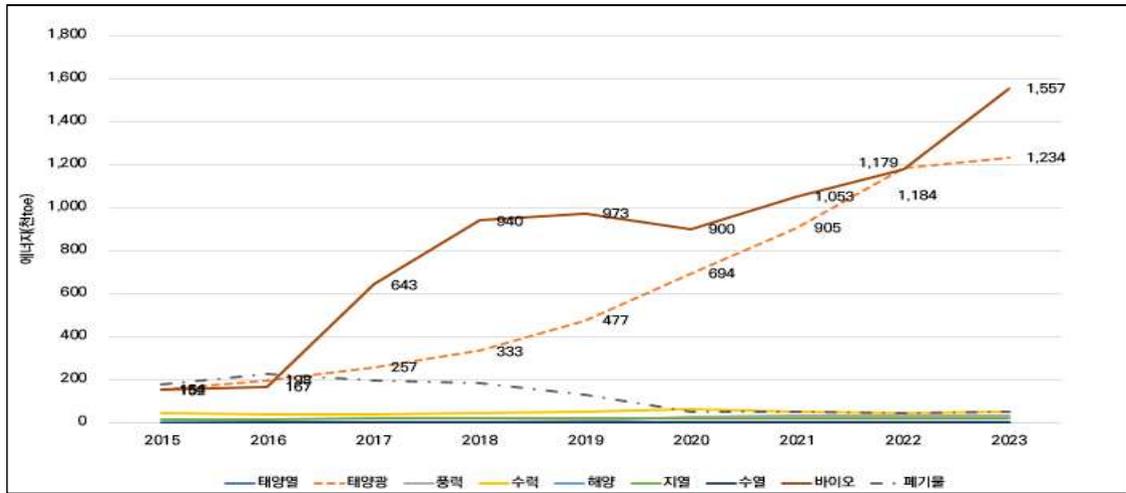
### 5. 지표분석 결과

#### (1) 재생에너지 생산량

- 2023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17,058천toe이며, 전북 생산량은 2,953천toe로, 전국 생산의 19%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2021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가장 많은 생산을 보인 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 > 태양광 > 수력 > 폐기물 > 풍력 > 지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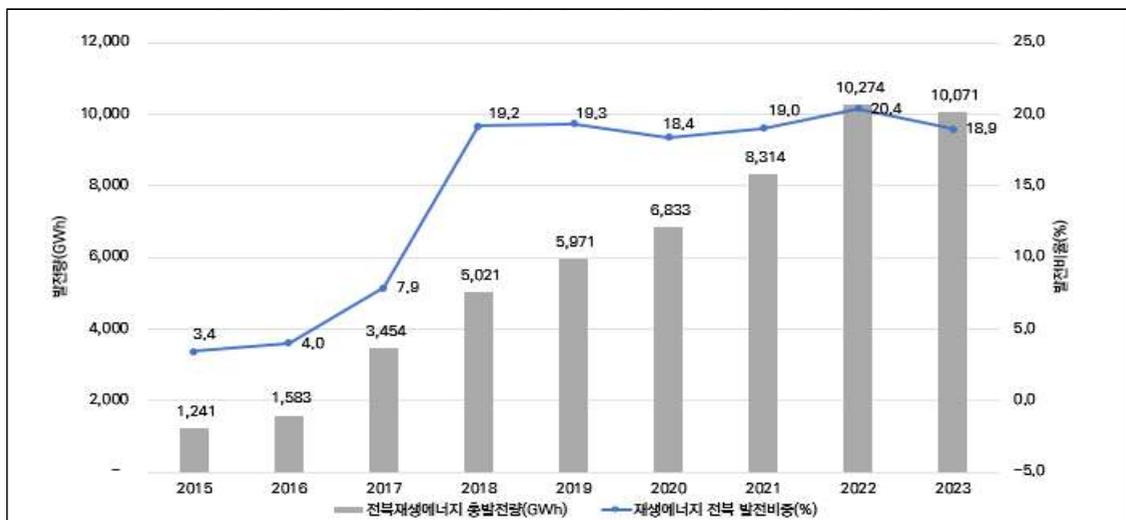
〈그림 18〉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생산량 및 전국 공급 비중추이(2015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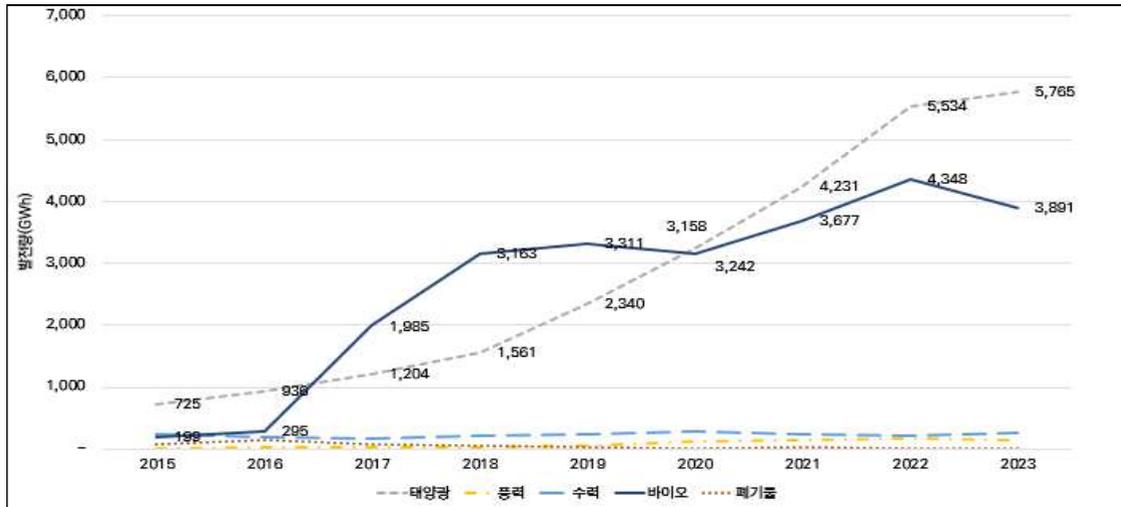
〈그림 19〉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2015년~2023년)

## (2) 재생에너지 발전량

- 2023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3,146GWh이며, 전북 발전량은 10,071GWh이며, 전국 생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 바이오 > 수력 > 풍력 > 폐기물 순이며, 2020년부터 태양광이 바이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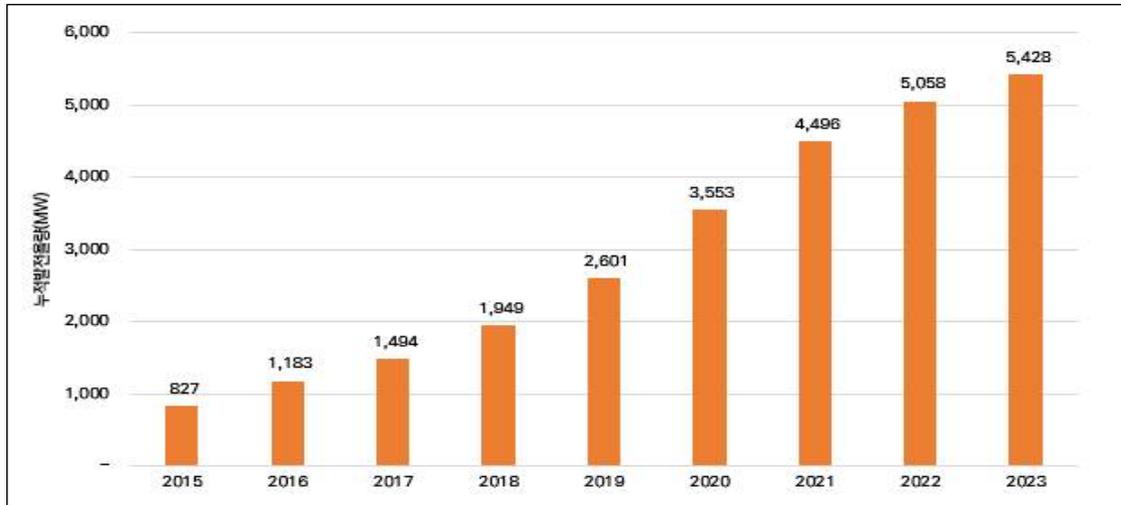
〈그림 20〉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전국 공급 비중추이(2015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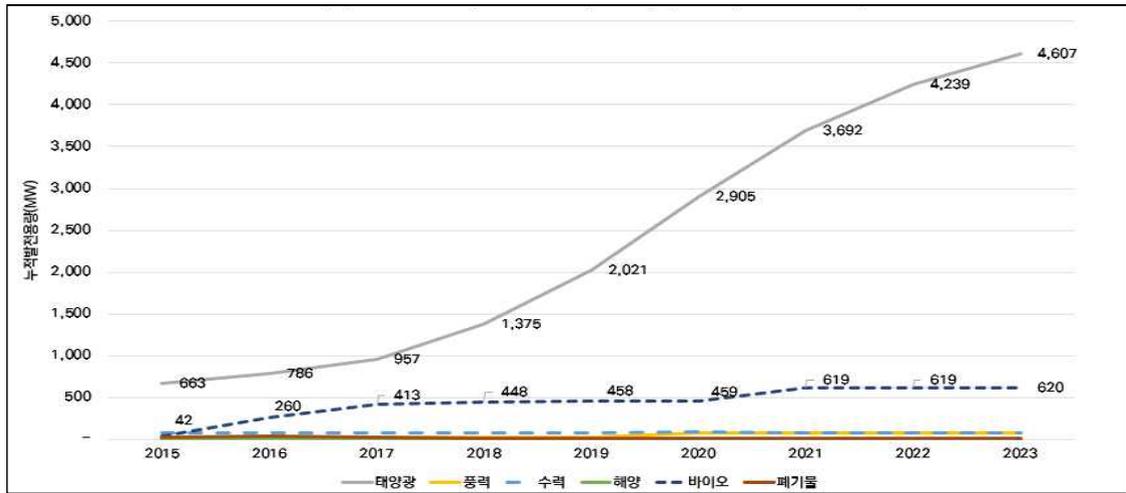
〈그림 21〉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2015년~2023년)

### (3)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 2023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누적)은 35,962MW이며, 전북 발전용량은 5,406MW이며, 전국 발전 설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가장 많은 발전 설비를 가진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 바이오 > 수력 > 풍력 > 폐기물 순이며, 태양광이 월등히 많고, 풍력과 수력이 비슷한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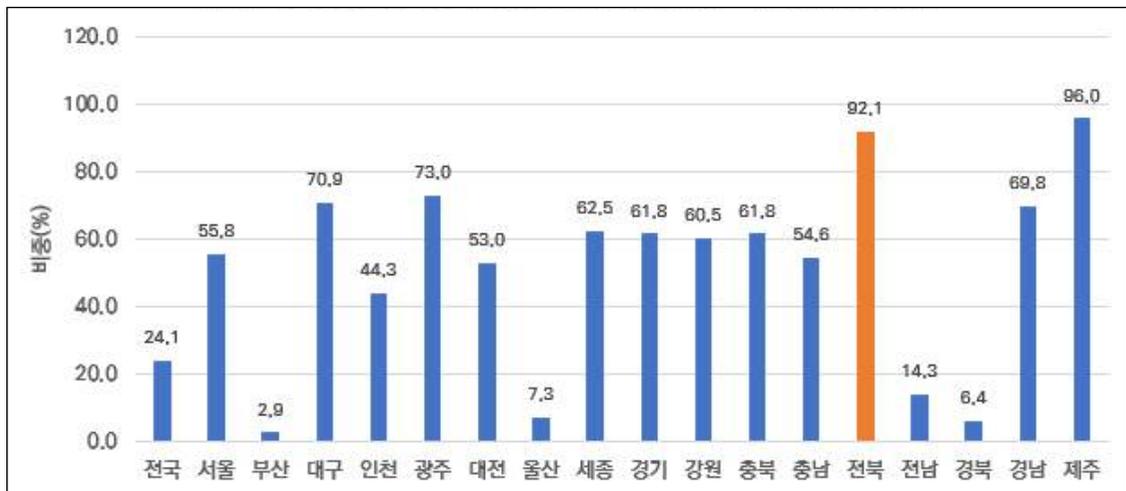
〈그림 22〉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용량 추이(2015년~2023년)



<그림 23>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용량 추이(2015년~2023년)

#### (4) 총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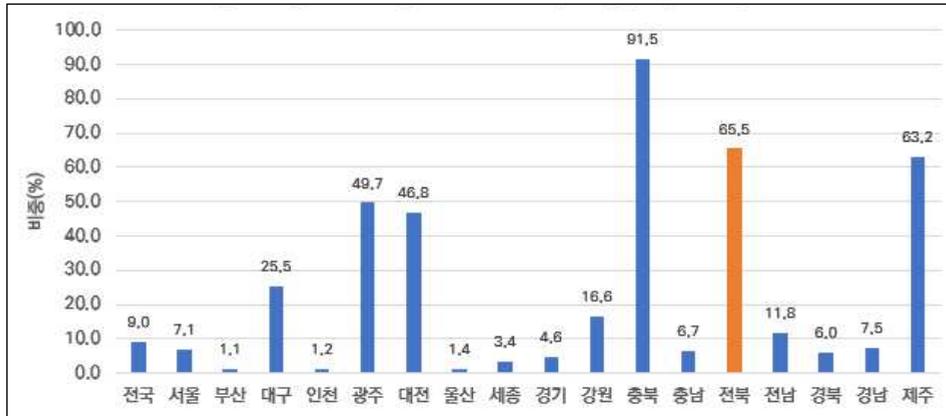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전북의 총에너지 생산량은 3,250천toe이며, 이중 재생에너지 2,953천toe를 생산하고 있어, 92.1%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제주에 이어 2위 수준이며, 타지역에 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기반을 볼 수 있음.



<그림 24> 총에너지 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2023년)

(5) 지역 총발전량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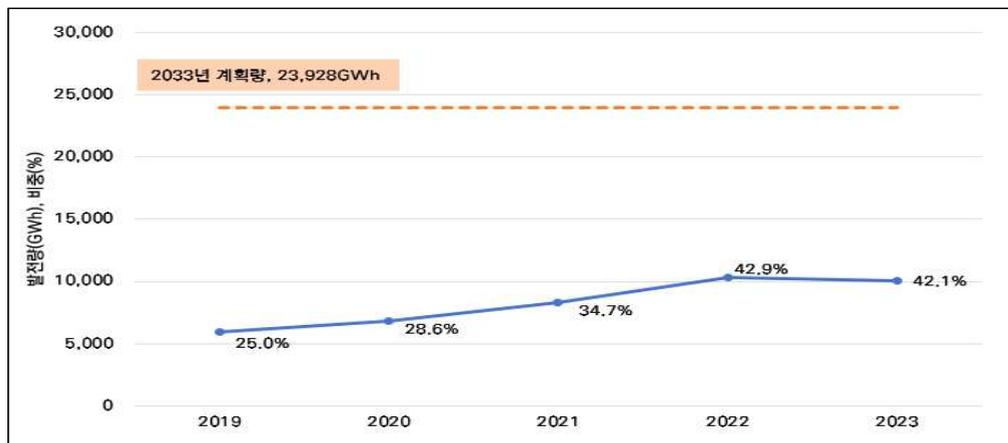
- 2023년 기준 전북의 총발전량은 15,376GWh이며, 이중 재생에너지로 10,071GWh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65.5%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남에 이어 2위 수준이며, 전력 또한 타지역에 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25> 총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2023년)

6. 2033년까지 개선 목표

- 기준치
  - (실적) 2023년 전북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 10,071GWh
- 목표치
  - (예상) 2033년 전북 재생에너지 전력 계획 예상량 : 23,928GWh
  - 2033년 목표 대비 2023년 달성 정도 :  $10,071 / 23,928 \times 100 = 42.1\%$



<그림 26> 전북특별자치도 총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비중(% , 2019년~2023년)

## 7.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계획목표량 기준인 탄소중립 계획 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가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만금 태양광 및 풍력, 서남해풍력 사업 등 대규모 재생 전력 설비가 원활히 구축되도록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
-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문제로 발생될 호남권 출력제어와 계통연계 지연 등이 가능한 한 빠르게 해소되도록 송배전선로 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 지방정부 및 시민 간 협력적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공론화 추진 및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 용어 정의

- 전력 생산량(발전량, 소비량) : 발전소나 특정 발전 설비가 일정 기간 실제로 생산해 낸 전기 에너지의 총량
-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 : 특정 시점까지 설치되어 가동 중인 모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정격 용량(표준시험 조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출력용량) 출력을 합산한 총량
- 전력소비량(전력량, 전력소모량) : 전기 제품이나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전기 요금을 산정 기준)
  - 전력소비량(Wh) = 소비전력(W) × 사용시간(h)
- 소비전력 : 어떤 기기가 단위 시간(주로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즉 전기의 힘(일률)
- 발전전력 : 발전소나 발전 설비가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 잉여발전량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총 전력량 중에서 해당 장소(가정, 건물,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은 (초과된) 전력의 총량
- RE100(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13-2-1.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필요함
-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기후 위기와 경제적 수송 수단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전 편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본 지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수소충전소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후 위기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3-2-1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 (완속/급속)

〈표 95〉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기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1일 기준 15,545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은 전망치 대비 부족했지만,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전망치를 초과하여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충전소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1일 기준 17개소

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소자동차 보급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수소충전소는 계획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를 단순히 만족하였다고 '충전 편의성'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종합평가가 필요함.
- 전기차 충전기 목록의 경우 제공하는 목록 파일이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어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통계관리 개선 건의가 필요함.

목 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 부 목 표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지표명	13-2-1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		
필요성 및 의 의	<p>-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기존 내연 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p> <p>-본 지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수소충전소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후 위기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이바지하는 데 의의가 있음.</p>		
지 표	정의	<p>-전기차 충전기 개수 : 전북 내 전기자동차 차 충전을 위한 완속 및 급속 충전시설의 개수</p> <p>-수소충전소 개수 : 전북 내 수소자동차에 수소를 재 보충하는 충전소의 개수</p>	
	산출 논리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중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a href="https://ev.or.kr">https://ev.or.kr</a> )에서 제공하는 충전소 현황자료를 검색	
	자료원 또는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a href="https://ev.or.kr">https://ev.or.kr</a> )	산정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엑셀자료 분석 (전북자치도 전기차충전기 목록 개수, 전북자치도 수소충전소 목록 개수)
	작성 방법	<p>-전국 전기차 충전기 현황 중 전북 목록을 분리하여 분석함.</p> <p>-전국 수소충전소 현황 중 전북 목록을 분리하여 분석함.</p> <p>-친환경 자동차 보급현황을 검색하여 충전소 대비 자동차 비중을 산정함.</p>	

	-선행연구 및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보급현황의 적절성 및 목표(안)를 검토함.		
현황	-전북 전기차 충전기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1일 기준 15,545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남. -전북자치도 수소충전소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1일 기준 17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기준치	-2025년 기준 전기차 충전기 15,545대, 수소충전소 17개소	목표치 (검토안)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44,600대, 수소충전소 30개소
자료 경로	-전기차충전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 집 메뉴 > 가까운 충전소 찾기 > 충전소 검색 > 엑셀 다운로드 -수소충전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메뉴 > 수소차 소개 > 수소충전소 찾기 > 충전소 검색 > 엑셀 다운로드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전북지속협 환경위원회

<표 96> '13-2-1. 친환경 차량 충전소 수(완속/급속)'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 확대를 통한 충전 편의성 관리를 위한 지표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표임
  -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경제적 수송 수단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전 편의성'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
  - 전기차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수소충전소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후 위기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2) 지표의 정의

### 가. 전기차 충전기 개수

-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임.
-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 속도에 따라 급속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로 구분됨.
- 급속충전기는 완전 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약 30분이 소요되며, 주로 100kW 용량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 장소에 설치됨.
- 완속 충전기는 완전 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되며, 주로 6~7kW 용량이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됨.

### 나. 수소충전소 개소

- 수소충전소는 수소 자동차에 수소를 재 보충하는 곳으로, 수소 공급 방식에 따라 오프사이트 방식과 온사이트 방식으로 구분됨.
- 오프사이트 방식은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파이프라인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온사이트 방식은 충전소 내에서 개질(추출)과 수전해 등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임.
- 현재 국내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튜브트레일러 방식임.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관련 데이터 수집 방법

-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 중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제공하는 충전소 현황자료를 검색함. (2025. 11. 21.)
- 전기차 충전기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메뉴 > 가까운 충전소 찾기 > 충전소 검색 > 엑셀 다운로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함.
- 수소충전소 현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메뉴 > 수소차 소개 > 수소충전소 찾기 > 충전소 검색 > 엑셀 다운로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함.

### 나. 제공 데이터 개요

- 지역구분 : 시군구 상세 주소 표기
- 제공시기 : 전기차충전소의 경우 시간 단위, 수소충전소의 경우 일 단위로 엑셀 파일 업데이트

- 제공내용(전기차충전소) : 운영기관, 충전소 명, 충전기 ID, 충전기 타입, 충전기상태, 시설구분(대), 시설구분(소), 지역, 시군구, 주소, 상세위치, 이용가능시간, 이용자 제한, 충전용량, 편의 제공, 비교  
※전기차충전소의 경우 동일한 충전시설 내에 개별 충전기 정보를 각각 기재하고 있어 '충전소'가 아니라 '충전기'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제공내용(수소충전소) : 충전소 명, 주소, 가격, 비교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전기차충전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충전소 현황 엑셀파일을 분석함.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기 목록 개수

<표 97> 전기차 충전기 현황 산식

##### 나. 수소충전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수소충전소 현황 엑셀파일을 분석함.

※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충전소 목록 개수

<표 98> 수소충전소 현황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 (1) 전기차 충전기

- 전북의 전기차 충전기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1일 기준 15,545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내 충전기 보급 비중은 전주시 38.8%, 군산시 18.1%, 익산시 13.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완속 충전기의 비중 82.8%, 급속충전기 비중 17.2%로 나타나 완속 충전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기 비중(전기차/충전기)을 분석한 결과 전북 평균은 1.7로 나타났음.
- 충전기 1대당 충당하는 전기차 비율을 고려할 때 전주시(1.4)가 상대적으로 충전기 접근율이 가장 높고, 장수군(3.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수행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전기차 충전기는 2022년 3,220대 → 2025년 15,454대로 4.8배 증가하였으며,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기 비중(전기차/충전기)도 2022년 2.6 → 2025년 1.7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시군	급속	완속	합계	비중	전기차 등록현황*	전기차 /충전기
전주시	523	5,509	6,032	38.8	8,178	1.4
군산시	425	2,381	2,806	18.1	4,230	1.5
익산시	251	1,896	2,147	13.8	4,073	1.9
정읍시	235	559	794	5.1	1,861	2.3
김제시	198	487	685	4.4	1,475	2.2
남원시	210	382	592	3.8	1,468	2.5
완주군	151	757	908	5.8	1,353	1.5
고창군	116	182	298	1.9	772	2.6
부안군	133	237	370	2.4	668	1.8
임실군	86	87	173	1.1	429	2.5
진안군	129	60	189	1.2	423	2.2
장수군	86	28	114	0.7	412	3.6
무주군	90	181	271	1.7	380	1.4
순창군	47	119	166	1.1	361	2.2
합계	2,680	12,865	15,545	100.0	26,083	1.7

〈표 99〉 전기차 충전기 현황 (2025년 11월 21일 기준)

※전기차 등록 현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데이터 2025년 4월 기준 자료를 활용함.

## (2) 수소충전소

- 전북의 수소충전기 목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1일 기준 17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 7개소, 익산 3개소, 부안 2개소, 군산, 김제, 완주, 무주, 임실 각 1개소로 집계됨.
- 2025년 9월 기준 전북 수소차 보급대수 는 비사업용 2,521대, 사업용 334대로 합계 2,855대로 보고되어, 수소충전소 1개소당 평균 168대의 수소차 비율을 보 였음.

장남정, 김상엽, 조하진,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2022  
수소경제 종합경제포털 (<https://h2hub.or.kr>)

(단위 : 원)

순번	충전소명	주소	판매가격
1	전주삼천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536	11,000
2	코하이젠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59	11,000
3	전주 색장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4981	9,900
4	하이넷 전주송천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275	9,900
5	하이넷 군산지곡 수소충전소	전북 군산시 월명로 112	9,900
6	익산2공단 수소충전소(닝쿨)	전북 익산시 석암로 169	9,700
7	H완주 수소충전소	전북 완주군 과학로 930	9,900
8	덕유산(하남방향) 수소충전소	전북 무주군 안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 148	9,700
9	오수휴게소(완주방향) 수소충전소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4	9,800
10	부안군 수소충전소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3농공단지길 80	9,500
11	부안 곰소 수소충전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청자로 1055	9,500
12	전주 상림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586	9,900
13	하이버스 전주전미 수소충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 238	11,000
14	효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267	11,000
15	하이버스 익산목천 수소충전소	전북 익산시 무왕로2길 140	11,000
16	코하이젠 익산송학 수소충전소	전북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49	11,000
17	김제하동 수소충전소	전북 김제시 하공로 46	9,900

<표 100> 수소충전소 목록 (2025년 11월 21일 기준)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자동차 보급은 전망치 대비 부족지만,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충전 문화 미비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였음.
  - 전북연구원(2022)에 따르면 2030년 362만대의 정부 목표치를 고려할 경우 전북의 2030년 전기차 보급 대수는 115,840대, 2025년 36,160대를 전망하였으나, 2025년 4월 보급률은 약 26,000대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음.
  - 반면, 동일 연구에서 전기차 충전기는 2030년 수요를 44,600대, 2025년 수요를 13,900대로 전망하였으나, 2025년 11월 현황은 15,545대로 전망치를 초과하였음.
  - 다만,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를 단순히 만족하였다고 '충전 편의성'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접근성, 안전성, 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기차 충전기 목록의 경우 제공하는 목록 파일 자체를 업데이트하고 있어 목록 파일 분석을 통해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수소충전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소자동차 보급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수소충전소는 전북자치도가 수립한 수소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수소기본계획(2024)에 따르면 2030년 수소충전소 30개소(액화충전소 2개소 포함)를 계획하였으며, 정부 목표 660개소의 4.5% 수준을 목표로 하였음.
- 동일 계획에서 2025년 수소차 보급은 3,811대로 전망하였으나 2,855대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수소충전소는 계획한 17개소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7. 2030년 개선 목표

- 기준치
  - 2025년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2025년 전기차 충전기 15,545대, 2025년 수소충전소 17개소
- 목표치
  - 선형연구(전북연구원, 2022)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2030년 목표치를 44,600대로, 전북 수소 기본계획(전북특별자치도, 2024)에 따라 2030년 목표치를 30개소로 설정할 수 있음.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44,600대 보급(완속, 급속 합계), 수소충전소 30개소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충전기 '보급 대수' 중심 지표에서 '충전 편의성' 중심의 복합지표로 고도화 검토 필요
  - 현재 지표는 충전기 및 충전소의 절대적 개수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충전기 접근성, 이용 가능 시간, 급속·완속 비율, 전기차 대비 충전기 비율 등 실질적 이용 편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전기차 1대당 충전기 수, 급속충전기 비율, 생활권(읍·면·동) 단위 접근성 지표 등을 보조지표로 도입을 검토하여 지표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사전에 지표 적정기준 마련 필요)
- 시군 간 충전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한 공간 기반 관리체계 도입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충전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장수군, 임실군 등 일부 군 지역은 전기차 대비 충전기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충전기 설치 정책을 단순 수요 대응 방식이 아닌, 공간 취약지역을 고

려한 우선 배치 원칙으로 전환하고, 농촌·산간지역에는 공공시설, 관광지, 환승거점 중심의 전략적 설치가 필요함.

- 민관협력을 통한 충전 인프라 운영 품질 및 이용 만족도 제고
  - 충전기 설치 확대와 더불어 고장률 관리, 안전성 확보,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운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 에너지기업, 충전사업자,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충전기 운영 품질 관리 기준 마련, 도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 용어 정의

- 친환경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등을 포함
  -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태양광자동차 :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과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내연기관 : 열기관의 한 종류로, 연료와 공기를 기관의 내부(연소실 또는 실린더)에서 직접 연소(폭발)시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가스 팽창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동력을 얻는 장치
  -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가장 대표적인 왕복형(피스톤형) 내연 기관임.
- 튜브트레일러 : 고압의 압축가스를 대량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목적의 트레일러
  - 대량의 압축가스를 생산지에서 사용지(예: 충전소, 산업 현장)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함.
  -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고비용인 지역에 수소를 즉시 공급하는 가장 현실적인 운송 수단으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 13-4-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평가를 매년 점검하도록(기본법 제13조) 하고 있음.
- 본 시범지표 평가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보조지표로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추가 분석하였음.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13-2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C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C까지 제한 하도록 노력한다.	13-4-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표 101〉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연도 및 전년도(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흡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수행한 결과 세부과제 달성률은 90%, 목표감축량 대비 달성률은 106.6%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43%)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주류화를 통해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 주도가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함.
- 지연 및 미달성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 표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 부 목 표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지표명	13-4-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			
필요성 및 의 의	<p>-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p> <p>-본 시범지표 평가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2022년 전북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보조지표로 전북의 20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추가 조사하여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음.</p>			
지 표	정의	<p>-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2022년 인벤토리 통계 기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p> <p>-(보조지표)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비율 : 전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24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목표) 대비 이행평가 실적을 평가</p>		
	산출 논리	<p>-온실가스배출량 현황 : 통계자료 분석 보고서 활용(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p> <p>-(보조지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하여 전북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료를 활용</p>		
	자료원	-온실가스 배출량 : 지역	산정	-2018년 대비 증감률 = (2022년

또는 출처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산정 결과 -(보조지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행정자료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x 100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감축 실적(점검 결과) / 목표감축량(기본계획) x 100	
작성 방법	-당해 연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작성, 당해 연도 배출 비중, 2018년 및 전년도 대비 증감률을 분석 -기본계획 이행평가 점검 결과 중 부문별 목표감축량(기본계획), 감축 실적(점검 결과), 감축 비율, 소요 예산을 분석			
현황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2022년 전북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연도 및 전년도(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흡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전북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수행한 결과 세부과제 달성률은 90%, 목표감축량 대비 달성률은 전체 106.6%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기준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치	2018년 대비 2030년 43% 감축	
자료 경로	-배출량 통계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정보마당 > 국가지역 온실가스 통계 -(보조지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행정자료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전북지속협 환경위원회	

표 102 '13-4-1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부문별)'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 정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산정하고 있음.
- 지자체 통계는 기존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정한 업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2년 이관받아 2025년 현재 시범산정으로 공표하였음.
- 지자체 배출량 공식 통계는 2년의 시간차가 있어 2024년 산정한 2025년 공표 자료의 경우 2022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 또한, 보고 양식이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복 산정 항목이 있어 실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부문별 취합 및 추가 분석이 필요한 현황임.

## 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평가)

-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춘 지역 기본계획을 광역은 2024년 기초는 2025년 수립을 완료하였음.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3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차별 로드맵과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기본법 제13조) 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전북이 처음으로 2024년 이행평가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14개 시군이 2025년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현황을 진단할 계획임.
- 다만,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2018년 기준 평가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설정한 세부과제 감축량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기본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세부과제 기반의 감축량 산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부문별/배출원별 산정하는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는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됨.  
※이외에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통계는 2년간의 시간적 차이(최근 배출량 통계 2022년 기준, 이행평가 2024년 기준)가 있음.
- 본 시범지표 평가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2022년 전북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고 보조지표로 전북의 20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추가 분석하였음.

## (2) 지표의 정의

### 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2022년 인벤토리 통계 기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분석한 '인벤토리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음.

### 나. (보조지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2024년 기본계획 목표감축량 기준

- 전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24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목표) 대비 부문별 이행평가 실적을 평가한 자료로 전북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상정하여 전북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음.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자료경로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정보마당 > 국가지역 온실가스통계 > 2024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2010-2022) 시범산정 결과' 중 전북 부분의 통계를 활용함.
- 제공시기 : 2025. 1. 31.
- 통계분석 결과는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인벤토리 분석 보고서를 참고함.

#### 나. (보조지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개최한 전북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5. 5. 22) 보고자료를 인용함.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2018년 대비 증감율', '전년도 대비 증감율'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begin{aligned} \text{※ 2018년 대비 증감율} &= (\text{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 \text{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 \\ &\quad \text{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100 \\ \text{※ 전년도 대비 증감율} &= (\text{당해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 \text{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 \\ &\quad \text{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100 \end{aligned}$$

<표 103> '2018년 대비 증감율', '전년도 대비 증감율' 비율 산식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통계를 참고함.

#### 나. (보조지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text{※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text{감축실적(점검결과)} / \text{목표감축량(기본계획)} \times 100$$

<표 104>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 (1)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2022년 전북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4,138천톤 CO<sub>2</sub>eq.으로 2018년 총배출량 대비 12.0% 감소하였고, 2021년 대비 2.0% 감소하였음.

- 2022년 전북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1,610천톤 CO2eq.으로 2018년에 비해 14.6% 감소하였고, 2021년 비해 3.6% 감소하였음.
- 온실가스 배출 부문으로 보면 에너지 중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8,996천톤 CO2eq.으로 전북의 총배출량 중 약 37%를 배출하였음.
- 다음으로 수송 부문에서 배출 비중 16%를 배출하였고, 상업/공공에서 배출 비중 12%, 가정에서 배출 비중 10%를 각각 배출하였음.
- 산업공정 부문은 배출 비중 1.2%, 축산과 경종의 배출량을 합한 농업 부문은 배출 비중 13%, 폐기물 부문은 배출 비중 5%를 차지하였음.
- LULUCF 부문에서는 2022년은 2,528천톤 CO2eq.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였음.
- 전년도 대비 2022년에는 미분류를 제외하고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33.5%로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으며, 산업공정에서 1.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단위 : 천톤 CO2eq. , %)

분야/부문	2018년	2021년	2022년	2022년	증감률		
				부문 비중	2018년	전년	
에너지	에너지산업	46.6	35.7	23.7	0.1	-49.0	-33.5
	제조업 및 건설업	10,597.1	9,255.8	8,995.9	37.3	-15.1	-2.8
	수송	4,045.9	3,990.4	3,942.2	16.3	-2.6	-1.2
	상업/공공	3,853.9	2,989.1	2,980.6	12.3	-22.7	-0.3
	가정	2,707.5	2,531.4	2,490.2	10.3	-8.0	-1.6
	농업/임업/어업	1,020.2	1,098.6	1,065.5	4.4	4.4	-3.0
	미분류	142.8	58.5	17.6	0.1	-87.7	-70.0
탈루	12.3	12.2	12.1	0.1	-1.8	-0.6	
산업공정	산업공정	243.6	280.6	284.6	1.2	16.8	1.4
농업	축산	1,440.9	1,514.0	1,527.2	6.3	6.0	0.9
	경종	1,775.2	1,620.0	1,573.9	6.5	-11.3	-2.8
LULUCF	LULUCF	-2,148.3	-2,222.1	-2,528.1	-10.5	(17.7)	(13.8)
폐기물	폐기물	1,554.5	1,248.6	1,224.9	5.1	-21.2	-1.9
총배출량(LULUCF 제외)		27,440.6	24,634.9	24,138.4	100.0	-12.0	-2.0
순배출량(LULUCF 포함)		25,292.3	22,412.8	21,610.3	89.5	-14.6	-3.6

<표 105> (보조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자료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2) (보조지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전북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7개 부문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0개의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음.
- 이중 ▲달성 49개, ▲정상추진 14개, ▲지연 3개, ▲미달성 4개로 달성 및 정상추진 된 과제가 90%로 나타남. (지연 및 미달성 10%)
- 2024년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대책 세부과제의 예상 감축효과는 총 2,730,418톤 CO2eq., 소요예산은 총 352,252백만원으로 집계됨.
- 감축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에너지전환·산업(68.3%)이며, 다음으로는 농축산 부문(15.2%), 흡수원 부문(7.0%) 순으로 나타남.
- 감축량 달성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농축산 부문(226.4%)이며, 다음으로는 흡수원 부문(106.7%), 수송 부문(102.7%) 순으로 나타남.
- 소요예산이 가장 많은 부문은 수송 부문(29.4%)이며, 다음으로는 농축산 부문(29.0%), 흡수원 부문(19.3%) 순으로 나타남.

(단위: 톤CO<sub>2</sub>eq, %, 백만원)

부문	목표감축량 (기본계획)	감축 실적 (점검 결과)	감축 비율	소요 예산
계	2,562,272	2,730,418	106.6%	352,252
에너지전환·산업	1,874,327	1,864,211	99.5%	40,736
수송	138,408	142,183	102.7%	103,400
건물	120,190	115,619	96.2%	16,478
농축산	183,245	414,846	226.4%	102,278
폐기물	66,842	2,328	3.5%	20,818
흡수원	179,260	191,231	106.7%	67,814
정책 기반	-	-	-	728

〈표 106〉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비율 : 2024년 기본계획 목표감축량 기준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2022년 전북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연도 및 전년도(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흡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43%)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주류화를 통

해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며, 행정 주도가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함.

- 흡수원의 경우 통계산정의 안정도가 높지 않아 지자체의 경우 연차별 증감 폭이 큰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4년 전북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수행한 결과 세부과제 달성률은 90%, 목표감축량 대비 달성률은 106.6%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연 및 미달성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 폐기물 부문의 감축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폐기물처분 부담금 수납액 매년 변동하고 산정시점과 평가시점 불일치 등 정량적 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고됨.

## 7. 2030년까지 개선(감축) 목표

### ○ 기준치

- 전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 연도는 2018년으로 설정하였음.
- (시범지표 기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매년 산정결과에 따라 변경됨)  
(보조지표 기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5,756 천톤CO<sub>2</sub>eq.

### ○ 목표치

- 전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3% 감축으로 설정하였음.
- (시범지표 목표) 2018년 대비 2030년 43% 감축  
(보조지표 목표) 2018년 대비 2030년 43% 감축(목표 순배출량 14,685천톤천톤CO<sub>2</sub>eq., 목표감축량 9,465 천톤CO<sub>2</sub>eq.)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 기본계획 이행평가 간 지표 해석 체계 정비 필요

- 본 지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배출량 통계와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평가를 병행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 산정 시점과 이행평가 시점 간 시차 및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해석에 한계가 있음.

- 향후에는 시차를 고려한 지표 해석 체계를 적용하여 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2024년 기본계획 이행평가 결과는 2024년 인벤토리 배출량 통계가 발표되는 시기(2026년 말 초안작성 예상)에 추가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음
- 부문별 감축 실적 편차를 고려한 정성적 평가 보완 검토
  - 농축산·흡수원·수송 부문은 목표 대비 감축 실적이 양호한 반면, 폐기물 부문은 감축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그러나, 폐기물 부문의 감축비율이 낮은 이유는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 시 감축 원단위 미인정에서 기인한 것임
  - 이에 따라 정량 성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여부, 관리 성과 등을 포함한 정성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기초 연계 이행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 성과 관리 고도화 검토
  - 2026년부터 14개 시군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인 만큼, 광역 차원에서 공통 지표 정의, 산정 기준, 점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시군 간 감축 성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지연·미달성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정책과 예산에 환류되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정의

- 인벤토리 : 국가 또는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원별 배출량 목록과 통계 시스템을 의미함.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온실가스 : 지구 대기에 존재하며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장파장의 지구 복사 에너지)을 흡수하고 재방출하여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체상의 물질
  - 7대 온실가스 종류

종류	주요 특징 및 발생원
이산화탄소(CO2)	-화석연료 연소(석탄, 석유, 가스), 산림파괴.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음.
메탄(CH4)	-천연가스 생산/운송, 가축(반추동물), 폐기물 매립지, 논 등
아산화질소(N2O)	-농업용 비료 사용, 화석연료 연소, 산업공정
수소불화탄소(HFCs)	-에어컨 및 냉장고 냉매, 발포제
과불화탄소(PFCs)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알루미늄 생산
육불화황(SF6)	-전기 개폐기 등 고전압 전기 장비의 절연 가스
삼불화질소(NF3)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세정 가스

<표 107> 7대 온실가스 종류

- 총배출량 : 특정 기간 한 국가, 지역 또는 기업에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한 모든 온실가스의 총합
  - 순배출량 : 총배출량에 산림 등의 LULUCF 분야에서 흡수한 양(CO2 흡수원)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배출량
- LULUCF :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한 분야로, 토지 이용(Land Use) 및 토지 이용 변화(Land-Use Change)와 임업(Forestry)을 의미
  - LULUCF 부문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이용의 변화가 온실가스의 흡수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는 분야
  - LULUCF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서 유일하게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하는 부문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다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야(에너지, 산업, 농업, 폐기물)는 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을 다루지만, LULUCF는 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하여 저장하는 흡수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독특함.

-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자에게 그 처분량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책
- CO<sub>2</sub>eq : 이산화탄소 환산톤(Carbon Dioxide equivalent Ton)의 약자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들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CO<sub>2</sub>)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나타낸 측정 단위
  - 지구온난화지수(GWP) : CO<sub>2</sub>를 1로 기준했을 때, 다른 온실가스 1톤이 100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수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14-1-1. 인공어초시설 금액 및 면적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14번째 목표인 '해양생태계 보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을 목표로 함.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4번째 목표인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확대하고 해양생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요구되며, 이 중 하나가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되는 인공어초의 시설임.
- 우리나라에서 인공어초는 1971년부터 저인망 등에 의한 불법어업 방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처음으로 시설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어초와 여러 재료를 사용한 어초가 개발되어 전국 연안에 시설되고 있음.
- 인공어초 투하는 연안 바다목장, 해중림(바다숲) 조성,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공어초는 해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부착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소형 어류 및 정착성 어류의 먹이사슬이 형성됨으로써 자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특히, 해조류의 부착 서식을 용이하게 하는 인공어초의 시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의 서식량을 확대함으로써 해양생물의 다양성 유지 및 해양산성화를 억제할 수 있음.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14-1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 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 으로 관리한다.	14-1-1	인공어초시설 금액(백만원) 및 면적(ha)

〈표 108〉 UN-SDGs 체계 속의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14-2-1 인공어초 시설면적'을 분석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인공어초 시설금액 및 면적은 2020년에 27.16억원, 176ha, 2021년에 27.17억원, 160ha, 2022년에 27.17억원, 168ha, 2023년에 26.87억원, 168ha, 2024년에 27.17억원, 176ha로, 평균 27.11억원과 169.6ha이었으나, 2025년은 각각 15% 감소한 22.95억원과 25% 감소한 128ha이었음.
- 전국 연안 시도의 5년간(2019~2023년) 평균 시설금액은 27.21억원으로, 동일시기의 전북특별자치도의 평균 시설금액 26.39원보다 많았음.
- 전국 연안 시도의 5년간(2019~2023년) 평균 시설량은 76.2ha로, 동일 시기의 전북특별자치도의 평균 시설량 166.4ha보다 90.2ha가 적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공어초 시설면적이 매우 많았음.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인공어초의 시설비는 2000년부터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연안 시도는 점차 감소시키는 추세임.
- 해양에 인공어초의 시설은 각 연안 시도의 해양면적 및 인공어초 시설가능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므로 전북도의 연간 인공어초 시설비 및 시설면적의 증감 비율로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하는 것이 타당함.
- 인공어초 시설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초어장 관리, 해중림 조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지표로 평가할 것을 권장함.
- 지표 이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액 여부로 평가할 것을 권장함.

<b>목 표</b>	<b>14. 해양생태계 보전</b>			
<b>세 부 목 표</b>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b>지표명</b>	14-2-1 인공어초 시설금액 및 면적(ha)			
<b>필요성 및 의의</b>	<p>-인공 구조물인 인공어초를 투입함으로써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확대하고 바다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임.</p> <p>-인공어초가 시설된 어장은 시설되지 않은 어장에 비해 약 2~3배의 어획량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p>			
<b>지 표</b>	<b>정의</b>	<p>-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바다 밑에 시설하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콘크리트, 철재(강재), 세라믹 등으로 제작하며, 자연석이나 폐선박을 활용하기도 함.</p> <p>-인공어초의 시설면적은 8ha를 1개 단지로 설정하고, 용도에 따라 어류용, 패류 및 해조류용, 해중림용 등으로 구분함.</p>		
	<b>산출 논리</b>	<p>-인공어초의 시설은 해양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전국 연안 시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p> <p>-전국 연안 시도의 평균 인공어초 시설면적을 평균 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p>		
	<b>자료원 또는 출처</b>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산정 방법	인공어초시설 금액(백만원) 및 면적(ha)
	<b>작성 방법</b>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통계를 결합		
	<b>현황</b>	<p>-전북의 최근 3년간('22~'24년) 평균 시설비 및 면적은 2,707.0백만원, 170.7ha이었고, '25년에는 2,295백만원(15.2% 감소), 128ha (25% 감소)이었음.</p> <p>-전국 연안 시도의 최근 3년간('21~'23년) 평균 시설비 및 면적은 2,447.2백만원, 67.2ha이었음.</p>		
	<b>기준치</b>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인공어초 시설비 및 시설면적의 평균값	목표치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인공어초 시설비 및 면적의 평균값 이상
	<b>자료 경로</b>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산자원공단	지표 관리 부서	<p>-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p> <p>-전북지속협 환경위원회</p>

〈표 109〉 '14-1-1 인공어초시설 금액 및 면적'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인공어초에는 다양한 해조류가 부착하여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조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 줌으로써 해양생물의 서식처 및 은신처 등의 역할과 더불어 불법 어업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음.
- 모든 연안을 갖는 지자체는 바다 환경의 개선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의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어초어장 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해양생태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평가함.
- 인공어초의 시설면적 확대는 해양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업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척도임.

### (2) 지표의 정의

- 인공어초시설 지표는 해양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주로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 및 정책 평가에 활용
- 시설 금액은 투입된 자원(돈)을 나타내고, 시설 면적은 조성된 물리적 공간(어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가. 인공어초의 정의

- 인공어초란 일명'물고기 집'으로 불리며,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을 좋게 하려고 바다 밑에 설치하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콘크리트, 철재(강재), 세라믹, 자연석 등으로 제작하며, 폐선박 등을 활용하기도 함.
- 인공어초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어류용 어초(어류의 산란 및 성육에 효과가 입증된 어초), 패조류용 어초(패류의 번식 및 성육과 해조류의 부착 및 서식에 효과가 입증된 어초), 어패류용 어초(어류 및 패류용 어초의 복합기능으로 효과가 입증된 어초), 해중림 어초(해조류의 부착·서식 및 인공종자의 이식·보식이 가능하고, 해조류 확산 효과가 입증된 어초) 등으로 구분됨.

#### 나. 인공어초의 시설 금액

- 지표에서 명시한 인공어초 시설금액은 제작 및 시설금액을 합한 것으로, 인공어초의 제작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용도에 따라 1개 단지의 면적이 다르므로 인공어초 시설을 위한 투자금액(시설비)을 평가함.

#### 다. 인공어초 시설 면적

- 인공어초 시설면적은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라 어류용 및 어패류용 어초는 8ha를, 해조류용 및 패조류용 어초는 2ha를 1개 단위로 단지화하여 집중 시설함.
- 1개 단지는 어류용 및 어패류용 어초의 경우 800㎡ 이상으로 집중 시설하고, 해조류용 및 패조류용 어초의 경우 500㎡ 이상으로 평면으로 시설함.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인공어초 시설통계, 2024.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자료확인
-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어초 설치현황」 및 업무보고에서 자료확인

#### 나. 자료수집방법

- 해당 자료 중 인공어초 시설통계(2024)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간한 인공어초 시설통계(홈페이지 : <https://fira.or.kr>)로 연도별 지역별 시설면적 및 시설비를 발취
-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어초 설치 현황(2025)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fira.or.kr>)에서 발취
- 2025년 인공어초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발취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인공어초시설 금액(시설비)

- 인공어초의 시설금액은 제작비 및 시설비를 포함한 것으로 전북의 투입 예산으로 산정하되, 바다숲 사업 등에 포함되는 인공어초 시설은 제외함.
- 타 연안 시도와의 인공어초 시설금액 비교를 통해 지표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인공어초 시설비 = 최근 3년간 전북도 평균 인공어초 시설비(백만원) - 당해 연도 전북도 인공어초 시설비(백만원)

<표 110> 인공어초 시설비 산식

## 나. 인공어초 시설 면적

- 인공어초의 시설면적(ha)은 어초시설 단지를 기준으로 제시된 면적을 산정함.
- 전북도 연안의 인공어초 시설 적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시설 면적으로만 산정함.
- 인공어초는 타 연안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지표를 산정함.

※ 인공어초 시설면적 = 최근 5년간 전국 연안시도의 평균 시설면적(ha) - 당해 연도 전북도 인공어초 시설면적(ha)

〈표 111〉 인공어초 시설면적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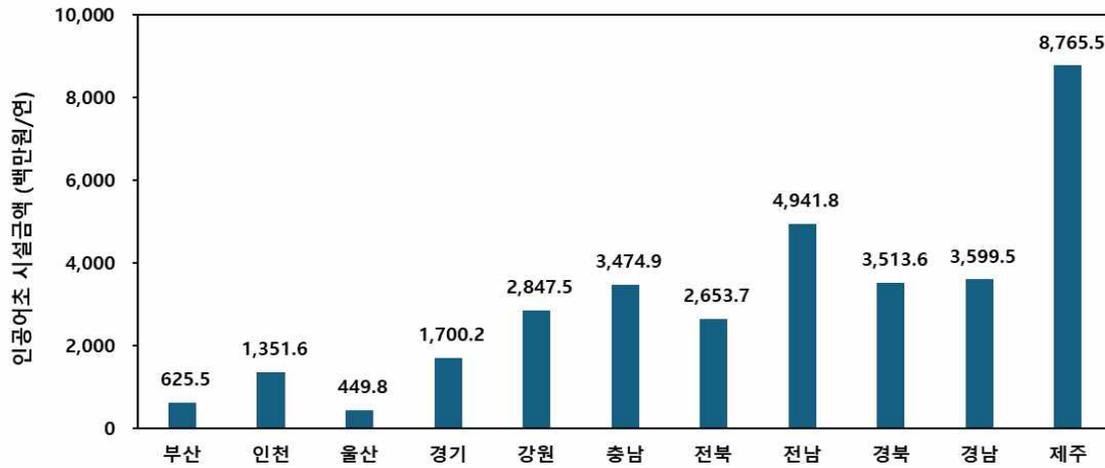
### (1) 전국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금액(2014~2023년)

-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간한 인공어초 시설 통계에 의거 작성됨.
- 최근 10년간 평균 인공어초 시설금액은 제주(8,765.5백만원), 전남(4,941.8백만원), 경남(3,599.5백만원), 전북(2,653.7백만원, 7위) 순이었음.

(단위 : 백만원)

시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평균
계	40,891	42,011	36,395	37,528	33,185	35,874	32,594	29,682	26,940	24,136	33,923.6
부산	850	850	850	850	850	905	1,100	0	0	0	625.5
인천	1,651	1,458	1,355	1,130	723	911	1,599	1,529	1,581	1,579	1,351.6
울산	655	625	625	519	482	294	483	483	332	0	449.8
경기	2,641	3,946	2,097	2,491	1,636	1,600	1,185	797	409	200	1,700.2
강원	3,663	1,225	3,738	3,738	3,663	3,486	974	5,171	1,606	1,211	2,847.5
충남	6,198	3,609	3,487	4,258	3,660	3,059	2,762	2,697	2,647	2,372	3,474.9
<b>전북</b>	<b>2,819</b>	<b>3,125</b>	<b>2,500</b>	<b>2,756</b>	<b>2,144</b>	<b>2,716</b>	<b>2,636</b>	<b>2,648</b>	<b>2,546</b>	<b>2,647</b>	<b>2,653.7</b>
전남	3,818	5,139	5,490	5,443	4,786	7,176	6,398	4,987	3,840	2,341	4,941.8
경북	3,767	4,300	4,375	3,743	3,716	3,750	3,570	372	3,725	3,818	3,513.6
경남	6,752	5,932	3,221	2,500	3,010	3,110	3,436	2,905	2,897	2,232	3,599.5
제주	8,077	11,802	8,657	10,100	8,515	8,867	8,451	8,093	7,357	7,736	8,765.5

〈표 112〉 인공어초 시설 금액(2014년~2023년)



〈그림 27〉 전국 시도별 2014~2023년 기간동안의 연간 평균 인공어초 시설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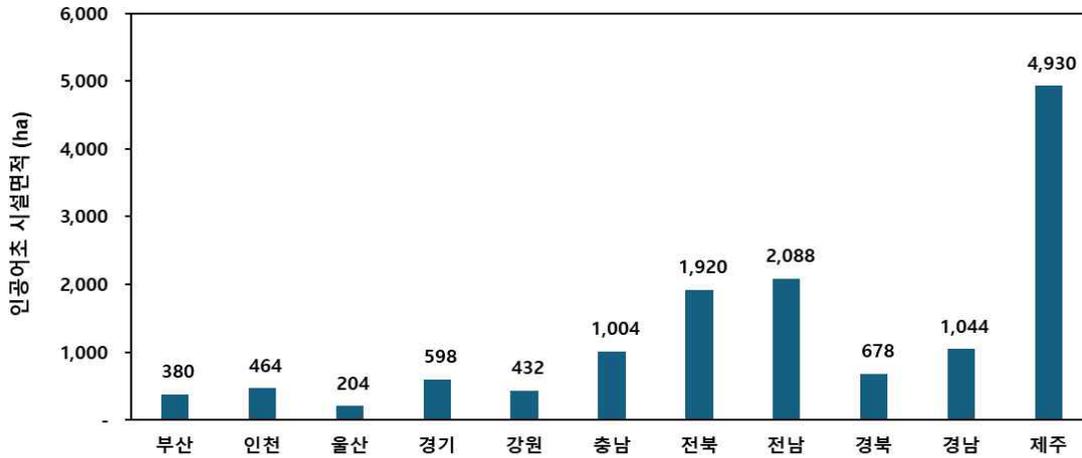
(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어초 시설 면적

- 최근 10년간 총 시설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4,930ha), 전라남도(2,088ha), 전북특별자치도(1,920ha) 순이었음.

(단위 : ha)

시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계	12,942	2,790	1,196	1,204	966	1,338	1,088	824	776	618	23,742
부산	48	56	56	64	48	60	48	-	-	-	380
인천	128	52	42	44	34	12	22	50	28	52	464
울산	68	20	16	24	16	16	16	16	12	-	204
경기	196	188	70	44	16	38	14	14	10	8	598
강원	108	32	74	52	52	36	6	34	24	14	432
충남	356	94	100	102	52	88	62	52	68	30	1,004
<b>전북</b>	<b>368</b>	<b>368</b>	<b>112</b>	<b>128</b>	<b>112</b>	<b>160</b>	<b>176</b>	<b>160</b>	<b>168</b>	<b>168</b>	<b>1,920</b>
전남	280	400	178	160	158	340	236	136	116	84	2,088
경북	156	148	80	52	52	48	40	4	58	40	678
경남	238	210	28	62	62	136	106	82	76	44	1,044
제주	996	1,222	440	472	364	404	362	276	216	178	4,930

〈표 113〉 전국 시도별 2014~2023년 기간 동안 인공어초 총 시설 면적



〈그림 28〉 전국 시도별 2014~2023년 기간 동안 인공어초 총 시설 면적

-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공어초 시설규모는 약 170ha, 2,717 백만원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은 급격히 감소하여 128ha를 시설하고, 2,295 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함.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시설면적(ha)	176	160	168	168	176	128
시설갯수(개)	22	713	1,161	1,358	2,200	1,640
시설비(백만원)	2,716	2,717	2,717	2,687	2,717	2,295

〈표 114〉 전북특별자치도의 2020~2025년 인공어초 시설면적, 시설갯수 및 시설금액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시설금액은 약 2,717백만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은 2,295백만원으로 약 16%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시설면적은 169.6ha로, 2025년 128ha에 비해 41.6ha 24.5% 감소
  - 인공어초시설은 전북도 연안의 시설가능 적지를 판단한 후 어초를 시설하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점차 가능 적지가 감소하고,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시설면적이 감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시설면적은 감소하나, 투입예산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입 예산을 보조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7.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 기준치

- 최근 전국 연안 시도의 인공어초 시설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전북의 3년간 평균 시설금액을 기준치를 설정하고, 보조지표로 시설면적을 산정하며, 참고 자료로 전국 연안 시도의 인공어초 시설금액 및 시설면적을 산정함.
- (시범지표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 평균 인공어초 시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타 연안 시도의 최근 3년간 인공어초 시설금액 참고)  
(보조지표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간 평균 인공어초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타 연안 시도의 최근 3년간 인공어초 시설면적 참고)

### ○ 목표치

- 전북의 최근 3년간 평균 시설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시범지표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의 3년간 평균 인공어초 시설금액 이상(전국 연안 시도와의 비교 순위 참조)  
(보조지표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의 3년간 평균 인공어초 시설면적 이상(전국 연안 시도와의 비교 순위 참조)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지속가능성

-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투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0년부터 전액 지방비 투입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타 지자체의 경우 사업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 ◆ 용어 정의

### ○ 인공어초

- 해양생물의 좋은 서식 환경을 위해 바다에 설치하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콘크리트, 철재(강재), 세라믹, 자연석 등으로 제작하며, 폐선박 등을 활용하기도 함.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14-4-1. 전북 수산 종자 방류 금액 및 방류량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14번째 목표인 '해양생태계 보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을 목표로 함.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4번째 목표인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확대하고 해양생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요구되며, 이 중 하나가 인공 수산종자의 방류로 해양수산 자원의 증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어획, 매립·간척 및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가를 위해 인공적으로 생산한 종자를 방류하는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1976년부터 시작하였고, 1986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이외에도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수산종자 방류' 표준지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해수면 어종 61종, 내수면 어종 17종으로, 총 78종을 지정하였고, 어류를 포함하여 새우류, 게류, 조개류, 고둥류, 갯지렁이류, 해삼류 등 다양한 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인공 수산종자의 방류를 위해 방류장소 및 품종, 품종별 방류크기 및 시기, 방류금지 기준을 설정하고, 전염병 검사 및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건강한 종자를 방류하는 지침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방류한 인공종자는 유전자 정보 또는 표식을 활용하는 추적조사 이외에도 어업인들이 어획한 어종을 대상으로 방류어종의 생산량과 혼획률을 분석하는 방류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방류효과 분석을 통해 어종에 따라 1.1~3.8배의 경제효과가 있음을 발표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14-6-1 전북 수산 종자 방류금액 및 방류량

〈표 115〉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14-6-1 수산종자 방류량'을 분석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수산종자 방류금액은 2020년 1,809.7백만원, 2021년 1,868.2백만원, 2022년 1,872.0백만원, 2023년 2,354.1백만원, 2024년 1,870.8백만원으로, 평균 1,955.0백만원이었으나, 2025년은 약 4%가 감소한 1,871.5백만원이었음.
  - 보조지표로 사용한 전북의 방류량은 2020년 6,031 천마리, 2021년 6,225 천마리, 2022년 6,240 천마리, 2023년 7,847 천마리, 2024년 6,236 천마리로, 평균 6,516 천마리이었으나, 2025년은 약 4%가 감소한 6,238 천마리이었음.
  - 2023년을 제외하면 방류량과 방류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류량은 약 620만마리, 방류금액은 약 18.7억원이었음.
- 전국 시도의 8년간(2017~2024년) 연간 평균 방류량은 56,727천마리, 연간 평균 방류금액은 3,268.3백만원으로, 전북의 30,789천마리, 3,001.3백만원은 보다 더 많았음.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전국 단위의 시도별 방류량 및 방류금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방류종자관리시스템'은 시군 및 시도의 업무 담당자의 입력에 의한 자료로 신뢰성이 다소 낮음.
  - 또한, 새우류나 게류의 경우, 어류에 비해 방류크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방류량 집계시 시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인공종자 방류량 및 방류금액은 예산사업 만을 집계하므로, 도 소속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하여 방류하는 방류량과 도내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방류하는 방류량 및 방류금액은 집계에서 제외됨.
- 따라서, 타 시도와의 비교나 도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방류량과 방류금액은 제외하고, 도 예산사업으로 집행되는 방류량과 방류금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액여부로 평가할 것을 권장함.

목 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 부 목 표	14-6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지표명	14-6-1 전북 수산종자 방류 금액 및 방류량			
필요성 및 의 의	<p>-연안어장에서 과도한 어획, 매립간척,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감소한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어획량 증대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p> <p>-생물다양성 협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야생에 가까운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함.</p>			
지 표	정의	<p>-수산종자 방류는 인위적으로 생산한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개체만을 성장에 적합한 자연환경에 방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수산자원을 증가시킴</p> <p>-민간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수산종자를 확보된 예산투입하여 매입한 후 해수면 및 내수면에 방류하고, 방류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p>		
	산출 논리	<p>-종자방류는 감소하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어획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임.</p> <p>-전북은 3년간 평균 방류량과 방류금액을 기준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 및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p>		
	자료원 또는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산정 방법	인공종자 방류 금액 및 방류량
	작성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방류종자관리시스템 통계를 결합		
	현황	<p>-전북의 집계에 따르면, 3년간('22~'24년) 평균 방류금액 및 방류량은 각각 2,032.3 백만원, 6,774 천마리이었고, '25년의 방류금액 및 방류량은 1,871.5 백만원, 6,238 천마리이었음.</p> <p>-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방류종자관리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 최근</p>		

	3년간(22~24년) 평균 방류금액은 3,656.4 백만원, 평균 방류량은 68,520.6 천마리이었고, 전북의 평균 방류금액은 4,236.6 백만원, 평균 방류량은 30,743.7 천마리이었음.		
기준치	전북의 최근 3년간 평균 방류금액 및 방류량	목표치	전북의 3년간 평균 방류금액 및 방류량 이상
자료 경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산자원공단		지표 관리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전북지속협 환경위원회

<표 116> '14-4-1 전북 수산 종자 방류금액 및 방류량'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수산종자 방류는 과도한 어획과 환경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증대된 수산자원은 어업 생산량을 증가시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함.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 건강한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킬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펀드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별 지침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운영됨.
- 방류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일부 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생산되는 수정란을 민간 배양장에서 부화시켜 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방류함.
- 지역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지자체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인공종자를 자체적으로 방류하기도 함.
- 방류된 종자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경제성을 판단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 자료에 의하면 종에 따라 다르나 방류금액 대비 1.1~3.8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함.
- 따라서, 수산종자의 방류는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가 됨.

## (2) 지표의 정의

- 수산 종자 방류(Stock Enhancement) 지표는 수산자원의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지역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임.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 지표를 통해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입과 결과를 관리함.
- 방류 금액은 수산자원 증강 사업에 얼마나 많은 자원(돈)을 투자했는지 나타내는 투입 지표
- 방류량은 얼마나 많은 종자(개체 수)를 환경에 공급했는지 나타내는 물리적 성과 지표

## (3) 자료 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방류종자관리시스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자료확인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현황」 및 업무보고에서 자료확인

### 나. 자료수집방법

- 해당 자료 중 수산종자 방류량 및 방류금액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류종자관리시스템(홈페이지 : <https://seed.fira.or.kr>)'으로 연도별 지역별 방류량 및 방류금액을 발취

## (4) 지표산출 방법

### 가. 수산종자 방류금액

- 수산종자의 방류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확보한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방류금액은 제외함.

$\text{※ 수산종자 방류금액} = \text{최근 3년간 전북도 평균 방류금액(백만원)} - \text{당해연도 전북도 방류금액(백만원)}$
---

〈표 117〉 수산종자 방류금액 산식

### 나. 수산종자 방류량

-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 수산종자의 방류량(천마리)을 보조지표로 사용함.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방류량은 제외함.

※ 수산종자 방류량 = 최근 3년간 전북도 평균 방류량(천마리) - 당해연도 전북도 평균 방류량(천마리)

〈표 118〉 수산종자 방류량 산식

## 5. 지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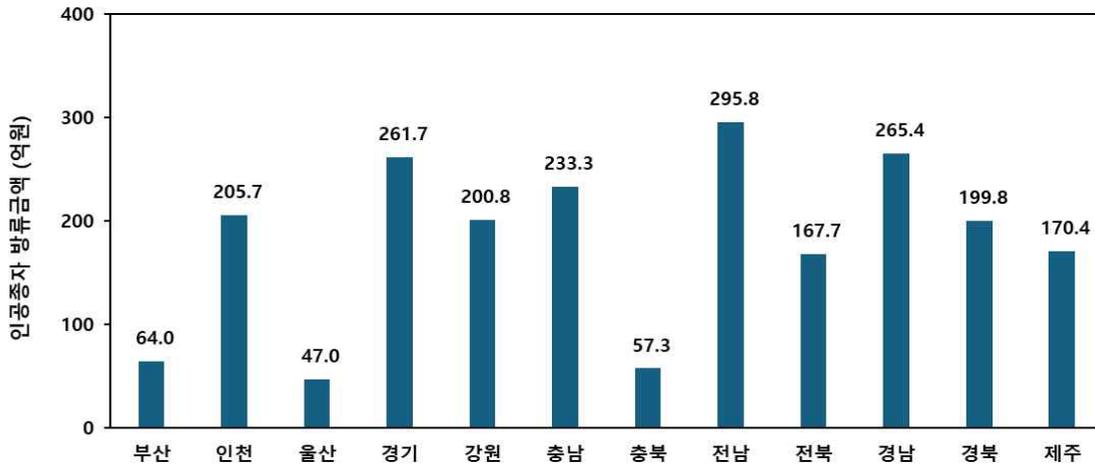
### (1) 전국 시도별 수산종자 방류금액

-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제공하는 방류종자관리시스템에 의거 작성됨.
- 최근 8년간 연간 총 방류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별 총 방류금액은 전라남도(295.8억원), 경상남도(265.4억원), 경기도(261.7억원) 순으로 나타남.
- 방류금액은 지자체의 수산세력과 자립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시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1,768.1	1,316.3	850.0	400.9	451.8	466.3	446.8	403.2
부산	5.7	4.5	11.7	12.3	12.3	14.3	13.6	11.5
인천	28.4	20.4	30.5	33.7	40.0	45.1	42.4	44.4
울산	13.1	10.5	10.1	10.0	9.1	9.0	9.1	9.8
경기	36.4	43.8	43.9	49.2	56.0	57.8	53.8	45.0
강원	19.4	26.3	39.7	40.3	39.6	35.0	46.2	39.7
충남	35.4	41.4	52.0	54.9	61.1	40.3	38.9	38.1
충북	11.7	7.2	7.8	8.8	10.2	11.5	14.3	12.6
전남	34.3	35.4	51.2	41.6	81.3	52.8	60.9	59.2
<b>전북</b>	<b>19.7</b>	<b>24.1</b>	<b>28.6</b>	<b>21.6</b>	<b>19.1</b>	<b>39.0</b>	<b>50.2</b>	<b>37.9</b>
경남	31.6	33.5	59.2	64.0	42.5	53.7	55.3	49.8
경북	18.0	35.9	38.6	38.6	35.8	72.7	24.1	28.6
제주	14.0	19.3	25.2	25.9	44.8	35.1	37.9	26.7

〈표 119〉 전국 시도별 2017~2024년 기간 동안 인공종자 총 방류금액



〈그림 29〉 전국 시도별 2020~2024년 기간 동안 인공종자 총 방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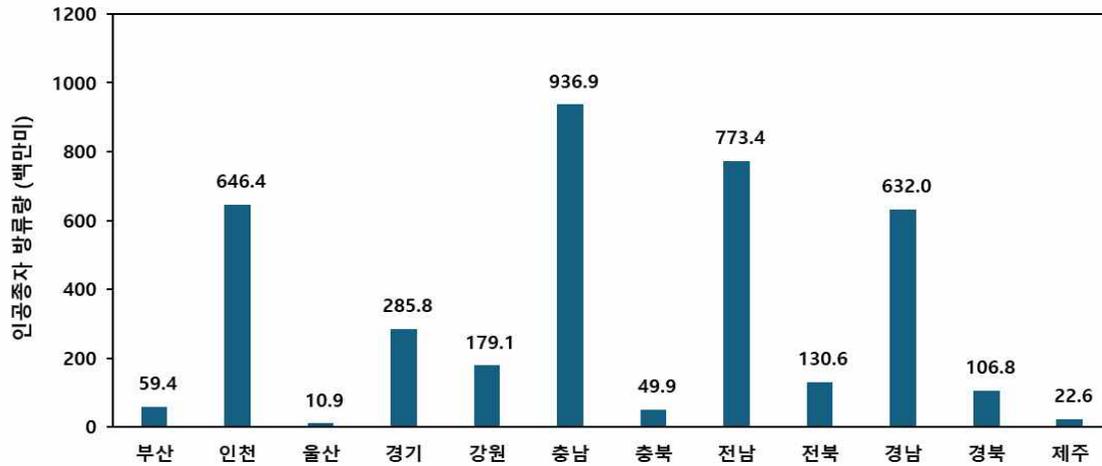
## (2) 전국 시도별 수산종자 방류량

-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제공하는 방류종자관리시스템에 의거 작성됨.
- 최근 8년간 연간 총 방류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별 총 방류량은 충청남도 (936.9백만마리), 전라남도(773.4백만마리), 인천광역시(646.4백만마리), 경기도 (632.0백만마리) 순으로 나타남.
- 방류량은 수산세력과 새우류나 게류 등 상대적으로 매입단가가 낮은 품종을 방류할 경우 높게 나타남.

(단위: 백만마리)

시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3,161.9	2,466.7	1,809.4	681.0	695.1	657.3	1,128.3	681.0
부산	17.1	1.1	17.1	13.9	9.4	12.3	11.3	12.5
인천	14.5	12.8	15.9	17.6	169.2	163.0	125.5	171.0
울산	2.5	1.7	2.2	2.0	2.6	2.5	2.2	1.5
경기	87.4	49.3	52.7	81.6	62.3	68.3	35.9	37.7
강원	28.5	25.0	36.9	36.0	39.2	35.5	39.1	29.3
충남	122.2	171.8	150.7	311.6	227.9	131.3	128.9	137.1
충북	4.0	7.9	7.1	7.0	8.3	11.7	11.4	11.5
전남	37.3	60.4	55.4	78.9	71.5	110.5	336.1	176.4
전북	43.8	42.3	29.6	16.8	21.5	26.9	34.1	31.2
경남	145.2	165.5	148.4	76.3	55.4	70.5	379.3	50.6
경북	6.5	18.4	20.8	26.4	21.7	20.5	19.9	18.4
제주	2.1	3.6	4.3	3.9	5.9	4.4	4.6	3.7

〈표 120〉 전국 시도별 2017~2024년 기간 동안 인공종자 총 방류량



<그림 30> 전국 시도별 2020~2024년 기간 동안 인공종자 총 방류량

(3)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금액 및 방류량(2020년~2025년)

-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산종자 방류금액은 가장 많았던 2023년 23.5억원을 제외하면 약 18억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산종자 방류량은 가장 많았던 2023년 7,847 천마리를 제외하면 약 6,200 천마리로 유사하게 나타남.
- 주요 어종은 해산어류인 감성돔, 넙치, 말쥐치, 조피볼락과 담수어류인 동자개, 메기 등이었고, 기타 해수종인 해삼과, 담수종인 참게, 다슬기 등이었음.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방류량 (천마리)	6,031	6,225	6,240	7,847	6,236	6,238
방류금액 (천원)	1,809,720	1,868,225	1,872,043	2,354,142	1,870,775	1,871,500
방류품종	넙치, 말쥐치, 동자개, 메기, 미꾸라지,뱀 장어, 붕어, 쏘가리, 잉어, 백합, 다슬기, 해삼,자라	넙치, 조피볼락,동 자개, 메기, 미꾸라지,뱀 장어, 붕어, 쏘가리, 잉어,백합,다 슬기, 자라	넙치, 말쥐치, 조피볼락,동 자개, 메기, 뱀장어, 붕어, 쏘가리, 잉어,백합,다 슬기, 해삼,자라	감성돔, 넙치, 말쥐치, 조피볼락,동 자개, 메기, 미꾸라지,뱀 장어, 붕어, 쏘가리, 잉어,참게,다 슬기	감성돔, 넙치, 말쥐치, 동자개, 메기, 미꾸라지,뱀 장어, 붕어, 쏘가리, 잉어,참게,다 슬기, 자라	넙치, 동자개, 메기, 미꾸라지,뱀 장어, 붕어, 쏘가리, 잉어,참게,다 슬기, 자라

<표 121> 전북특별자치도의 2020~2025년 인공종자 방류량, 방류금액 및 방류종자

## 6. 지표 결과에 대한 의견

- 최근 3년간(2020~2024년), 3년간(2022~2024년) 평균 방류금액 및 방류량은 각각 2,032.3백만원, 6,774천마리이었고, 2025년의 방류금액 및 방류량은 1,871.5백만원, 6,238천마리이었음.
- 2023년의 방류금액 증가로 3년간 평균 방류금액이 높았으나, 약 18.7억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방류량 역시 6.2백만마리로 일정하였음.
- 따라서, 지방비가 투입되는 수산종자 방류금액을 지표로 설정하고, 방류량을 보조 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7. 2030년까지 방류금액 개선 목표

### ○ 기준치

- 최근 전국 지자체의 방류금액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북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의 방류금액을 기준치로 설정하고, 보조지표로 방류량을 산정
- (시범지표)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전국 시도의 방류금액에 대한 전북도의 비율 참조)  
(보조지표)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량을 기준으로 산정(전국 시도의 방류량에 대한 전북도의 비율 참조)

### ○ 목표치

- 최근 3년간 수산종자 방류금액 및 방류량을 기준으로 유지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시범지표) 전북의 3년간 평균 수산종자 방류금액 유지 또는 이상(전국 시도의 방류금액에 대한 전북도의 비율 참조)  
(보조지표 목표) 전북의 3년간 평균 수산종자 방류량 유지 또는 이상(전국 시도의 방류량에 대한 전북도의 비율 참조)

## 8.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지속가능성

-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국비 투입액이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별도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방류금액을 유지하거나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산종자의 방류는 경제성이 높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

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민관협력을 통한 방류품종의 다양화 및 방류량 증가가 필요함.

#### ◆ 용어 정의

##### ○ 수산종자 방류의 정의

- 수산종자는 자연산 또는 양식산 수산동물의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한 후 부화시키고, 적절한 환경에서 다양한 먹이를 공급하면서 키운 어린 개체를 말함.
- 단, 방류는 인위적으로 생산된 수산종자를 바다·하천·호소 등에 풀어주는 행위를 말함.

##### ○ 수산종자의 방류금액

- 수산종자 방류금액은 지자체에서 민간 배양장으로부터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한 금액임.
- 방류금액은 품종에 따라 마리 당 매입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종자를 구입할 경우 방류량이 증가함.

##### ○ 수산종자 방류량

- 수산종자 방류량은 어류, 갑각류, 패류, 해삼류 등으로 모두 마릿수로 산정함.

#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환경위원회 시범지표 모니터링

## 15-4-1. 전북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 총평

#### 1. 목표 배경 및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2030의 17개 목표(Goals) 중 열다섯 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은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에 관점을 두고 있음.
-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도 육상과 내륙 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하며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삼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하며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불법 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하며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개발사업 등 인간 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목표를 설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생물환경 자원의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현황 파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멸종위기 생물종의 보호, 보전, 증식, 관리하는 목적으로 K-SDGs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7개의 세부목표와 10개의 지표를 작성함.
- SDGs 15번 목표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의 지표인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목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UN-SDGs	J-SDGs		
	세부목표		지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	15-4-1	전북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표 122〉 UN-SDGs 체계 속의 K-SDGs와 J-SDGs 지표

## 2.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세부목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를 이행하기 위한 지표로 '15-4-1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을 알아보았음.
- 전북지역의 관리나 보전에 대상인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가 미약하고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본 지표를 통하여 전북의 생물다양성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3. 지표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향

- 환경부는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 있으며, 27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22.12.9. 기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동식물은 471종이 지정되어 있음. (22.9.2. 기준)
- 도내 산야, 하천 및 새만금에서 멸종위기종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혹은 학계의 자료가 잘 반영되도록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목 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 부 목 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
지표명	15-4-1 전북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필요성 및 의 의	-전북특별자치도 생물환경 자원의 미래가치를 인식하고 현황 파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멸종위기 생물 종의 보호, 보전, 증식, 관리함.

지 표	정의	-환경부에서 야생 동식물의 멸종 방지를 위해 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중 -문화재청에서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지닌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중		
	산출 논리 및 난점	-산출 :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법정보호종 수로 함. -난점 : 환경부나 문화재청의 법정보호종 수는 조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사 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원 또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 계획 수립 연구 2020.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산정 방법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 법률로 보호 하도록 정한 야생동식물종 중 도내 서식종 -도내 생물자연 조사 및 보고서 혹은 활동기들의 기록 중
	작성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내 서식, 자생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의 시군별 종수 및 분포		
	현황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 279종(2022.12.9. 기준) I급 : 포유류(14종), 조류(16종), 어류(11종), 양서파충류(2종), 곤충류(8종), 무척추동물(4종), 육상식물(13종) II급 : 포유류(6종), 조류(53종), 어류(18종), 양서파충류(6종), 곤충류(21종), 무척추동물(28종), 육상식물(79종) -전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 85종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16종 II급 71종 -부안군이 40종 고창군 35종, 군산시 및 정읍시 각각 28종		
	기준치	2020년 기준 85종	목표치	2030년까지 87종
	자료 경로	-국립생태원 요청 -환경부 및 문화재청 등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지표 관리 부서

<표 123> '15-4-1 전북 서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에 대한 지표 모니터링 요약

## 4. 지표 개요

### (1) 지표의 의미

#### 가. 전북 내 법정보호종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 지수상에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1,300만 종의 생물종은 매일 70종씩 사라지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이 중에서 양서류가 가장 멸종된 위험이 높다고 함.
- 1970년 이후 지구상 척추동물의 약 60% 감소, 향후 가속화 전망
-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종풍부도(MSA)는 9% 감소 전망
- 생물종 감소에 따라 유전자 다양성도 더불어 감소 예측,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고유 생물종 멸종,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야생생물 보호관련 여건이 악화되어 있음.
- 한반도의 온대성 기후가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육지와 해성에서 동물의 서식지 이동, 습지 축소 등 생태환경 변화로 생물 다양성 감소 전망됨.
-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1차(생물다양성 보전), 2차(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자원 활용), 3차(야생생물 서식지, 보호관리 선진화)와 현재 '제4차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서식지 보전, 보호·관리 기반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22.12 기준) 국가생물종 목록상 자생생물은 58,050종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30,867종, △식물5,683종, △균류 및 지의류6,116종, △조류6,493종, △원생동물2,508종, △원핵생물4,309종이 분포하고 있음.

### (2) 지표의 정의

-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음.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79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35,870종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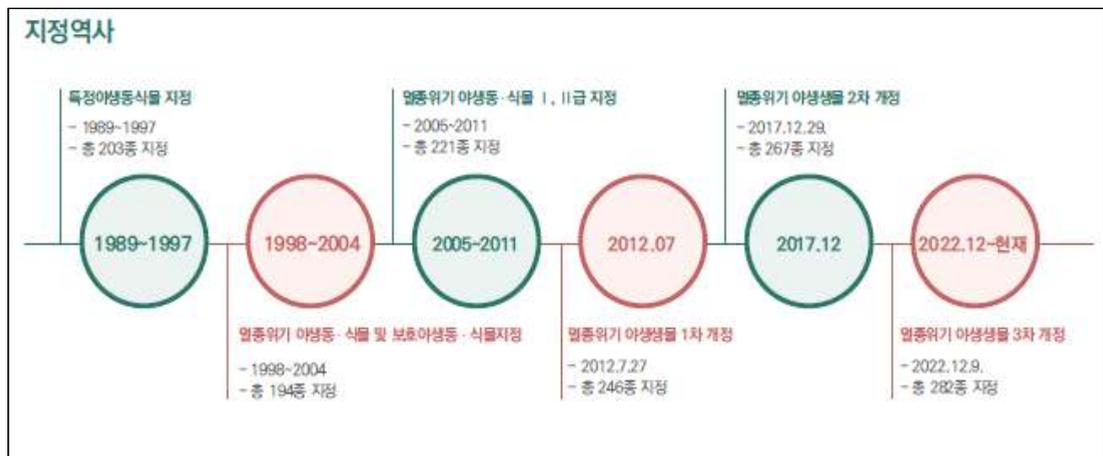
상 해양보호생물 88종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천연기념물 471종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에 따른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특별산림보호대상종 53종

※ 환경부

-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은 1989년부터 자연생태계 유지와 야생동·식물의 멸종 방지를 위해 특정 야생동·식물 92종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이석이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 보호종이라 할 수 있음
- 이후 명칭과 종 수가 여러차례 변경되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변경되었고, 2012년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 있음.



<그림 31>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계자료집 2023, 지정 역사

- 2022년 12월 9일 개정기준으로 환경부에서 27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 관리하고 있음.



<그림 32>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종수의 변화

분류군	1989년	1993년	1996년	1998년		2005년		2012년		2017년		2022년	
				I급	II급								
포유류	-	-	-	10	7	12	10	11	9	12	8	14	6
조류	-	-	-	13	46	13	48	12	49	14	49	16	53
양서류·파충류	12	22	22	1	4	1	5	2	5	2	6	2	6
어류	-	-	24	5	7	6	12	9	16	11	16	11	18
곤충류	21	31	31	5	14	5	15	4	18	6	20	8	21
무척추동물	-	-	-	3	21	5	24	4	27	4	28	4	28
육상식물	59	126	126	6	52	8	56	9	68	11	77	13	79
해양류	-	-	-	-	-	0	1	0	2	0	2	0	2
고등교육류	-	-	-	-	-	-	-	0	1	0	1	0	1
소계				43	151	50	171	51	195	60	207	68	214
합계	92	179	203	194		221		246		267		282	

<그림 33>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종수의 변화(분류군별)

### (3) 자료수집 방법

#### 가. 자료원

- 전북특별자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0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나. 자료 수집 방법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최종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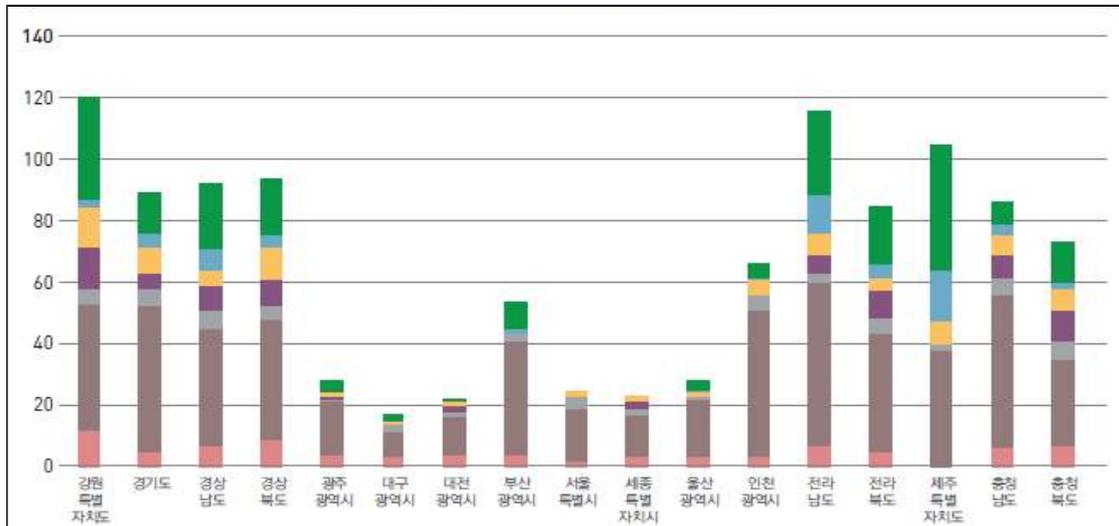
(4) 지표산출 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현재 전북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발견되는 종은 매우 희귀할 것으로 사료됨.
  - 만경강에 서식하는 황새 등 법정보호종에 추가될 가능성은 높으나 타 몇종들의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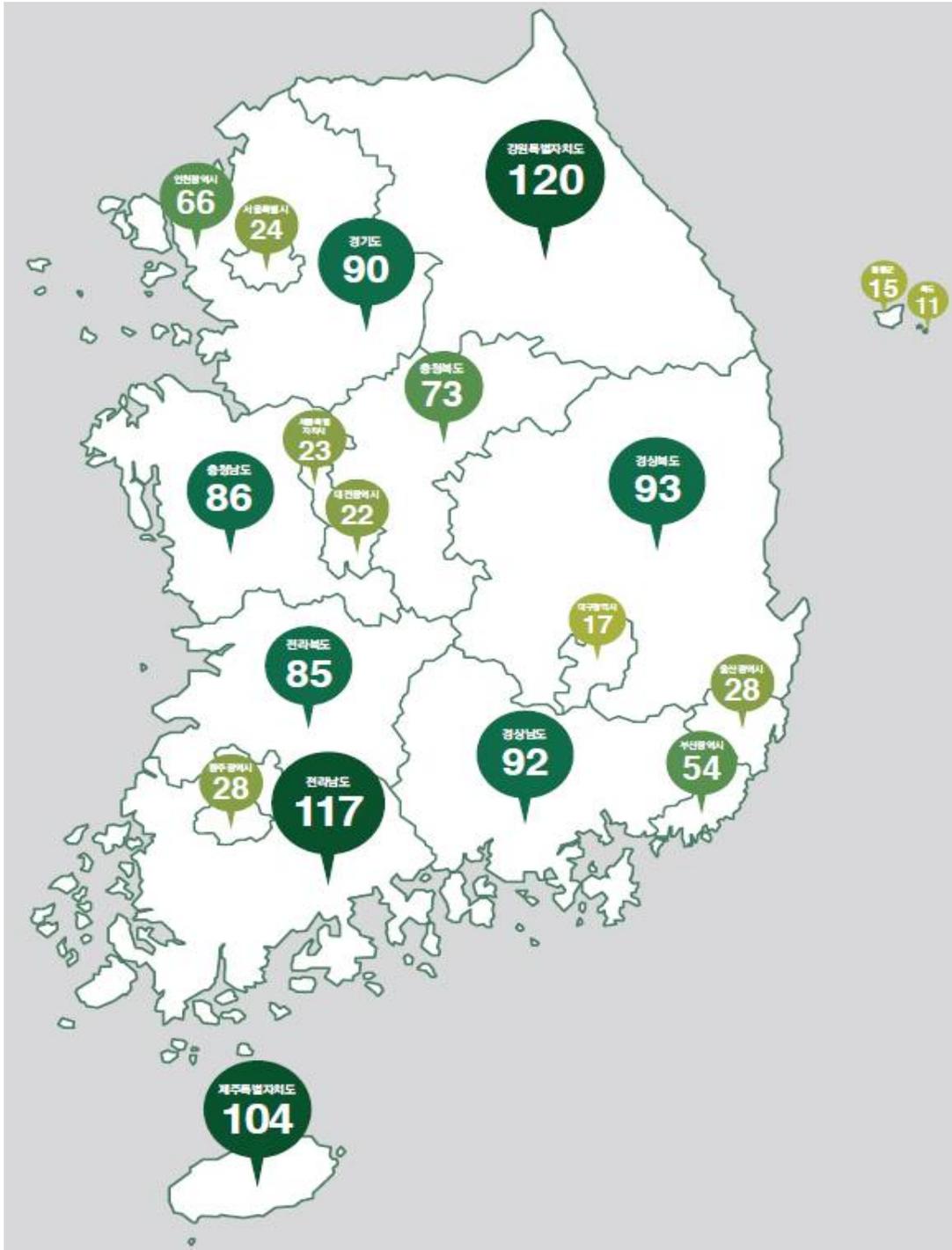
5. 지표분석 결과

(1) 전국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2017~2021년)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멸종위기야생생물 통계자료집에 의거
- 가장 많은 종수는 강원도(120종), 전라남도(117종), 제주도(104종) 순 전북특별자치도는 85종임.



<그림 34> 시도별 분포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 (2017년~2021년)



〈그림 35〉 전국 시도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년~2021년)

	강원 특별 자치도	경기도	경상 남도	경상 북도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	대전 광역시	부산 광역시	서울 특별시	세종 특별 자치시	울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전라 남도	전라 북도	제주 특별 자치도	충청 남도	충청 북도
포유류	12	5	7	9	4	3	4	4	2	3	3	3	7	5		6	7
조류	41	47	38	39	17	8	12	37	17	14	19	48	53	39	38	50	28
양서·파충류	5	6	6	4	1	3	2	3	4	2	1	5	3	5	2	6	6
어류	14	5	8	9	1		2			2			6	8		7	10
곤충류	13	9	5	11	1	1	1		1	2	1	5	7	5	7	6	7
무척추동물	2	4	7	3				1			1	1	12	4	17	4	2
육상식물	32	13	21	18	4	2	1	9			3	4	28	19	39	7	13
해조류	1														1		
고등균류	1	1											1				
<b>총합계</b>	<b>120</b>	<b>90</b>	<b>92</b>	<b>93</b>	<b>28</b>	<b>17</b>	<b>22</b>	<b>54</b>	<b>24</b>	<b>23</b>	<b>28</b>	<b>66</b>	<b>117</b>	<b>85</b>	<b>104</b>	<b>86</b>	<b>73</b>

<그림 36> 시도별 분포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II (2017년~2021년)

## (2) 전북지역 여건

- 전북권의 면적 8,069km<sup>2</sup>으로 남한 면적 대비 약 8%를 차지함.
- 지역 여건은 전북지방환경청 관할로 전북특별자치도는 6개시, 8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은 4개(변산반도,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가 포함됨.
- 100m 이하 평지가 전체 면적의 51%, 100~500m 산지 약 33%, 500m 이상이 16%로 평야지대가 많음.
- 전북권의 도서는 102개(유인도 25개, 무인도 77개), 해안선은 577.1km

### 가. 야생 동·식물 현황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8개 분류군 8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전북권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6~2008, 2010~2013) 50종 1,483지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2014~2019) 49종 66지점
-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2002~2004, 2009, 2013) 29종 160지점
-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

- 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6종, Ⅱ급은 71종 확인
- 지자체별 부안군이 40종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 35종, 군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28종 확인됨.
- 포유류 총 7종(담비,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삿, 수달, 하늘다람쥐)
- 조류는 총 31종(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매,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새매, 새호리기,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잣빛개구리매, 저어새, 조롱이, 참매, 참수리,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흰목, 물떼새)
- 어류 총 8종(감돌고기, 다묵장어, 돌상어, 모래주사,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큰줄납자루, 통사리)
- 양서 파충류 총 6종(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수원청개구리, 표범장지뱀)
- 무척추동물 총 5종(귀이빨대칭이, 대추귀고둥, 두드럭조개, 염주알다슬기, 흰발농게)
- 곤충 총 8종(꼬마잠자리, 닳무늬길앞잡이, 대모 잠자리, 물방개, 물장군, 비단벌레, 수염풍뎅이, 참호박뒤영벌)
- 식물 총 21종(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광릉요강꽃, 구름병아리난초, 날개하늘나리, 노랑붓꽃, 대홍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세뿔투구꽃, 솔붓꽃, 순채, 으름난초, 전주물꼬리풀, 진노랑상사화)
- 균류 1종 (화경버섯)

#### 나. 전북 내 지표 현황

-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8개 분류군 8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전북권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등으로 확인

\*전국자연환경조사(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분포조사(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 자연자원모니터링(국립공원) 자료

구 분	종 수			지점 수		
	합계	I 급	II 급	합계	I 급	II 급
전체	87	16	71	2,307	640	1,667
고창군	35	4	31	177	12	165
군산시	28	6	22	146	28	118
김제시	23	4	19	98	19	79
남원시	24	5	19	265	82	183
무주군	15	4	11	121	49	72
부안군	40	6	34	313	42	271
순창군	20	5	15	149	69	80
완주군	18	3	15	159	57	102
익산시	15	3	12	53	10	43
임실군	18	4	14	273	96	177
장수군	19	3	16	140	38	102
전주시	16	4	12	41	16	25
정읍시	28	5	23	162	44	118
진안군	25	5	20	210	78	132

〈표 124〉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자체별 종 수와 분포 지점 수

구분	종 수	종 목록	
		I 급	II 급
고창군	35	노랑부리백로, 매, 비단벌레, 수달	가시연,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노랑부리저어새, 다목장어, 닳무늬갈아잡이, 대추귀고동, 매화마름, 맹꽁이, 물방개, 물수리, 백양더부살이,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삿, 새매, 새호리기, 석곡,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염주알다슬기, 진노랑상사화,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흰목물떼새, 흰발농게
군산시	28	귀뺨대창이, 노랑부리백로, 매, 수달, 수원청개구리, 저어새	가시연, 각시수련,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대모잠자리, 독미나리, 맹꽁이, 물고기, 물범,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삿, 매새,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표범장지뱀
김제시	23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가시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금개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담비, 대모잠자리, 맹꽁이, 물고사리, 붉은배새매, 삿,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순채, 조롱이, 큰고니, 큰기러

			기, 흰목물떼새
남원시	24	감돌고기, 노랑부리백로, 모래주사, 수달, 입실납자루	꼬마잠자리, 가시연, 다목장어, 담비, 돌상어, 무산쇠족제비,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세뿔투구꽃, 솔붓꽃, 수리부엉이, 올빼미, 참매, 큰말뚝가리, 하늘다람쥐, 흰목물떼새
무주군	15	감돌고기, 광릉요강꽃, 반달가슴곰, 수달	가시오갈피나무, 구렁이, 날개하늘나리, 담비, 돌상어,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샓, 양비둘기, 조롱이, 흰목물떼새
부안군	40	귀이빨대칭이, 노랑부리백로, 매, 비단버레, 수달, 저어새	가시연,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금개구리, 까막딱다구리,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붓꽃, 대추귀고둥, 매화마름, 맹꽂이, 물고사리, 물방개, 물수리, 물장군, 부안종개,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샓, 새매, 새호리기, 석곡,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꼬리마도요,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화경버섯, 흰목물떼새, 흰발농게
순창군	20	두드럭조개, 매, 모래주사, 수달, 입실납자루	구렁이, 다목장어, 담비, 대흥란, 백운란,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진노랑상사화, 큰줄납자루, 흰목물떼새
완주군	18	감돌고기, 수달, 통사리	가시연, 구렁이,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다목장어, 담비,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조롱이, 참매, 큰고니, 흰목물떼새
익산시	15	수달, 수염퐁텐이, 수원청개구리	가시연, 금개구리, 맹꽂이, 물고사리,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임실군	18	모래주사, 수달, 입실납자루, 참수리	가시연, 다목장어, 담비, 물방개,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솔붓꽃, 조롱이, 참매, 큰말뚝가리, 큰줄납자루, 흰목물떼새
장수군	19	감돌고기, 매, 수달	구름병아리난초, 남생이, 다목장어, 담비, 복주머니란,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세뿔투구꽃, 솔붓꽃, 올빼미, 조롱이, 참매, 하늘다람쥐, 흰목물떼새
전주시	16	감돌고기, 수달, 수원청개구리, 통사리	가시연,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잿빛개구리매, 전주물꼬리풀, 흰목물떼새
정읍시	28	귀이빨대칭이, 매, 수달, 입실납자루, 참수리	가시연,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붓꽃, 다목장어, 담비, 대흥란, 독수리, 맹꽂이,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염주알다슬기, 조롱이, 진노랑상사화, 참호박뒤영벌,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큰줄납자루, 팔색조, 흰목물떼새
진안군	25	감돌고기, 모래주사, 수달, 입실납자루, 통사리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꼬마잠자리, 다목장어, 담비, 돌상어,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샓, 새매, 새호리기, 솔붓꽃,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으름난초, 조롱이, 참매, 큰말뚝가리, 흰목물떼새

〈표 125〉 전북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자체별 종 목록

## 6. 2030년까지 개선 목표

### ○ 기준치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 : 279종 (2022.12.9.기준)
  - I급(68종) : 포유류(14종), 조류(16종), 어류(11종), 양서파충류(2종), 곤충류(8종), 무척추동물(4종), 육상식물(13종)
  - II급(211종) : 포유류(6종), 조류(53종), 어류(18종), 양서파충류(6종), 곤충류(21종), 무척추동물(28종), 육상식물(79종)
- 전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2017~2021) : 85종
  - △포유류 7종 △조류 31종 △양서파충류 6종 △어류 8종 △곤충 8종 △무척추동물 5종 △식물 21종 △고등균류 1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6종 II급 71종
- 부안군이 40종 고창군 35종, 군산시 및 정읍시 각각 28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시도별 분포 현황으로 가장 많은 지역 순은 강원도(120종), 전라남도(117종), 제주도(104종), 경상북도(93종), 경상남도(92종), 경기도(90종), 충청남도(86종), 전북특별자치도(85종)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67종(I급 60종, II급 207종)을 지정·관리
  - : 포유류는 총 7종(담비, 무산쇠족제비, 물범, 반달가슴곰, 삿, 수달, 하늘다람쥐)
  - : 조류는 총 31종(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매,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새매, 새호리기, 솔개,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잣빛개구리매, 저어새,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흰목물떼새)
  - : 어류는 총 8종(감돌고기, 다묵장어, 돌상어, 무래주사,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큰줄납자루, 통사리)
  - : 양서·파충류는 총 6종(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꽂이, 수원청개구리, 표범장기뱀)
  - : 무척추동물은 총 5종(귀뺨대칭이, 대추귀고동, 두드럭조개, 염주알다슬기, 흰발농개)
  - : 곤충류는 총 8종(꼬마잠자리, 닳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물방개, 물장군, 비단벌레, 수염풍뎅이, 참호박뒤영벌)
  - : 야생식물은 총 21종(광릉요강꽃, 암매, 가시연, 각시수련, 날개하늘리, 노랑붓꽃, 대홍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물고사리,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석곡,

세뿔투구꽃, 솔붓꽃, 순채, 으름난초, 전주물꼬리풀, 제주고사리삼, 지네발란, 진로  
랑상사화)

## ○ 목표치

-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수에 대한 가감이 진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변화로 인한 야생생물의 보전 및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의 생물들은 늘어나는 추세임.
-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생태계 환경에서 존재하는 보호종의 보호 및 보전이 중요하고, 또 다른 보호종을 발견해 가는 것도 중요함.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법정보호종 85종을 잘 보전하고 환경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동·식물계에 각각 1종씩 혹은 그 이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목표) 전북특별자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 법정보호종 수 : 87종

## 7. 지표 향상을 위한 제언

- 전북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관리 및 데이터 구축
  - : 보호종이 서식하는 습지, 산림, 하천 등 핵심 서식지의 주기적 실태조사
  - : 지역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생태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법정보호종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민관의 정보 공유
  - : 국립생태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지리산, 덕유산 국립공원, 새만금환경청, 군의 생물자원보전시설, 및 야생동식물을 모니터링 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서식 현황 정보를 공유해야 함.

◆ 용어 정의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I급) 혹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 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II급)
- 천연기념물 :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지닌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으로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 법정보호종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 등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보호하는 생물



함께한 사람들

Part

IV

함께한 사람들

2025

• 정책위원회



• 사회위원회



• 사회위원회 실천사업



• 경제위원회



• 경제위원회 실천사업



• 환경위원회



- 환경위원회 실천사업



- 사회/경제/환경위원회&전북연구원 지표 회의(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전략 및 계획 연구용역)

- 사회위원회&전북연구원



- 경제위원회&전북연구원



- 환경위원회&전북연구원(1차)



- 환경위원회&전북연구원(2차)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 공유회



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J-SDGs)  
시범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JeonBuk state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홈페이지 : [www.jbcSD.org](http://www.jbcSD.org) | 전화 : 063-232-3543  
이메일 : [jbcSD@daum.net](mailto:jbcSD@daum.net) | 팩스 : 063-288-3543